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 ▶ 책임연구원 : 홍영란(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현영섭(경북대학교·교수)

발 간 사 ■ ■ ■

2013년 발표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표개발 및 시민역량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국제시민성·시민교육연구(ICCS)와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수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3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 위주의 1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ICCS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2차년에는 ICCS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인간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2차 결과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에서는 누락된 인지영역의 시민역량 조사문항을 포함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행동영역의 변인 간 영향관계를 파악함과 아울러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3차년도인 2013년에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영역별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아시아지역 설문지(ICCS 2009)를 이용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051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영역별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으로 2016년 (IEA/ICCS) 제2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에 공동 조사 및 연구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정책대안이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과 글로벌 시민역량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4-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 정책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3-34-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 2013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3-34-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교육 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수)

국 문 초 록

최근 한국사회의 발전이 물리적·경제적 조건의 성숙과 함께 삶의 질, 행복,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도덕적 의식과 규범 준수, 비리 척결 등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의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비체계적이고 충분한 기반이나 제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비민주적 운영 풍토 등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연구로서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주시민의식 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및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며,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의견조사, 국제회의 및 세미나, 전문가 협의회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미흡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1·2차년도 통계분석 결과를 재분석하였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황과 지원체계 분석을 위한 문헌 분석도 실시되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 수준 또는 기관 수준에서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6개, 국외 5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기관 종사자와의 면담과 면담내용 분석도 함께 진행되었다. 더불어 정책방향과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조사 및 분석도 실시되었다. 의견조사에는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국제학술대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국내외 사례 선정 및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된 현황 및 지원 체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기는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었으나 비체계적이고 제한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1차년도와 2차년도 보고서 내용을 재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은 사회적·정치적 권리, 선거권, 정치적 항의 권리와 방식, 연줄에 의한 공무처리 반대, 정부의 민주성, 정치인 및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의식을 보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의 필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상위 연령층과의 소통 등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험 학습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성도 강조되어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두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강의나 교육으로만 민주시민역량이 강화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역량을 발휘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이는 유사하게 지적되어 학교생활에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과를 강화 또는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하여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중앙기구마련,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과 편성, 민주시민교육 활동 학점 인정제가 제안되었다.

셋째, 학교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정규교과의 민주시민교육 교수방법 적용, 학교 농작물 재배 및 나눔 프로그램 운영, 모의 선거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보존 활동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넷째,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는 학교 외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기관 인증 및 학점 연계, 학교-지역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민주시민역량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제어: 민주시민역량,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과 편성, 학점 인정제,
민주시민 포탈사이트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그 동안의 발전 전략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즉, 물리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기초하는 발전 전략에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한 발전 전략의 모색이 그것임.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참여, 사회법규 준수, 정치 참여, 상호 신뢰와 호혜성 등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음.
- 발전 전략의 변화와 새로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체계적 모습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 전체에서의 변화 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더욱 많이 지적되고 있음. 학교 밖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역시 일부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구축과 실제적인 지원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관련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의 경우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나 과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3차년도 연구는 당초에 계획된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여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음.
-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주시민의식 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및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며,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함으

로써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설정됨.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사례 분석, 의견 분석, 분석,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여, 전문가협의회 실시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음. 문헌 연구는 민주시민역량 강화 및 교육과 관련된 학술 연구 자료,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자료, 1차년도와 2차년도 보고서 재분석을 위한 1·2차 보고서 자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사례분석에서는 전문가 추천 및 문헌 연구를 통하여 우수 사례로 인정된 국내 6개, 외 5개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국내 사례에는 학교의 경우 애월고등학교, 풍납중학교, 작전초등학교의 사례가 포함되었고,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성미산학교, 유비지역아동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음. 해외의 경우에는 학교 영역에 미국의 Project Citizen 프로그램과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포함되었고, 평생교육기관 영역에는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독자상담 및 독서정보 프로그램,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포함되었음. 사례 분석을 위한 틀에는 배경 및 목적, 추진체제, 정책 및 사업 내용, 성과, 정책적 시사점의 5개 요소가 포함되었음. 사례 분석을 위하여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사례 대상 기관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장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음.
- 의견 분석에서는 정책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민주시민역량 관련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음. 총 73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51명이 응답하였음. 의견조사 설문지는 민주시민역량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과 정부, 학교, 지역사회 혹은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 그리고 기타 정책 과제에 대하여 서술형의 응답을 묻는 문항 8개로 구성되었음. 조사된 의견은 2개의 대분류(문제점과 정책 과제)와 5개의 중분류(근본적인 문제점,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문제점, 정부의 정책과제, 학교의 정책과제, 지역사회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의 정책과제)에 의하여 분석되었음.

-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여의 경우 제 37차 PCC 연차 학술회의(Annual Pacific Circle Consortium Conference)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 비교’라는 주제로 연구 진행 단계의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피드백을 받아서 연구에 반영하였음. 또한 전문가 협의회 역시 연구 진행 과정, 사례 분석 대상 선정, 정책 방안 및 정책 과제 도출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활용하였음.

3. 주요결과

1) 1·2차년도 연구 재분석 결과

- 1차 연구(김태준·이영민, 2011)와 2012년 2차 연구(김태준·이영민, 2012)에서 제시된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실증 자료 분석 결과가 분석 결과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실시되어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재분석 과정을 거쳤음. 분석 방법은 한국과 다른 국가를 비교하는 부분과 한국 자체에서의 민주시민하위 역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음.
- 분석결과, 우수한 역량으로는 사회적·정치적 권리, 선거권, 정치적 항의 권리와 방식, 연줄에 의한 공무 처리, 정치인 및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인식 등이었음. 반대로 낮은 수준의 역량으로는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이나 정신적 성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부족, 상위연령층과의 소통 등이 포함되었음.

2)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결과

- 국내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실태를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분석의 범주는 학교, 학교 밖 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이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 비정규교육, 국가의 각종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입법부, 사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한 현황 자료와 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이런 분석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전달기구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3)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였음. 우수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추천, 관련 문헌에서의 소개 등의 검토 과정이 진행되었고 국내 6개, 국외 5개의 사례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후 사례의 인터넷 및 문헌 자료 수집·분석, 사례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음.
-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담기구의 필요성, 학생 자치 활동 강화, 생활 속의 주제를 체험과 경험의 형태로 교육, 민주시민역량 중 선택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활용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더불어 사례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관련 내용 역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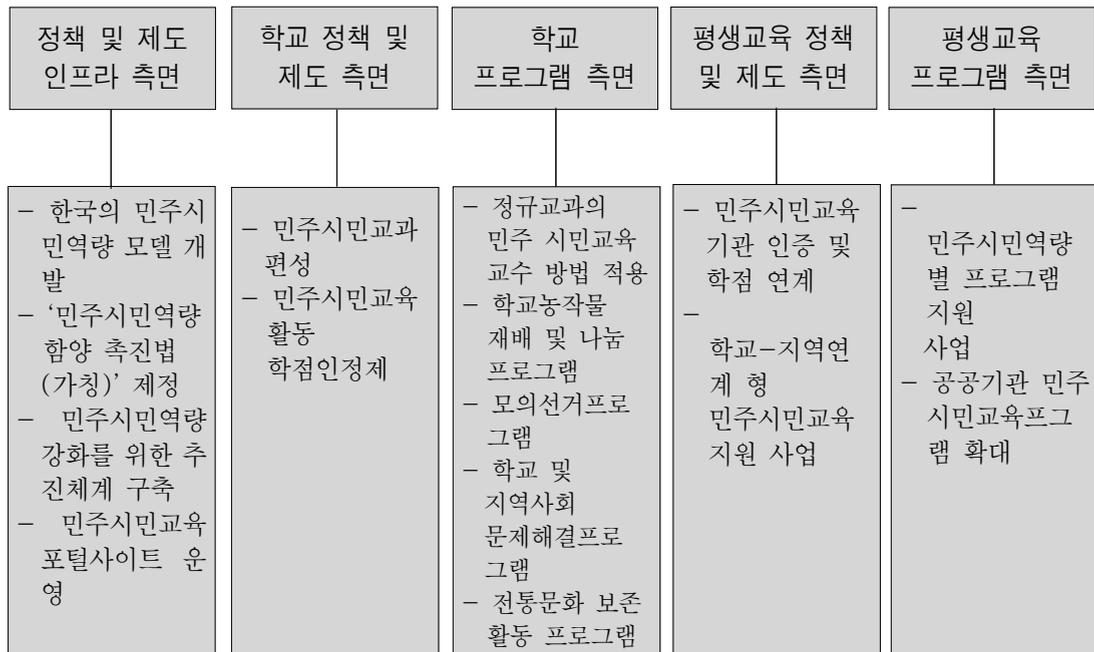
4)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분석 결과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음. 의견조사 대상자는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였으며 총 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중 51명이 응답하였음. 의견조사 설문지는 민주시민역량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과 정부, 학교, 지역사회 혹은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 그리고 기타 정책 과제에 대하여 서술형의 응답을 묻는 문항 8개로 구성되었음.
- 51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학교의 비민주적 환경,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관한 문제 등의 의견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정부, 학교, 지역사회 및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운영 확대 또는 강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고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체제 정비 필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활동의 학점인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 정책제언

- 다양한 분석 결과 및 연구진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였음. 총 5개의 영역에서 15개의 정책 방안 및 과제가 제시되었음. 5개 영역은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학교 프로그램 측면,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이었음.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체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방안과 과제가 제시되었음. 그리고 다른 영역은 학교와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 다시 정책 및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음.



【그림 1】 정책 방안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은 학교나 평생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과 관련된 영역임. 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였음. 구체적으로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중앙기구마련,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등이 제안되었음.
-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민주시민교과를 제작하여 편성하거나 학교 밖의 민주시민활동이나 교육에 참여를 학점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학교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정규교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또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정규교과에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주요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토론 등의 민주적 방식이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연극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함. 그 외에도 학생 자치 활동 강화, 체험중심의 방법 활용 확대, 농작물 재배 및 나눔 프로그램 운영, 모의 선거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보존 활동 프로그램 등도 정책과제로 제안됨.
-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는 민간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하기 쉽지만 질적 관리, 지역상황 반영, 학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이 과제로 지목되었음. 이를 위하여 학교 외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 기관 인증 및 학점 연계, 학교-지역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이 제안되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술되었음. 구체적으로는 민주시민역량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10
II.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개념	31
1.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의미	15
2.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20
III. 민주시민역량의 한국 및 국제 수준 분석	73
1. 분석 개요	39
2.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44
3. 민주시민역량 국제 수준	59
4. 정책적 시사점	84
IV.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39
1. 분석 개요	95
2. 정부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96
3. 민간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13
4. 정책적 시사점	117
V. 민주시민역량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분석	121
1. 분석 개요	123
2. 국내 우수사례 분석	125
3. 해외 우수사례 분석	177
4. 정책적 시사점	220

VI.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 분석	2
1. 분석 개요	225
2. 분야별 문제점	227
3. 분야별 정책 과제	236
4. 정책적 시사점	250
VII. 민주시민역량 함양 교육지원 정책방안 및 과제	32
1.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256
2.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261
3. 학교 프로그램 측면	264
4.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269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	272
참고문헌	277
부 록	289
부록 1. 국내외 학술사례 면담	291
부록 2. 의견조사 설문지	293

표 목 차

<표 II-1> SCCBS 사회적 자본 구성 요인 및 설문 내용	26
<표 II-2> IEA의 CIVED 민주시민역량 구성	31
<표 II-3> IEA의 ICCS 민주시민역량 구성	33
<표 II-4> IEA의 ICCS 민주시민역량 구성(2009)	34
<표 II-5>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측정 변수 구성	35
<표 III-1> 1,2차년도 보고서 민주시민역량 항목의 분류	41
<표 III-2>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ICCS)	45
<표 III-3>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아시아 모듈)	47
<표 III-4>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정의·행동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49
<표 III-5>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기본역량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50
<표 III-6> 시민 참여 인지영역의 한국 내 수준 비교	52
<표 III-7> 시민 참여 정의·행동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53
<표 III-8> 시민 참여 기본역량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54
<표 III-9> 시민 정체성 인지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55
<표 III-10>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58
<표 III-11> 시민 정체성 기본역량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59
<표 III-12>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ICCS)	63
<표 III-13>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아시아 모듈 요인1)	65
<표 III-14>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아시아 모듈 요인 5, 요인 7)	68
<표 III-15>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정의·행동 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ICCS)	71

<표 III-16> 시민참여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73
<표 III-17> 시민 참여 정의·행동 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76
<표 III-18> 시민 정체성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아시안 모듈 요인2)	79
<표 III-19> 시민 정체성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아시안 모듈 요인4, 요인6)	81
<표 III-20>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ICCS)	82
<표 III-2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국내)	85
<표 III-22>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국제)	86
<표 IV-1> 국내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대상	95
<표 IV-2> ‘가사토’ 네트워크 참여기관 유형별 빈도	100
<표 IV-3> ‘가사토’ 주제유형별 프로그램 수 및 수강인원	101
<표 IV-4> 경제상황별 ‘가사토’ 프로그램 수강인원	101
<표 IV-5> 2013년 ‘학교문화 연구·선도 학교’ 유형	102
<표 IV-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제공서비스	105
<표 IV-7>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2013년 기준)	106
<표 IV-8> 대전 흥룡초등학교의 ‘청림의 날’ 프로그램	108
<표 IV-9>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청소년대상 교육과정(2013)	109
<표 IV-10> ‘어린이국회’ 추진체계	111
<표 IV-11> 2012년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현황	114
<표 IV-12> YMCA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 사업	116
<표 V-1> 민주시민역량 국내외 사례 분석 대상	124
<표 V-2> 창송 Time 프로그램 예시	129
<표 V-3> 풍납중학교 학생자치법정 구성 및 역할	136
<표 V-4> 풍납중학교 청소년법제관 제도 시행 사례	138
<표 V-5> 풍납중학교 학생자치법정 재판절차	140
<표 V-6>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초등 저학년 중점과제와 운영	156

<표 V-7>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초등 고학년 중점과제와 운영	157
<표 V-8>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중고등 학년별 주요 교육과정	160
<표 V-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동가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예시	174
<표 V-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예시	175
<표 V-11> 시티즌십 교육의 범위와 활동	175
<표 V-12> 시민의식 함양과 관련된 다른 능력과의 관련성	198
<표 V-13> 학습내용 구성요소	200
<표 V-1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과 학습내용 사례	200
<표 V-15>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범학교적 시민교육 학습 내용 사례	202
<표 VI-1> 정보분야 의견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226
<표 VI-2>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분류 범주	226

그림 목 차

【그림 I-1】 3차년도 연구 수정안	7
【그림 II-1】 사회적 자본 관련 민주시민역량의 효과로서 평생학습	16
【그림 II-2】 참여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에 관한 세 가지 모형	19
【그림 II-3】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파악을 위한 방법	21
【그림 II-4】 역량구조의 내면과 표면	28
【그림 II-5】 IEA 시민교육 연구모형	32
【그림 III-1】 1, 2차년도 보고서 재분석 절차	40
【그림 III-2】 강점 강화 방식의 정책 핵심 논의	89
【그림 III-3】 약점 보완 방식의 정책 핵심 논의	91
【그림 IV-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제공 체계	117
【그림 V-1】 애월고등학교 전체 조희 「창송 Time」	130
【그림 V-2】 애월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130
【그림 V-3】 풍납중학교 청소년법제관 제도 운영을 위한 교원 운영조직	135
【그림 V-4】 풍납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조직	136
【그림 V-5】 솔선·동행·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특징	146
【그림 V-6】 ‘윗물, 아랫물 프로그램’ 활동 예시	147
【그림 V-7】 ‘고운 말-마중물 프로그램’ 활동 예시	147
【그림 V-8】 ‘시나브로 프로그램’ 활동 예시	148
【그림 V-9】 ‘가는 말 오는 말 프로그램’ 활동 예시	149
【그림 V-10】 2011학년도 언어개선 프로그램 평가 결과	149
【그림 V-11】 성미산학교의 전경	152
【그림 V-12】 성미산학교의 추진체계	153
【그림 V-13】 성미산학교의 교실과 내부	154
【그림 V-14】 성미산마을의 협동조합 형태의 소공동체	160
【그림 V-15】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	178

【그림 V-16】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추진체제	179
【그림 V-17】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182
【그림 V-18】 미국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체제	186
【그림 V-19】 미국 일리노이주 2012대통령 모의선거 투표용지 표기법	188
【그림 V-20】 미국 일리노이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공지서 작성법	189
【그림 V-21】 미국 텍사스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 투표용지	190
【그림 V-22】 미국 텍사스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 개표용지	190
【그림 V-23】 개인의 시티즌십 발휘와 사회와의 관계	193
【그림 V-24】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분류	194
【그림 V-25】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추진체제	208
【그림 V-26】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209
【그림 V-27】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추진체제	214
【그림 V-28】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코모빌의 기능	215
【그림 V-29】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코모빌의 디자인	216
【그림 VII-1】 정책 방안 및 과제	22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관련 교육의 확대

(1)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발판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 강화 추세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물리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기초한 발전전략에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기초한 발전발판이 필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사회적 자본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발전을 토대로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고, 문화적 자본은 한국문화의 글로벌화, 대중문화·전통문화의 산업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역량은 사회적 자본의 한 영역으로 정치 참여, 지역사회 참여, 사회규범 준수 등 선진화된 시민행동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홍영란 외, 2006; 홍영란, 현영섭, 2009). 또한 사회공동체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의식 또는 역량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대 갈등, 성(性)차별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정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전선영, 2011). 즉,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덕성, 준법정신, 상호신뢰(전선영, 2011), 책임과 의무감, 사회적 가치 수용(Cogan, 2000),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시민의식(Schuller, 2002) 등은 강화되어야 할 민주시민의식 또는 역량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의 필요성과 확대

한국사회의 발전과 갈등 해소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또는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 중 하나로서 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OECD의 경우에는 SOL(Social Outcomes of Learn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 국가에서의 학습의 결과로서 민주시민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홍영란, 현영섭, 2009),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포함한 학습은 민주시민의식과 시민참여 향상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술적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실천 현장에서도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덕 교과와 개정교육을 통해 정규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이강빈, 2009) 하거나,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전선영, 2011; 조진만, 2010)하는 등에 대한 실천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1999년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에서는 교실풍토, 교실에서의 토론 등이 민주시민의식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각종 체험이나 활동중심의 교수방법 등도 민주시민역량의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일관된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홍영란, 현영섭, 2009).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영역까지도 민주시민의식 및 역량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토요일(이하 가사토)' 사업의 경우 60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3,857명을 대상으로 57개의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현영섭, 2013). 따라서 최근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정규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과 참여,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실천 등까지 포함하여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민주시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및 변화 필요

(1) 학교교육에서의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변화 필요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개편, 개별학교 수준에서의 교과편성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지식적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민주시민역량 향상에 중요한 제반 풍토와 활동에 대한 교육적 정책과 지원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김태준, 이영민, 2012). 결론적으로 민주시민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실에서의 학습풍토, 토론문화, 단위학교 내 학생 자치활동, 학부모 참여,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육, 적절한 교수방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평생교육과 연계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변화 필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등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가사토’ 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민주시민관련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성과 체계성에서 보완, 지역사회 수준에서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연계 등 평생교육 자체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적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현영섭, 2013). 동시에 평생교육과 정규교육(학교)의 관계 측면에서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단지 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협력, 학점이수 등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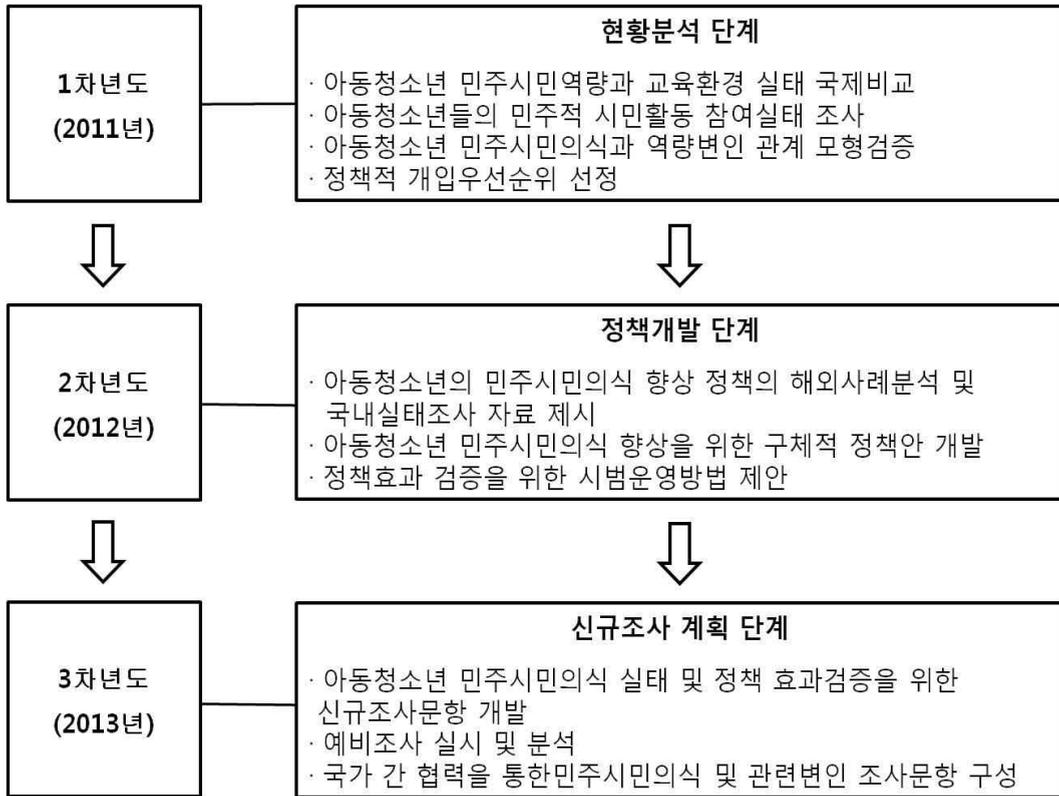
3) 1, 2차년도 연구의 한계점 보완 및 3차년도 연구의 주요 방향 설정

(1) 1, 2차년도 연구에 있어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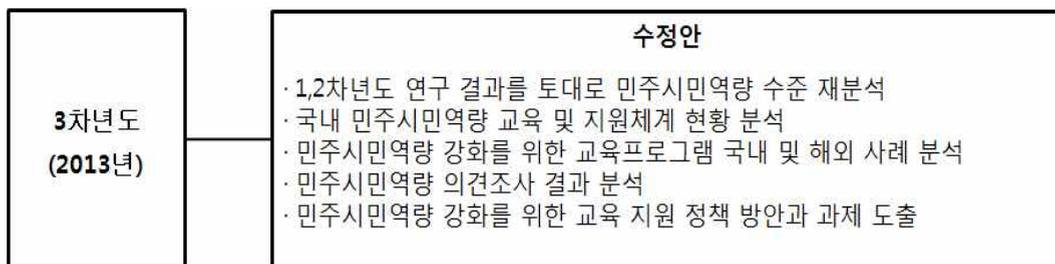
1, 2차년도 연구는 국제 및 국내의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인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시범운영안 등의 개발은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1차년도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목적이 청소년핵심역량진단조사 및 ICCS, WVS의 실증자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역시 정책대안의 제시와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1, 2차년도의 연구가 실증자료 분석에 치중되어 정책대안의 개발이 부족하였고, 추후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난 민주시민의식 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2) 3차년도 연구의 주요 방향

3차년도 연구는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 마련을 위해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주시민의식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책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국내 현황 분석,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의견조사 분석 등을 3차년도에 포함하였다.



【그림 I -1】 본 연구의 연차별 추진 계획 당초안



주: 3차년도 연구내용 수정은 위탁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요청에 의한 것임

【그림 I -2】 3차년도 연구 수정안

4) 연구의 목적

이상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3차년도 연구는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주시민의식 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및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며,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및 정책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기존 민주시민역량 분석 결과에 터한 한국 및 국제 수준의 정책적 재분석

2011년 1차 연구(김태준, 이영민, 2011)와 2012년 2차 연구(김태준, 이영민, 2012)에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실증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1, 2차년도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민주시민역량의 요소에 기초하여 기존의 연구보고서에서 분석된 민주시민역량 중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시민 참여, 시민정체성의 영역에 해당되는 역량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민주시민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역량인지를 평가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한국 자체 수준에서 민주시민역량들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역량을 찾는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도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역량을 찾는 분석을 하였다. 이런 분석과정을 거쳐 민주시민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우수한 역량으로는 사회적·정치적 권리, 선거권, 정치적 항의 권리와 방식, 연줄에 의한 공무 처리, 정치인 및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역량으로는 바림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이나 정신적 성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부족, 상위연령층과의 소통 등이 나타났다.

2)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앞서 1차와 2차 보고서 분석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항목별 현 수준을 파악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현 수준과 지원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국가의 각종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입법부, 사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한 현황 자료와 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전담기구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청소년에게 제한되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3)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국내사례를 분석하고, 민주시민역량 관련 정책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앞서의 분석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한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라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 장에서 이루어졌다. 사례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다시 학교와 학교 외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내 6개 사례와 국외 5개 사례를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하여 인터넷 자료, 관계자 면담 자료, 문헌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전담기구의 필요성, 학생 자치 활동 강화, 생활 속의 주제를 체험과 경험의 형태로 교육, 민주시민역량 중 선택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활용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사례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관련 내용 역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4)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정책과제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51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는 학교의 비민주적 환경,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관한 문제 등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부, 학교, 지역사회 및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운영 확대 또는 강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고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체제 정비 필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활동의 학점인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방안과 과제 도출

앞서 제시된 다양한 분석 결과 및 연구진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총 5개의 영역에서 15개의 정책 방안 및 과제가 제시되었다. 5개 영역은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학교 프로그램 측면,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이었다.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체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방안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은 학교와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 다시 정책 및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보고서 및 학술논문, 관련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를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시민 참여, 시민정체성의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인지 영역, 정의·행동 영역, 기본역량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동시에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 1차 연구(김태준, 이영민, 2011)와 2012년 2차 연구(김태준, 이영민, 2012)에서 분석한 결과를 본 연구의 민주시민역량의 분석틀에 따라 재분석하였다. 재분석은 한국 자체의 수준 분석과

다른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는 국제적 수준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분석방법으로 1차 연구와 2차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역량별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기술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현황과 지원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문헌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기타 문헌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이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고서 등(강영혜 외, 2011; 조찬례 외, 2011)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 사례 분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국내외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다시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사례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추천, 관련 문헌에서의 추천 등을 고려하여 국내 6개, 국외 5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교 영역에서 애월고등학교, 풍납중학교, 작전초등학교의 사례가 포함되었고,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성미산학교, 유비지역아동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학교 영역에 미국의 Project Citizen 프로그램과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포함되었고, 평생교육기관 영역에는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독자상담 및 독서정보 프로그램,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상의 사례를 선정하고 각종 관련자료, 비공식 문서, 내부 회의자료, 서적 및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언론 보도 기사,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의 체험방문기 등을 수집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요소로는 배경 및 목적, 추진체제, 정책 및 사업 내용, 성과, 정책적 시사점의 5개 요소가 활용되었다.

또한 문헌 자료 외에도 국내 사례의 경우 각 사례의 주요 관계자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하여 기관에 우선 연락을 취하여 면담대상자를 섭외하였고 면담 목적,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면담 시간 등에 대한 협의 후 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부록 2. 국내외 우수사례 면담지 참조).

3) 국제회의 및 세미나

제 37차 PCC 연차 학술회의(Annual Pacific Circle Consortium Conference)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 비교’라는 주제로 연구 진행 단계의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내용을 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그룹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4) 전문가협의회 실시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대한 논의, 민주시민역량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국내외 우수사례 선정,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시사점 논의, 기타 연구진행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연구주제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5) 관계자 의견분석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견조사 대상자는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였으며 총 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51명이 응답하였다. 의견조사 설문지는 민주시민역량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과 정부, 학교, 지역사회 혹은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 그리고 기타 정책 과제에 대하여 서술형의 응답을 묻는 문항 8개로 구성되었다. 조사된 의견은 2개의 대분류(문제점과 정책 과제)와 5개의 중분류(근본적인 문제점,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문제점, 정부의 정책과제, 학교의 정책과제, 지역사회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의 정책과제)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제 2 장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개념

1.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의미
2.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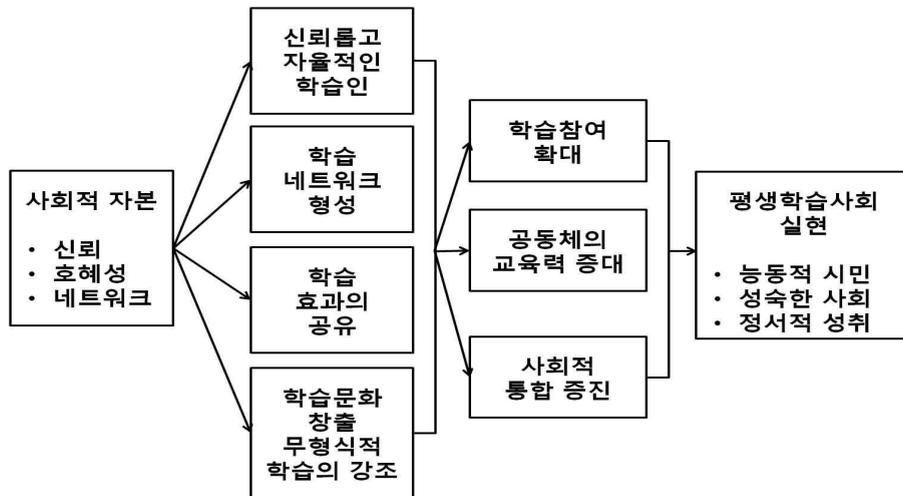
[제 2 장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개념]

1.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의미

1) 사회적 자본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의 역할과 중요성

민주시민역량의 내용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내용은 민주시민역량의 구성내용으로 활용되거나 포함되었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의 필요성과 의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의 역할이나 효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민주시민역량 중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등은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 된다. 즉,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각종 동아리 활동, 경험학습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학습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나 공동체 수준에서의 학습 및 참여의 시민행동을 발생시키는데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구혜정, 2002). 즉, 사회적 자본 형태의 민주시민역량은 학습에 꾸준히 참여하고 이를 공동체의 자산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역량 역시 신뢰, 관계성, 사회참여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홍영란 외(2006). p.63 재인용

【그림 II-1】 사회적 자본 관련 민주시민역량의 효과로서 평생학습

민주시민역량의 다른 측면에서의 역할과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관찰된다. 이 역시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민주시민역량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다. 신뢰나 시민규범, 시민가치관 등의 민주시민역량은 국민소득의 증가,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 범죄 수준의 하락, 정부 기관의 효과성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다(박희봉, 이희창, 2010; Aldridge, et al., 2002; Halpern, 2005; Putnam, 1993). 한국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로는 박희봉과 이희창(2010)의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시민의식을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측정하고 이를 경제역량, 제도역량, 정보역량에 대한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경제역량은 경제기반과 경제효율, 제도역량은 제도성숙과 제도순응, 정부역량은 정부효율과 정부부패였다. 경제역량의 경우 경제기반에 대하여 신뢰와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신뢰와 사회참여가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신뢰는 대인신뢰에 대한 측정이었고, 참여는 수직적 단체참여와 수평적 단체참여였다. 대인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의 공정성, 소득신고의 신뢰성으로 구성되었고 수직적 단체참여는 종친회 참여, 동문회 참여, 향우회 참여, 수평적 단체참여는 소비자 활동참여, 문화예술 단체 참여, 직능단체 협회 학회 참여, 봉사활동 참여, 지역 활동 참여, 전국적 시민단체 참여로 구성되었다. 경제역량은 실업문제 해결, 낮은 거래비용, 빈부격차 해소, 기업에 대한 정부간섭

배제를 구성요소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실업이나 빈부격차와 같이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에 대해서도 신뢰나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태의 민주시민역량의 긍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직적 단체참여의 경우 경제기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직적 단체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기반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직적 단체참여가 친족, 학연, 지연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줄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의 건강이나 지역사회의 건강, 사회복지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축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퍼트넘(2000)은 신뢰와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아동복지의 측정치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설명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 자본 형태의 민주시민역량이 강화될수록 국가 수준의 아동복지 수준이 50% 정도 이상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개인적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퍼트넘(2000)은 개인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또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알츠하이머나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수명연장이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개인 수준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의 건강 역시 사회적 자본 형태의 민주시민역량과 관련성이 있다. 사회참여와 관계의 구축 등이 높을수록 지역의 범죄율이나 아동학대의 비율이 낮아지는 실증적 연구들(Carcach & Huntley, 2002; Korbin & Coulton, 1997)이 보고되었다. 이는 민주시민역량이 발휘될수록 공동체 수준에서 협력과 신뢰, 상호감시와 공동체 방법 등의 사회적 범죄 저지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범죄와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Carcach & Huntley, 2002)에서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높은 지방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보고를 하였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강화는 사회참여로서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구성원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강화된 연계나 상호작용은 범죄에 대한 공동 방어나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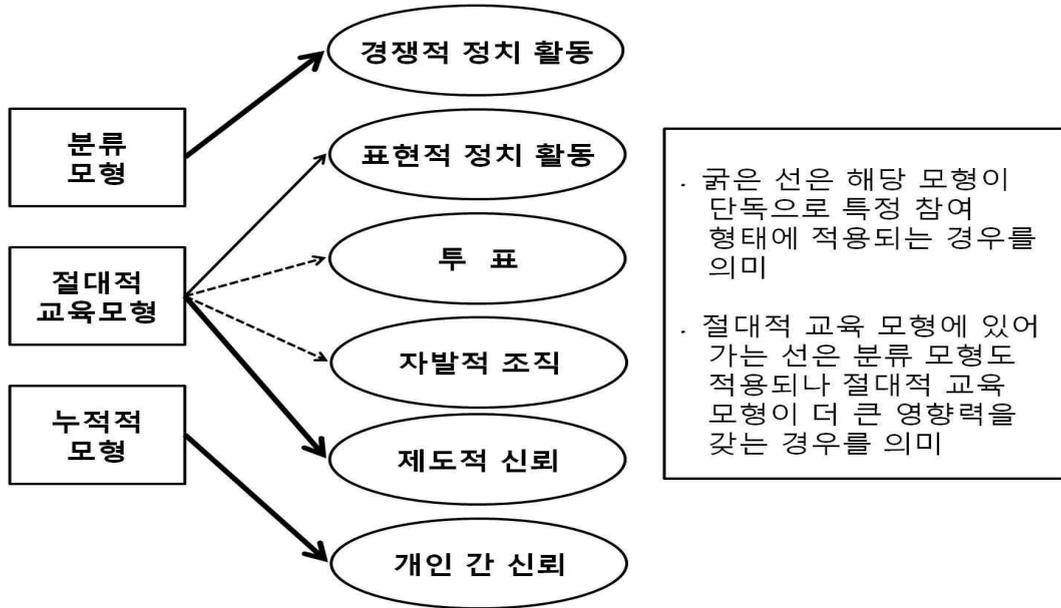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 형태의 민주시민역량은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 가치관 등으로 평생학습, 개인 건강, 사회복지, 사회적 건강 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결과들을 보다 강화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다.

2) 학습의 결과로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

교육학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교육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사회참여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참여에는 투표와 같은 정치적 참여와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사회참여를 시민적·사회적 참여(Civic and Social Engagement: CSE)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참여는 정치적 참여, 시민참여, 투표, 신뢰, 관용, 정치적 지식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사회참여는 긍정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캠벨(Campbell, 2006)은 교육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하여 교육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이 영향을 주는 사회참여의 형태가 차이가 있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교육의 형태는 분류 모형(sorting model), 절대적 교육 모형(absolute education model), 누적적 모형(cumulative model)이었다. 분류 모형은 교육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분류 모형에 따른 교육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달라지고 이런 차별적 교육 수준은 사회참여 수준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분류 모형에서 말하는 사회적 환경은 개인이 처한 경제적 차이, 계층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을 의미한다. 절대적 교육 모형은 각 개인의 교육 수준을 참여 형태를 결정하는 장치로 본다. 분류 모형은 사회참여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면, 절대적 모형은 사회참여의 형태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누적적 모형은 사회참여 정도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평균적 교육수준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보여준다(홍영란 외, 2006).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수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캠벨(2006)의 모형에서 각각의 교육 모형은 사회참여의 다른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캠벨은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자료 분석을 통해 절대적 교육 모형이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 투표, 봉사 단체에의 참여, 제도에 대한 신뢰 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분류 모형은 갈등 중심적인 정치 참여에 주로 적용되고, 누적적 모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홍영란 외, 2006).



* 출처: 홍영란 외(2008). p.25 재인용

【그림 II-2】 참여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에 관한 세 가지 모형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고 국제간의 비교를 다수 시도한 IEA의 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에서도 교육과 사회참여의 관계가 설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8개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이 시민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특히 교실풍토가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나 이해 그리고 실제 사회 참여와 관련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교실풍토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모든 형태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교실풍토의 개방성은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 등이 포함된다. 교실에서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나 신뢰 등이 향상된다. IEA의 연구에서 사회참여의 형태로는 지식, 기술, 교육 받은 투표자가 되려는 의지, 참여하는 시민이 되려는 의지, 정치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 조직에 대한 신뢰, 관용 등이 포함된다(홍영란 외, 2008).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정치적 의식이나 시민의식과 같은 인식이나 의식과 투표 참여나 집회 참여와 같은 행동 수준의 역량 역시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된 김술(2005)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대중 집회 참여나 투표 참여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유사하게 학년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관심이 시민의식이 강해진다는 연구(최길

한, 2003)도 존재하였다. 최길한(2003)은 공주지역 고등학교 여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학년별로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파업의 정당성,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전망, 민주정치발전과 개인의 희생,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고생의 정치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길한, 2003; 홍영란 외, 200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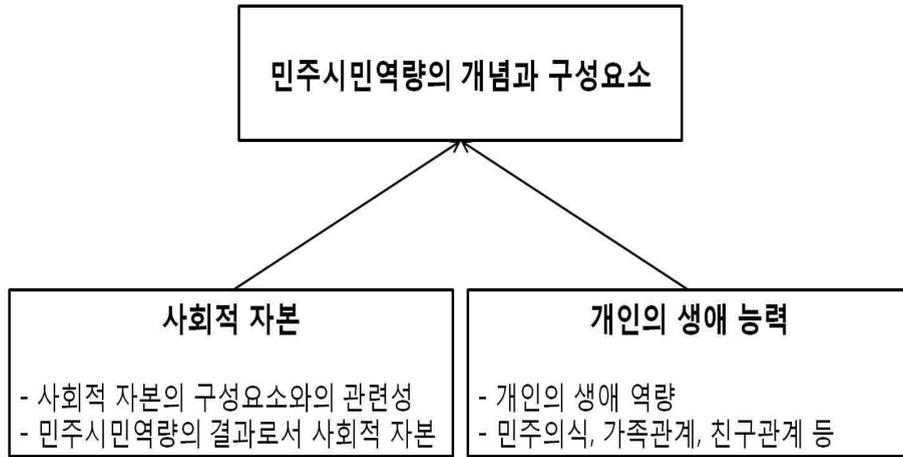
교수학습 방법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박성업(200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임원경험은 학교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 이런 임원경험은 일종의 경험학습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시민의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역량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교육이나 학습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은 학교교육이나 그 외의 다양한 교육의 정당성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1)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이해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은 일치된 의견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사한 용어로 민주시민의식, 시민의식, 시민역량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김태준 · 이영민, 2011; 김태준 · 이영민, 2012; 손경애, 2012; 전선영, 2011) 각각의 용어에 개념 역시 일치된 의견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역량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 등 관련된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들에서도 이런 개념들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민주시민역량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개인의 생애 능력의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태준, 2004; 손경애, 2012).



【그림 II-3】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파악을 위한 방법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은 사회적 자본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에서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의견(김태준·이영민, 2011; 김태준·이영민, 2012)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민주시민역량 또는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를 규정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시민역량의 발달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로서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기도 한다(전선영, 2011; Cogan, 2000). 어느 쪽이든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데에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많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구성요소들이 존재한다. 물론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의 주요 학자인 부르디외(Bourdieu), 콜만(Coleman), 퍼트남(Putnam), 후쿠야마(Fukuyama) 등의 논의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부르디외(1986)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과 함께 설명하면서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디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네트워크 보다는 지속적이라는 표현이었다. 사회적 관계나 연결 모두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없다면 사회적 자본까지는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등장할 때 이는 사회적 기회 자원을 의미하게 되고 제도화 또는 제도화된 결사체가 시도되기도 한다(김상준, 2004; 홍영란 외, 2006).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도화된 결사체가 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공동의 의식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별화된 사회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참여나 사회 시스템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데,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자본으로서 다음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홍영란 외, 2003).

-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② 관찰 가능성에 있어서 물적 자본이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쉽고 인적 자본이 그 다음이며, 사회적 자본은 가장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③ 선별적인 교환 가능성으로서 특정한 사회적 자본이 어디에서는 효과적인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으로서 일단 형성된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관계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또는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 되며,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단지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본이 아니라 공동이 소유하고 공동이 발휘하는 자본이라는 것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인 시민이 가져야 하는 의식이나 역량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참여와 사회 운영원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다. 시민으로서 의식과 역량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네트워크나 의사소통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참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김태준, 이영민, 2012; 손경애, 2012). 특히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간의 협조적 관계 또는 협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협력이나 협동은 시민의식이나 역량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전기호 외, 2010).

콜만(1988)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두 번째 특징은 사회적 자본은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정신적 특성도 사회적

자본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관계를 서로 만나는 횟수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횟수로 측정할 경우에는 보다 가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남으로서 발생하는 친밀감, 상대방에 대한 신뢰(trust), 정신적 유대감 등으로 사회적 자본을 표현할 경우에는 가시적이기 어렵다(현영섭, 2012).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인 만남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정신적 측면의 요소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특성은 시민의식이나 역량과 같은 정신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과 관련될 수 있다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신뢰(Fukuyama, 1995; Putnam, 1993), 정체성(전기호 외, 2010) 등은 시민의식이나 역량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 된다.

콜만(1988)에 의해 제시된 사회적 자본의 세 번째 특성은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일수도 있으나 부정적 또는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상황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효과는 때로는 긍정적이지만 또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성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이후 사용할수록 자본축적이 강해지는 성향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든, 신뢰든 정체성이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된다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물질 자본과는 달리 사용할수록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위해서는 형성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활용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의 다른 요소와 관련하여 퍼트남(1993), 후쿠야마(1995)의 논의는 신뢰, 사회참여, 협력과 같은 네트워크와 다른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퍼트남(1993)은 이탈리아의 지방자치 단체 간 경제 발전의 차이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신뢰, 시민문화, 공동체 의식의 발달 차이가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는 관계적 자본이기는 하지만 단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정신적 측면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공동체의식이나 시민 참여 문화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신뢰가 구축된다는 것은 구성원 간의 관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범이나 제도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생각을 타인들이 보다 지지적으로(supportive)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도록 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생각을 쉽게 이야기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는 구성원간의 믿음이며 이런 믿음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퍼트남(1993)은 이런 사례로 북부 이탈리아에서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북부 이탈리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발전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시민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생산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03).

후쿠야마(1995)의 경우에도 콜만이나 퍼트남의 논의와 연결하여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네트워크 내에서의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협력 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또한 도덕성이나 윤리적 습관 또는 사고와 관련되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의무, 도덕적 의무, 정치적 행동, 문화 존중과 인식 등으로서 구체화되고 또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분류적인 측면에서의 구성요소와 함께 신뢰, 사회 참여, 정치적 행동과 의식, 문화 존중과 인식, 도덕성 등 다양한 정신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자본은 관계와 네트워크의 모습에서 점차 신뢰와 사회적 인식 등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시민의식이나 민주시민역량 등과의 연계되는 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이 제도나 규범과 같이 보다 제도화된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면서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과의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다(North, 1990; Uphoff, 2000).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서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과 유사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바람직한 시민 또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의 광범위한 개념은 성숙한 시민이 지닐 수 있는 특성으로 시민 공동체 의식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시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동시에 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인식이나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다(전선영, 2011). 이런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자본과의 연계성이다. 시민 공동체 의식 또는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발전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은 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식과 관계에 기초하거나 그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Uphoff, 2000).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코건(Cogan, 2000)은 시민의식의 요소로 국가적 정체성, 권리와 자격에 대한 의식, 책임감, 참여의식과 사회참여, 사회적 가치 수용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런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에서 이야기 하는 정체성, 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공동체 참여, 사회 참여, 상호 호혜성, 도덕성이나 윤리성, 정치적 참여나 행동과 유사하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경우에는 민주시민역량의 측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하위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및 시민의 자질, 국가정체성 및 국제적 관계, 사회통합 및 다양성 등의 영역에서 시민의식을 측정하였다(전선영, 2011). 이런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로 확대된 개념으로 보인다. 물론 국가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은 개인 수준에서의 인식이나 행동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즉,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정체성이나 인식 또는 사회적 참여나 배려 등의 인식과 행동은 그 범위가 국가나 지역사회이지만 측정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측정 연구인 SCCBS(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의 구성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SCCBS는 퍼트넘에 의해서 1990년 추진된 사구와로(Saguaro) 세미나 및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구와로 세미나는 퍼트넘이 1990년대 말 정책담당자들과 관련 연구자 9명을 모아서 3년에 걸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던 모임을 의미한다(홍영란 외, 2007).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된 보고서는 SCCBS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차원	구성 요인	설문 내용(예)
신뢰	사회적 신뢰	이웃, 직장동료, 가게 점원, 동료 종교인, 지역 경찰, 타인에 대한 신뢰
	인종 간 신뢰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에 대한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친구관계의 다양성	개인적 친구의 다양성 (사장, 생활보호대상자, 동향, 동성애자, 직장동료, 동일종교 신자,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지역사회리더 등의 11개 항목)
정치참여	전통적 선거참여	지난 주 신문 정치면 읽은 총 일 수 선거명부 등재 여부 최근 대통령선거 참여 여부 정치에 대한 흥미 표현, 정치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 정도
	항의성 정치참여	데모, 행진집회 등의 집회 참여 노동관련 단체 및 인종관련 단체 가입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시민리더십	공식집단 참여 수 1년간 클럽활동 참여 수 1년간 학교 및 지역문제 공청회 참여 수
	유관기관 참여	종교집단, 스포츠클럽, 각종 리그, 젊은이 조직, 주민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단체, 자치단체, 예술 단체, 민족성이 나타나는 단체, 시민권 관련 단체, 취미 단체, 투자관련 단체, 인터넷 단체 등에 대한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유대	1년간 카드 및 보드게임 참여 수 자기 집/친구 집에서 친구초대, 방문 수 친척 방문 수
기부 및 자원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종교적 이유로 기부 여부 건강 및 질병관련 봉사 여부
신앙에 기초한 참여	신앙에 기초한 참여	종교기관 가입여부 종교기관 정기집회에 참여여부 교회의 행사 참여여부
시민참여의 평등	시민참여의 평등	지역별 시민참여 정도 차이(평등적 시민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8 가지 유형의 시민참여의 인종, 소득, 교육에 따른 차이분석)

* 출처: 홍영란 외(2007). p.25

SCCBS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시민참여 등을 중요하게 포함하였다. 2000년에 SCCBS가 추진되면서 8개의 영역(신뢰(trust), 친구관계의 다양성(diversity of friends),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시민리더십과 유관기관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informal socializing), 기부 및 자원봉사(giving and volunteering), 신앙에 기초한 참여(faith-based engagement), 시민참여의 평등성(equality of civic engagement across the community))에서 11개의 하위 요소가 포함되었다. 신뢰의 경우 하위에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인종 간 신뢰(inter-race trust)로 구분되었고, 정치참여의 경우에도 전통적 정치참여(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와 항의성 정치참여(protest political participation)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시민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의 경우에도 말 그대로 시민리더십과 유관기관 참여의 2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었다(홍영란 외, 2007).

SCCBS에서 제시한 영역과 구성요소를 보면,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에서 제시되는 요소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다양성, 정치참여, 사회유대, 자원봉사, 평등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적 자본의 성숙 또는 구축과 관련되어 있고,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일부분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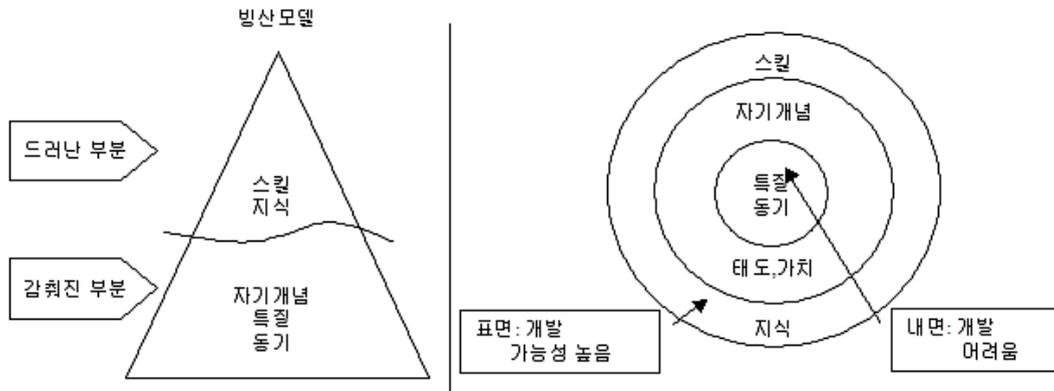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은 성숙한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인식이나 행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갖지만,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다수 수용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에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 참여, 국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이에 기초한 의사소통, 정치적 행동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 도덕성이나 윤리성, 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 등이 포함된다.

민주시민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의 생애 역량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생애 발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역량이나 의식 중에 하나로 민주시민역량 또는 시민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종단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애 발달과 가치 형성을 위한 연구와 관련되어 왔다. 개인의 생애 역량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을 이해하는 것과 쉽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애 역량의 관점은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Kymlicka & Norman, 1995),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 시민의 지위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전선영, 2011) 등으로 개념 정의를 하면서, 사회적 자본도 일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애 역량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역량 또는 시민의식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위를 갖기 위한 의식과 이를 실천하는 행동력 또는 실천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관점과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전선영, 2011).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 또는 역량으로 표현되는 민주시민역량 또는 시민의식을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문화적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 등에서 가져오지만 이를 총화하기 위한 기준은 생애 역량의 관점에서 가져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행동이나 판단 또는 규칙 등을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설명되고 있다(손경애, 2012; 지은림, 2007). 즉,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의 개념을 논의할 때, 역량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적 요소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생애 역량의 관점이 활용되고 있다.

역량의 체계는 역량의 내용이 아니라 역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 가깝다. 역량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맥클리랜드(McClelland)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조직원과 그렇지 않은 조직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들로 역량을 정의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는 지식이나 태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현영섭, 2011). 그리고 이후의 역량 대한 학자들은 역량의 구성요소가 직종이나 영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런 역량의 구성요소를 연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다.



* 출처: Spencer & Spencer, 민병모 외 역(1998). p.21

【그림 II-4】 역량구조의 내면과 표면

일반적으로는 역량의 구성요소를 구분할 때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자기개념(self-concept), 특질(trait), 동기(motive)의 다섯 가지가 자주 거론된다(권대봉, 2003). 이 중에서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가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역량의 발전 모습이나 과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에 자기개념, 특질, 동기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가시적이지 못하고 그 변화 역시 추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역량의 구성요소를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역량의 빙산 모형이나 과녁 모형이 자주 언급된다. 역량에서 가시적인 부분은 빙산에서 수면에 떠올라 있는 부분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부분이다.

수면 아래에 잠겨있다고 해서 중요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쉽게 변하기는 어렵고 또 그 변화를 관찰하기도 어렵지만 자기개념, 특질, 동기 등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량의 과녁 모형은 자기개념, 특질, 동기를 과녁의 가운데 위치시키고 지식이나 기술보다 인간행동을 결정하거나 방향 지우는데 더 중요하다는 설명을 한다.

이런 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한 종류를 보다 크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접근 의식, 이해, 인식과 행동, 동기, 정의 등으로 대별하는 접근이었다(김태준·이영민, 2012; 손경애, 2012; 현영섭, 2011). 즉, 역량의 종류를 생애 역량 발달 그리고 발달의 중요 영역 등을 고려하여 인지와 정서 또는 행동 등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빙산 모형이나 과녁 모형에서 제시된 지식이나 기술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지적 영역은 지식적 이해, 인식 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인지 영역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이런 방향을 적용한 대표적인 민주시민의식 측정 연구가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이다. ICCS에서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은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사회의 시스템, 시민참여, 시민 정체성 등 사회적 자본 및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인지와 정의·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사항은 민주시민역량과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의 차이점이다. 민주시민역량은 역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의식이나 인식은 역량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시민역량은 시민의식이나 민주시민의식과 동의어이기 보다는 포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시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민주시민역량의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구성요소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와 구성요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해로 접근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구성요소의 내용에서

중요한 흐름은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에서는 사회적 관계, 신뢰, 정체성, 문화적 이해, 시민참여, 시민사회의 원리와 제도 등으로 민주시민역량을 구분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의 생애 역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역량이 맥락에 따라서 매우 차별적인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지식, 특징, 기술, 동기 등이 그것들이다. 최근에는 이를 인지와 정의 등으로 교육학의 주요 발달 영역과 관련지어 구분하는 것도 주요 추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은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하여 인간의 인지와 정서 등의 영역에 존재하는 역량들로 관계, 신뢰, 정체성, 문화이해, 참여 등의 역량들이 포함된다.

2) 민주시민역량의 구성 요소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이해 방법을 근간으로 민주시민역량의 구성 요소 역시 결정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에 근거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또 이를 인지, 정의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OECD(2005a, 2005b)에서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구성원에게 요구하는 또는 개인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핵심역량의 개념 자체는 모호하였으나, 핵심역량으로 포함된 요소들에는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가 포함되면서 민주시민역량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역량을 강조하였다(김태준, 이영민, 2012).

상호작용하기는 결국 사회구성원 또는 사회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OECD의 DeSeCo 역시 민주시민역량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민주적 참여, 민주적 의사소통, 민주적 관계형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 책임의식과 같은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김기현 외, 2010)는 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요소로 중요성을 갖는다.

해외의 경우에는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실증적 근거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도 민주시민역량은 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구체화되었다. 국제적 기구에 의해서 수행된 이런 연구들 중에는 IEA에 의해서 수행된 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가 있다. CIVED는 1996년부터 민주시민역량을 구체화하고 이의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고 교육이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단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시도한 연구였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역량 측정변수의 틀을 약간은 복잡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우선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변수의 내용은 사회적 자본 및 기타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민주시민역량으로 민주주의/시민자질, 국가정체성/국제관계, 사회통합/다양성의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이 도출되었다(김태준, 이영민, 2011). 그리고 이 역량들을 각각 생애역량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측정문항은 한편으로는 3개의 공통핵심 영역과 5개의 생애역량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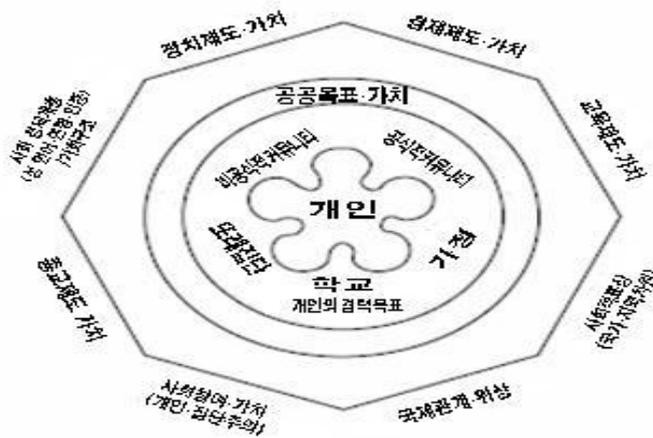
표 II-2 IEA의 CIVED 민주시민역량 구성

구분		측정 변수의 내용		
		민주주의/시민자질	국가정체성/국제관계	사회통합/다양성
생애 역량 관점의 구분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			

CIVED는 민주시민역량이 다양한 주변의 교육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민주시민역량의 형성에 있어서 형성의 주체자인 개인이 중심에 놓여있고 주변에 다양한 환경들이 위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가족(부모, 형제, 확대 가족 등), 학교(교사, 교과과정, 참여 기회 등), 또래집단(학급 및 지역사회 내), 이웃(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사회(제도 및 정책, 교육, 종교, 정치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로 정의된다(김태준, 이영민, 2011).

이런 체계에서 민주시민역량은 학교, 또래집단, 가정이라는 근접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형성되고 넓게는 사회의 다양한 체제에 의하여 추구되는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CIVED의 민주시민역량 모형은 사회적 가치를 개인이 수용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역량을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 가치의 수용과 학습의 과정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참여와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Amadeo, et al., 2002).



* 출처: 김태준 · 이영민(2011). p.13 재인용

【그림 II-5】 IEA 시민교육 연구모형

IEA의 CIVED를 보다 발전시켜서 민주시민역량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연구가 ICCS 이다. CIVED보다 더 많은 국가의 참여로 다양한 국가 맥락이 반영되며 대륙별 차별화된 측정요소를 구성하는 등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CCS는 아동 및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38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참여하여 아시아 설문문항 개발의 책임을 지고 있다(김태준, 이영민, 2011). 한국에서는 ICCS와 관련되어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 3차 연구가 진행 중이다.

ICCS는 민주시민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국제적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시민역량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내용 중의 적지 않은 부분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체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로서 민주적 투표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시민공동체 원리는 시민사회의 운영원리에 대한

측정으로 정치적 의식에 대한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시민참여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로 환경 보호, 자원 봉사 등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단체나 활동에 대한 측정 문항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체성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학습이나 태도 등에 대한 측정 문항으로 역사학습,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ICCS는 CIVED와 동일하게 측정 변수를 생애 역량의 관점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그러나 CIVED와 같이 5개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인지 영역과 정의·행동 영역의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인지 영역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주시민역량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과 추론하고(reasoning) 분석하는 것(analysing) 등을 포함하는 역량 범주이다. 정의·행동 영역은 가치, 태도, 행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범주이다(김태준·이영민, 2011).

표 II-3 IEA의 ICCS 민주시민역량 구성

구분		측정 변수의 내용			
		시민사회의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생애 역량 관점의 구분	인지				
	정의·행동				

ICCS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각 대륙별 특화된 문항을 통한 측정 및 분석도 시도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아시아지역 국가 조사문항(Asian Module; 이하 아시안 모듈)을 개발하여 2008년에 아시아지역에서 ICCS 국제조사에 참여한 5개 국가(한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지역설문 예비조사도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009년에서 아시안 모듈 설문지가 확정되었다. 아시안 모듈은 아시아문화와 전통을 내포하는 총 18개의 개념구성(construct)을 포함하며 각 개념구성은 3개 이상의 4점 척도 하위문항들(item)로 구성되어, 결국 18개 개념구성 하의 총 97개의 하위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문항들은 각각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생애 역량의 관점에 따라 가치신념과 태도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가치신념과 태도의 구분이 모호하고 인지나 지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도 존재하였다.

표 II-4 IEA의 ICCS 민주시민역량 구성

구분		측정 변수의 내용			
		시민사회의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생애 역량 관점의 구분	가치 신념	-정부에 대한 인식 -권위에 대한 복종	-연줄과 공공행정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 -타인배려		-아시아 정체성 -바람직한 시민상 -사회화합 대 체면
	태도	-환경보호	-어른공경 -빈부의 차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 -범법자의 권리	-부정부패 -정치인의 필요성	-아시아국가들 간 관계 -자국의 전통문화

* 출처: 김태준 · 이영민(2012). p.15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민주시민역량 측정 연수들이 실행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10년에 실시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각 2,000명을 비례층화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김태준 · 이영민, 2011). 그리고 이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 항목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측정 문항도 포함되었다. 민주시민역량과 관련해서는 정치관심, 종교이해, 권리책임, 민주적 절차 등에 대한 측정도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측정 변수를 변형하여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중요한 청소년의 핵심 역량으로 보고 조사되었다. 비판적 사고 역량에는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체계성, 객관성, 자기신뢰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되었다. 이 연구의 경우 생애 역량의 관점에 따라 역량 범주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표 II-5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측정 변수 구성

구분	측정 변수의 내용				
	자율적 행동 역량	관계지향성 영역	사회적 협력 영역	갈등관리 영역	민주시민역량
2009	거시적 맥락 권익요구 목표수립 실천 패턴이해	적극적 경청 공공에 대한 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소속감 만족감	문제인식해결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수정당존재이유	정치관심 권리책임 종교이해 민주적 절차
	비판적 사고 역량				
2010	진실추구성, 탐구성, 객관성, 개방성, 체계성, 자기신뢰성				

* 출처: 김태준·이영민(2012), p.20

이상의 민주시민역량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보면, 연구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민주시민역량의 중요한 내용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의 논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사회참여, 신뢰, 정체성, 문화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은 지속적으로 민주시민역량에 포함되는 요소들이었다. 더불어 생애 역량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을 범주화하고 그에 따라 측정 문항도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런 생애 역량의 범주를 따르는 경우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다. 생애 역량의 범주를 적용할 경우 민주시민역량은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과 같이 구분되거나 인지, 정서·행동으로 구분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구분은 민주시민역량을 단지 내용적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변화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었다.

제 3 장

민주시민역량의 한국 및 국제 수준 분석

1. 분석 개요
2.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3. 민주시민역량 국제 수준
4. 정책적 시사점

제 3 장

민주시민역량의 한국 및 국제 수준 분석 (1, 2차 보고서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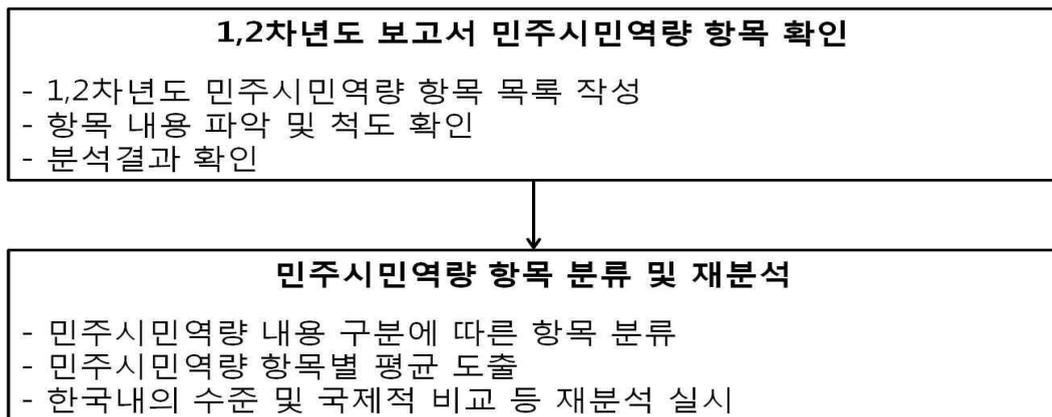
1. 분석 개요

2011년 1차 연구(김태준·이영민, 2011)와 2012년 2차 연구(김태준, 이영민, 2012)에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실증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광범위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민주시민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2010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2009년 ICCS 조사, 1995년과 2005년 WVS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2차년도 보고서에서는 2009년 ICCS 조사와 2009년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방대함과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부족으로 3차 연구를 위한 실증자료의 재분석이 필요하였다. 또한 2차년도 연구보고서에서는 당초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시범운영안 등의 개발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보고서의 실증자료 분석 결과를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별 수준 차이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1차년도와 2차년도 보고서에서 분석된 민주시민역량 항목을 확인하였다. 항목 확인에는 이후의 재분석을 위하여 적절한 항목 척도인지 그리고 내용이 민주시민역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 포함되었다. 항목 척도의 경우 평균을 산출하기에 부적절한 척도로 측정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예를 들어 ‘예’, ‘아니오’와 같이 이산형 척도로 측정된 경우나 등간척도로 측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더불어 분석 결과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은 민주시민역량 항목 중에서 한국을 별도로 구분하여 재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과 해외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1차년도 보고서에서 실증 분석에 활용된 자료 중 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와 2010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의 일부 항목이 재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1995년과 2005년 WVS 조사 항목은 한국만 별도로 수치가 산출되지 되지 않고 OECD 참여국과 비참여국의 평균으로만 분석되어 모든 항목이 재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III-1】 1,2차년도 보고서 재분석 절차

다음 단계로 ICCS의 민주시민역량 내용 구성을 수정한 본 연구의 민주시민역량 내용 구성틀에 따라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I-1>과 같다.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영역에는 총 35개의 항목이 해당되었다. 이 중 4개 항목은 2009년 및 2010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이었고 나머지 31개 항목은 2009년 ICCS 조사 및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에 포함된 항목이었다. 시민 참여 영역에는 총 1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2개 항목은 2010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이었고 나머지 12개 항목은 2009년 ICCS 조사 및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에 포함된 항목이었다. 마지막으로 시민 정체성 영역에는 2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중 3개 항목은 2009년 및 2010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이었고 나머지 20개 항목은 2009년 ICCS 조사 및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에 포함된 항목이었다.

항목을 민주시민역량 내용 영역에 따라 분류한 후 각 항목의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 등을 그리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기 위한 재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재분석은 한국 내의 민주시민역량 항목간의 비교와 한국과 해외 국가를 비교하는 국제적 수준의

비교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재분석에 포함된 항목 중 2009년 및 2010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에 포함되는 9개 항목은 한국 자료만 있어서 국제적 수준 비교에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표 III-1 1,2차년도 보고서 민주시민역량 항목의 분류

구분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35개)
인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ICCS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 -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1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5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 -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7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의 · 행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 2009 ICCS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학습 -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 이슈 주시
기본 역량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추구성 - 체계성
구분	시민 참여(14개)
인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ICCS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3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의 · 행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ICCS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거 참여 - 정당단체 가입 -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 정치토론 참여 -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기본 역량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성 - 객관성

구분	시민 정체성(23개)
인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2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4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6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에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정의 · 행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 2009 ICCS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 인권 증진 운동 참여 - 환경보호운동 참여 - 열심히 일하기 - 항상 법을 준수하기
기본 역량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성 - 자기신뢰성

2.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1)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영역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운영 방법, 민주주의 원리, 사회 구성 시스템이나 제도 등에 대한 판단, 가치, 신념, 지식, 정의, 행동 등의 영역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정부나 정치가의 연줄 행정, 경찰이나 공권력의 행사, 선거참여, 법치주의의 공정성, 민주적인 절차, 역사에 대한 학습,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등이 주요한 항목들로 포함되었다.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은 민주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 절차와 방법,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참여, 공권력 행사와 법치를 핵심적으로 한다는 점에서(김태준, 이영민, 2011; 조진만, 2010). ICCS 조사나 한국의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등에서 이와 유사한 항목들이 배치되었다. 총 35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1) 인지 영역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 영역의 ICCS 조사 중 국제조사에 포함된 11개 항목의 분석은 전체 66,855명(유럽 17,561명, 라틴아메리카 25,857명, 아시아 23,437명)의 응답 자료에 기초하였다. 항목 척도는 4점 리커트(Likert) 식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구성되었다. 분석에서는 이를 역산하여 값이 높을수록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변환하였다.

11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3.17이었다.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평균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1번 항목(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의 평균이 3.65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8번(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과 9번(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의 두 항목 역시 평균이 3.63으로 1번 항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번 항목(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도 평균이 3.61로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민주시민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적 모습에 대하여 정치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의 평등과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낮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4번(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관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으로 평균은 2.05였다. 그 외에도 2번(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이 2.6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4번의 평균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민주시민사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인식에서 공권력의 시민권 통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II-2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ICCS)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3.17	3.61	2.67	3.24	2.05	3.65	3.32	2.83	3.63	3.63	3.35	2.85

- 1: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3: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 4: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관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5: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6: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 7: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 8: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9: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10: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
- 11: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ICCS 아시아 모듈을 통하여 측정된 민주시민의식 중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 보고서(김태준, 이영민, 2012)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1, 5, 7이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으로 11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요인 5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으로 4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요인 7은 정치인에 대한 인식으로 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항목은 모두 4점 리커트식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구성되었으며, 총 23,197명(한국 5,236명, 대만 5,147명, 홍콩 2,670명, 인도네시아 4,938명, 태국 5,206명)의 응답이 활용되었다. 분석에서 역산처리는 하지 않았으므로 값이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인 1의 전체 평균은 3.17, 요인 5의 전체 평균은 2.09, 요인 7의 전체 평균은 1.74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 5,236명의 조사결과,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뇌물의 용인, 친인척에 대한 비합리적 배려, 정치인의 사법부 결정 간섭 등 민주시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요인 5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으로 1번 항목이 요인 5에 포함된 다른 항목과는 달리 역산항목이었다. 1번 항목을 역산한 4개 항목의 평균은 2.09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의 청소년은 법적인 대우나 공정성에 대하여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7은 정치인에 대한 인식으로 정치인 가족의 도덕성과 법 준수에 대한 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평균은 1.74로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인과 그 가족의 도덕성과 법 준수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었다.

각각의 요인에 속한 항목별로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11개 항목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7번(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으로 3.47이었다. 7번과 유사한 수준으로 1번(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역시 평균이 3.34였다. 따라서 요인 1의 하위 항목 중에서 뇌물과 친인척 배려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2번(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1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이 3.0이상으로 강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2번 역시 2.91로 부정적 인식에 해당되는 결과였다.

요인 5에 포함된 4개 항목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4번(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으로 2.70이었다. 따라서 법률 시스템에 대하여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대로 1번 항목(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의 경우 2.46으로 4번 항목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시스템의 경우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며 관련된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5는 4점 척도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응답이 주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요인 1에 비해서는 중간적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인식이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으로서 더욱 강조되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비해 법체계가 운영과 관련된 인식은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인식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구분	2009 ICCS 아시아 모듈 요인1 항목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3.17	3.34	2.91	3.16	3.12	3.24	3.15	3.47	3.23	3.22	3.05	3.11

요인1 전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 신념

- 1: 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2: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3: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 4: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 5: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 6: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 7: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 8: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 9: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 10: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11: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구분	ICCS 아시아 모듈 요인5 항목				
	전체	1	2	3	4
평균	2.09	1.54*	2.13	1.97	2.70

요인5 전체: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 1: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
- 2: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3: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4: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분	2009 ICCS 아시아 모듈 요인7 항목			
	전체	1	2	3
평균	1.74	1.86	1.67	1.77

요인7 전체: 정치인에 대한 인식

- 1: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3: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 역산항목으로 환산된 점수임. 원점수는 2.46임.

요인 7은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었다. 정치인과 가족의 법 준수나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는 응답 성향을 보였다. 특히 2번(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의 경우 다른 항목에 대해 더욱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은 정치인과 가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었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ICCS의 조사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으로서 시민의 투표권, 항의권 등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친척 등에 대한 배려, 연고주의 등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민주시민사회의 운영 원리로서 각종 비리와 연줄을 최소화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반면에 법과 관련된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의 요소들은 응답범위의 중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은 가장 부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만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정의·행동 영역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정의·행동 영역은 논리적인 인지의 수준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운영되기 위하여 원리와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어떤 행동, 어떤 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한다. 정의·행동 영역에는 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2개와 ICCS 조사 항목 2개가 포함되었다. 2009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의 목적과 관련된 항목으로 5점 척도(1=매우 반대, 2=약간 반대, 3=보통, 4=약간 찬성, 5=매우 찬성)로 측정되었다. 응답인원은 9,150명으로 한국에서만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9 ICCS 조사항목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으로 역사학습과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4점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측정되었으며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응답자는 5,236명이었다.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의 경우 5점 척도 중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평균이

2.46, 민주주의의 목적이 2.53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럿이 논의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논의하여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고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었다.

한편 2009 ICCS 항목의 경우 역사학습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중간 이상(평균 2.96) 찬성 의견이 나타났고,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가 중요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찬성 의견(평균 3.32)이 나타났다.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정의·행동 영역의 4개 항목은 민주시민으로서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형식이었다. 2009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 항목이 5점 척도이고 2009 ICCS 항목이 4점 척도라서 이 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2009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 항목인 민주적 절차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적 수준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중간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해 좋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행동의 경우 정치 이슈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역사를 학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정의·행동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2009 ICCS 항목	
	1	2	3	4
평균	2.46	2.53	2.96	3.32

1.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2.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하면 된다.
3. 역사학습(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 주시(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3) 기본역량 영역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기본역량 영역은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중 비판적 사고 역량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었다. 다만 항목 자체의 자료가 아니라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합산된 요인 수준의 자료이다.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의 요인 중 진실추구성과 체계성이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포함되었다. 민주시민사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 중 진실추구성은 민주시민사회의 비리, 부정부패, 비민주적 행동과는 반대되는 역량으로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성은 민주시민사회의 시스템과 관련되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으로 체제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의 측정척도는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였으며, 총 응답자는 7,313명이었다.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중 진실추구성의 평균은 3.49였으며, 체계성은 3.00이었다. 따라서 둘 다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였고, 진실추구성이 체계성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으로서 진실추구성이 약간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표 III-5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기본역량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1	2
평균	3.49	3.00

1: 진실추구성 2: 체계성

2)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참여 영역은 이른바 사회적 참여와 이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포함한다. 즉, 투표 참여, 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결정 참여, 의견 표현, 정치적 항의 등과 관련되어 인지, 정서·행동, 기본역량의 세 가지 역량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각 영역에 2009 ICCS 국제 조사,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의 조사 항목이 포함되었다. 시민 참여 영역에는 총 1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1) 인지 영역

시민 참여의 인지 영역은 의사결정 참여, 영향력 참여, 공동체 참여 등의 관련되어 기존의 조사에서 시민참여의 인지적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 7개 포함되었다. 이 7개 항목에는 2009 ICCS 국제 조사에서 사용된 1개 항목과 ICCS 아시안 모듈에서 사용된 요인3과 관련된 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ICCS 아시안 모듈의 요인 3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을 위한 가치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 의사결정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요인 3의 6번 항목은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항목으로 이 역시 정부의 역할이 의사결정이나 영성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사회 참여의 측면에서는 영성과 정신적 자유와 관련된다. 또한 2번 항목의 경우에는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항목으로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단합과 관련된 항목으로 사회 참여에 해당되는 항목이었다.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과 동일하게 4점 리커트 식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 또는 비동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은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을 물어보는 것으로 평균은 3.5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ICCS 아시안 모듈의 요인 3에 해당되는 6개 항목의 평균은 2.89로 국제 조사 항목보다는 약간 낮은 평균이었다. ICCS 아시안 모듈의 6개 항목과 비교해서도 ICCS 국제 조사의 항목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치적 항의의 폭력성 배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항목보다 그 경향이 강하였다.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에서 응답자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였다. 각각의 평균은 2.73과 2.78로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그러나 평균이 2점대이므로 절대적인 측도 측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에 해당되었다.

시민 참여에서 인지 영역의 7개 항목 중 정치적 항의의 폭력성과 관련되어 상당히 강하게 동의하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은 폭력적 방법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ICCS

아시아 모듈 조사에서도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에서 타인의 결정이나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시민 참여 인지영역의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09 ICCS	2009 ICCS 아시아 모듈 요인3 항목						
	1	전체	1	2	3	4	5	6
평균	3.51	2.89	2.73	2.84	3.04	3.01	2.78	2.94

ICCS

1: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ICCS 아시아 모듈 요인3

요인3 전체: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

- 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 2: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 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 4: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 5: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 6: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2) 정의 · 행동 영역

사회 참여의 정의 · 행동 영역에는 투표참여 의사, 의견표현 의사, 정치적 항의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이 포함되었다. 즉, 민주시민의 사회 참여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2009 ICCS 국제 조사)가 포함되었다. 총 5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각각 모든 선거 참여, 정당단체 가입,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였다. 앞과 동일하게 4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중요함, 2=중요함, 3=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값이 클수록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전체 평균은 2.97로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모든 선거 참여(평균 3.59)와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평균 3.36)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긍정적 응답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구분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전체	1	2	3	4	5
평균	2.97	3.59	2.64	2.35	2.92	3.36

- 1: 모든 선거 참여
- 2: 정당단체 가입
- 3: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 4: 정치토론 참여
- 5: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사회 참여의 정의·행동 영역으로 분류된 2009 ICCS 국제조사의 항목들에 대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였다. 특히 선거 참여, 평화적 항의 참여 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으로서 아직까지 선거나 평화적 시위에 대한 참여 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각종 교육과정이나 간접경험 등을 통하여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당대표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본역량 영역

시민 참여에서 기본역량 영역은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중 개방성과 객관성에 관련된다. 시민 참여를 위하여 타인과의 소통, 참여, 네트워크 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개방성이 중요한 기본 역량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객관성은 시민 참여가 의사결정, 의사표현, 공동체 참여 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과 사고의 역량이 의사결정과 표현 그리고 참여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역량 영역에 포함되었다.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과 동일하게 항목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였으며, 총 응답자는 7,313명이었다.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중 개방성의 평균은 3.70이었으며, 객관성은 3.48이었다. 따라서 둘 다 중간 수준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이 중 개방성이 객관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시민 참여의 기본 역량으로서 개방성이 좀 더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불과 0.22여서 큰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표 III-8 시민 참여 기본역량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1	2
평균	3.70	3.48

1: 개방성 2: 객관성

3) 시민 정체성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은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유대감,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런 인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참여나 환경보호 운동 참여, 준법 행동, 정치에 대한 관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역량 영역으로는 탐구성과 자기신뢰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민 정체성은 시민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시민으로서 인정하며 그에 어울리는 시민 행동을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앞서 민주시민역량의 범주와 동일하게 인지 영역, 정서·행동 영역, 기본역량 영역으로 관련 항목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영역에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이 배치되었다. 총 23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1) 인지 영역

시민 정체성의 인지 영역은 민주시민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상이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15개가 시민 정체성 인지 영역에 포함되었다.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 요인 2, 요인 4, 요인 6과 관련된 항목으로 각각 7개, 5개,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가치 신념이고, 요인 4는 바람직한 시민 의식, 요인 6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었다. 항목응답은 4점 리커트식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 또는 비동의를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2는 시민 정체성 중에서도 아시아 시민 또는 아시아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7개 전체의 평균은 1.84로 비교적 동의 수준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체성의 다른 요인과 비교하면 요인 4(바람직한 시민의식)의 평균이 2.00, 여인 6(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1.9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요인 2와 요인 6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민 정체성에서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시민 의식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자긍심이 긍정적이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중요성 그리고 보존을 위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인식을 갖는다.

요인 2의 하위 7개 항목 중에서는 1번(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2번(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의 평균이 가장 낮아서 이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번(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3번(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롭다)은 다른 항목에 비해 평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이 모두 2점 미만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9 시민 정체성 인지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2 항목							
	전체	1	2	3	4	5	6	7
평균	1.84	1.71	1.75	1.91	1.95	1.88	1.88	1.82

- 요인2 전체: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
- 1: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2: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 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롭다.
 - 4: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 5: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롭다.
 - 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롭다.
 - 7: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롭다.

구분	ICCS 아시안 모듈 요인4 항목					
	전체	1	2	3	4	5
평균	2.00	2.25	1.92	1.92	1.81	2.11

요인4 전체: 바람직한 시민 의식

- 1: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 2: 비림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 3: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 4: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5: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6 항목			
	전체	1	2	3
평균	1.96	2.01	1.82	2.06

요인6 전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 1: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 2: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3: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요인 4는 바람직한 시민 의식과 관련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4번(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3번(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2번(비림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목의 평균이 2점미만으로 동의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번(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과 5번(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에 대한 응답은 2점을 초과하여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점수의 차이는 최대 0.3 정도로 작았다. 따라서 요인 4번 바람직한 시민 의식에서 도덕성이나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는 시민 정체성의 인식은 한국 청소년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동의(同意) 또는 반의(反意)로 크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요인 6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2번(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의 평균이 1.82로 동의하는 수준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1번과 3번 항목의 경우 2점 이상으로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가 큰 편은 아니어서 전통 문화의 중요성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인지하는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 정체성의 인지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시민 정체성 인지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또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식, 아시아 지역 연합의 필요성 인식,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영성 또는 도덕성의 필요, 전통 문화의 보존 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반면에 바람직한 시민 의식으로서 도덕성이나 정신적 성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약하였다.

(2) 정의·행동 영역

시민 정체성의 정의·행동 영역에는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1개(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와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5개가 포함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는 4점 척도(1=전혀 관심 없다, 2=거의 관심 없다, 3=약간 관심 있다, 4=매우 관심 있다)로 측정되었다.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에는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환경 보호 운동 참여, 열심히 일하기, 항상 법을 준수하기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중요한 행동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4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중요함, 2=중요함, 3=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CS 국제 조사를 역산 처리하여 값이 클수록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치적 관심 정도에 대한 응답은 256으로 '거의 관심 없다'와 '약간 관심 있다'의 중간 수준이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주목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나 태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되었다.

2009 ICCS 국제 조사에서는 5개의 평균이 3.27로 시민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성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 중에서는 항상 법을 준수하기가 3.46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기, 환경 보호 운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의 순으로 높았다. 그런데 5개의 항목이 모두 3점 이상이라서 항목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시민 정체성과 관련된 행동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1	전체	1	2	3	4	5
평균	2.56	3.27	3.08	3.14	3.25	3.44	3.46

2009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1: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2009 ICCS 항목

- 1: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 2: 인권 증진 운동 참여
- 3: 환경 보호 운동 참여
- 4: 열심히 일하기
- 5: 항상 법을 준수하기

(3) 기본역량 영역

시민 정체성의 기본역량 영역은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중 탐구성과 자기신뢰성과 관련된다. 시민 정체성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아상이나 정체감과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나 탐구성은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키워가는 데 필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문제와 시도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시민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 항목의 측정척도는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였다.

탐구성의 평균은 3.49, 자기 신뢰성의 평균은 3.13으로 탐구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따라서 둘 다 중간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그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즉,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3점대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1 시민 정체성 기본역량 영역 한국 내 수준 비교

구분	2010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항목	
	1	2
평균	3.49	3.13

1: 탐구성 2: 자기신뢰성

3. 민주시민역량 국제 수준

한국 내 수준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국가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역량을 2009 ICCS의 구분을 참고하여 한국 내의 수준 비교와 동일하게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인지 영역, 정의·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분석에 포함되었던 기본역량 영역은 한국에서의 조사 자료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에서는 제외되었다. 국제적 민주시민역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2009 ICCS 국제 조사와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의 결과가 활용되었다.

국제적 민주시민역량 비교에 사용된 2009 ICCS의 측정 항목은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13개, 시민 참여에 6개, 시민 정체성에 5개로 총 24개였다. 2009 ICCS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국제적 수준 측정에 참여한 국가는 15개국이었다. 유럽에서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아시아에서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이 참여하였다. 항목 척도는 리커트식 4점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산처리 하여 값이 높을수록 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는 시민역량 등과 관련하여 아시아 상황에 부합되도록 새롭게 개발된 측정 항목을 가지고 실시된 조사였다. 2009 ICCS 국제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아시아 국가(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가 이 아시안 모듈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 및 요인추출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7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영역에

3개 요인(18개 항목), 시민 참여 영역에 1개 요인(6개 항목), 시민 정체성 영역에 3개 요인(1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항목의 척도는 모두 4점 리커트식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시안 모듈 조사 결과에서는 값이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1)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영역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영역에 대한 국제적 민주시민역량의 비교를 위해서 인지 영역과 정의·행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2009 ICCS 국제 조사 및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을 분류·배치하였다. 국제 조사의 경우에는 인지 영역에 11개 항목, 정의·행동 영역에는 2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인지 영역은 민주주의의 권한이나 원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의 역할, 선거 등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의미한다. 정의·행동 영역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9 ICCS 아시안 모듈에서는 인지 영역에 요인 1, 요인 5, 요인 7이 배치되었다. 요인 1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 신념, 요인 5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요인 7은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었다.

정의·행동 영역의 경우에는 2009 ICCS 국제 조사의 2개 항목이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2개 항목은 시민행동으로서 적절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학습과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에 대한 주시 2개였다.

(1) 인지 영역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과 관련된 인지 영역 ICCS 국제 조사 항목은 총 11개였다. 각각의 항목과 대륙별 그리고 참여국가별 평균은 <표 III-12>와 같다. 11개 항목의 전체 평균은 3.14였다. 항목별로 보면 1번 항목(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평균이 3.66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4번(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으로 평균은 2.59였다.

1번 항목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질문으로 11개 항목 중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았다. 대륙별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의사표현 권리에 대한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3.82), 이탈리아(3.81)였다. 낮은 수준의 국가는 인도네시아(3.37), 태국(3.42) 등이었고, 영국이 3.57로 선진국 중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61로 전체 평균과 유사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 이하(11위)였다.

2번 항목은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정치지도자의 친인척에 대한 관리 임용에 대한 질문이었다. 2.86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대륙이나 국가별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대만의 경우 각각 3.56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여서, 정치지도자의 친인척이 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67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11위)이었다.

3번 항목은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기업이나 정부 등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88이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약간 높은 편(3.02)이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 15개국 중 한국의 평균이 3.24로 유독 높았다. 그 다음으로 스페인, 칠레, 스웨덴, 영국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의 신문사 소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에서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4번 항목은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관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공권력이 개인을 국가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감시키는 권한에 대한 동의 수준을 묻는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59로 11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즉,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 영역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낮은 수준이었다. 유럽이 약간 높은 편이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 15개국 중 스웨덴, 체코, 칠레의 평균이 높았고 3.24로 한국은 2.05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한국은 조사 참여 국가 중 경찰이 국가 안전을 위해 국민을 재판관을 통해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5번 항목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사회적 또는 정치적 권리의 평등한 존중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3.56으로 동의 수준이

높은 항목이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이 높은 반면 유럽과 아시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15개국 중 콜롬비아, 대만의 평균이 높았고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의 평균이 낮았다. 그러나 국가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은 3.65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5위)이었다.

6번 항목은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정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제시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3.08이었다. 대륙별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평균이 높은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다. 전체 15개국 중 한국, 칠레의 평균이 높았고 도미니카, 태국, 콜롬비아, 멕시코의 순으로 평균이 낮았다. 한국은 3.32로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1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은 정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제시를 위한 자유를 갖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사 참여국가와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다.

7번 항목은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국가안전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93이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평균이 높은 반면 유럽은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파라과이, 태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체코, 영국은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 간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은 2.83으로 평균이 낮은 수준(12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은 국가안전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8번 항목은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정치지도자에 대한 선거권 평등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3.59였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이 높은 반면 유럽과 아시아는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칠레, 멕시코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태국, 영국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63으로 평균이 높은 수준(6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선거권 평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경향이 조사 참여국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해석되었다.

9번 항목은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불공정한 법에 대한 정치적 항의 권리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3.34였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높은 편이었으나 대륙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한국, 스페인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홍콩, 대만은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 간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은

3.63으로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1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법에 대한 정치적 항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조사 참여국들에 비해 가장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10번 항목은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소득격차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3.12였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높은 편이었으나 대륙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대만, 칠레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태국, 도미니카는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35로 평균이 높은 수준(4위)이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소득격차가 줄어야 한다는 인식이 조사 참여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으로 해석되었다.

11번 항목은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국가 위협상황에서 정부의 언론 통제 권한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99였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가 높은 편이었으나 대륙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파라과이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홍콩, 영국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2.85로 평균이 높은 수준(13위)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국가 위협상황에서 정부가 언론 통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II-12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비교(ICCS)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대륙				유럽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3.69	3.75	3.55	3.66	3.65	3.81	3.78	3.63	3.57
2	2.86	2.69	2.91	2.82	2.77	2.82	2.88	3.07	2.81
3	3.02	2.81	2.84	2.88	3.02	2.85	3.11	3.07	3.07
4	2.70	2.68	2.41	2.59	2.86	2.58	2.48	2.87	2.64
5	3.51	3.63	3.52	3.56	3.42	3.64	3.60	3.48	3.41
6	3.11	3.03	3.12	3.08	3.14	3.13	3.14	3.09	3.04
7	2.74	3.02	2.99	2.93	2.54	2.86	2.76	2.89	2.73
8	3.53	3.68	3.55	3.59	3.50	3.53	3.64	3.52	3.44
9	3.40	3.37	3.27	3.34	3.34	3.38	3.52	3.51	3.25
10	3.14	3.11	3.12	3.12	3.08	3.35	3.26	3.10	2.91
11	2.92	3.07	2.97	2.99	2.95	2.96	2.89	2.98	2.80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1	3.82	3.78	3.72	3.69	3.77	3.77	3.58	3.37	3.61	3.42
2	2.91	2.47	2.65	2.76	2.69	3.56	3.04	2.52	2.67	2.80
3	3.08	2.69	2.66	2.81	2.76	2.85	2.87	2.37	3.24	2.87
4	2.86	2.55	2.68	2.64	2.71	2.67	2.21	2.62	2.05	2.41
5	3.71	3.72	3.51	3.54	3.66	3.71	3.41	3.43	3.65	3.34
6	3.31	2.95	2.77	2.97	3.16	2.99	3.14	3.16	3.32	2.97
7	3.07	2.98	2.92	3.01	3.15	3.01	2.92	3.01	2.83	3.14
8	3.76	3.66	3.65	3.68	3.61	3.62	3.48	3.56	3.63	3.42
9	3.40	3.35	3.34	3.35	3.43	3.14	2.90	3.31	3.63	3.19
10	3.39	3.03	2.83	3.12	3.15	3.54	2.98	2.87	3.35	2.77
11	3.09	3.00	3.06	3.11	3.13	3.08	2.58	3.14	2.85	3.02

- 1: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3: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 4: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5: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6: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 7: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 8: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9: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10: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
- 11: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과 관련된 인지 영역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3개 요인에 18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우선 요인 1(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신념)의 11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 국가별 평균은 <표 III-13>과 같다.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1 11개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1 전체	3.17	3.06	2.49	3.17	2.39	2.84
1	3.09	3.15	2.33	3.34	2.47	2.83
2	2.99	2.97	2.20	2.91	2.35	2.66
3	3.13	3.14	2.73	3.16	2.68	2.95
4	3.26	3.19	2.48	3.12	2.13	2.80
5	3.25	3.22	2.70	3.24	2.33	2.92
6	3.28	3.20	2.75	3.15	2.57	2.97
7	3.51	3.44	2.97	3.47	2.22	3.09
8	3.33	3.13	2.51	3.23	2.52	2.92
9	3.13	2.95	2.69	3.22	2.34	2.86
10	3.14	2.86	2.30	3.05	2.45	2.75
11	3.06	2.80	2.30	3.11	2.57	2.76

요인1 전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 신념

- 1: 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2: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3: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 4: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 5: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 6: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 7: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 8: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 9: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 10: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11: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요인 1에 대한 전체 평균은 2.84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1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수준이 중간 또는 약간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그림 II-32】와 같이 한국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 신념의 평균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 신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7번 항목(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의 평균이 3.09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3번(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으로 평균은 2.66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에서 후보자와의 친분에 의해 투표를 하거나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번의 평균이 2.66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동의하지 않는 범주에 가까운 응답이었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공무를 친분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의뢰하는 것에 대한 허용 인식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83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34로 가장 높았고, 홍콩, 대만의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공무를 친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공무원 친인척 특혜에 대한 허용 인식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66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99로 가장 높았고, 홍콩, 한국의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공무원 채용에서 친인척을 배려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1번 항목에 비해서는 평균값이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나서 공무를 친분에 의해서 의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인사문제에서 친인척 배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95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16으로 가장 높았고, 대만, 홍콩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인사문제에서 친인척 배려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4번 항목은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투표에서 지역연고 고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80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25로 가장 높았고, 홍콩, 한국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투표에서 지역연고 고려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5번 항목은 '우리과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인사 결정에서 연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92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24로 가장 높았고, 대만, 홍콩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인사 결정에서 연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6번 항목은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공금의 사적인 사용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97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28로 가장 높았고, 홍콩, 한국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공금의 사적인 사용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7번 항목은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뇌물 제공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3.09였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51로 가장 높았고, 한국, 홍콩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뇌물 제공에 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8번 항목은 '정치인·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정치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92였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33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 홍콩 순이었다. 이 세 국가의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9번 항목은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수월성을 위한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86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홍콩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수월성을 위한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에 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10번 항목은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정부의 초법적 권력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75였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홍콩 순이었다. 대만과 한국은 3점 이상의 평균으로 강하게 정부의 초법적 권력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다른 국가들은 평균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요인 1에 포함된 항목 중 11번 항목은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76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홍콩 순이었다.

한국과 대만은 3점 이상의 평균으로 정부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는 인식을 보였다. 다른 국가들은 평균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요인 5(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4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 국가별 평균은 <표 III-14>와 같다. 요인 5에 대한 전체 평균은 1.82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5에 대하여 약간 동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법과 정의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평균이 2점 정도로 부정적 인식의 범주로 치우친 값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된다.

표 III-14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아시안 모듈 요인 5, 요인 7)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5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5 전체	2.07	1.89	1.51	2.09	1.59	1.82
1	1.41	1.30	1.04	1.54	1.37	1.33
2	2.04	1.92	1.71	2.13	1.59	1.87
3	2.10	1.94	1.56	1.97	1.51	1.80
4	2.73	2.39	1.73	2.70	1.88	2.28

요인5 전체: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 1: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
- 2: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3: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4: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7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7 전체	1.95	2.02	1.76	1.74	1.71	1.81
1	1.65	1.79	1.82	1.86	1.74	1.77
2	2.29	2.34	1.81	1.67	1.78	1.94
3	1.78	1.87	1.73	1.77	1.67	1.75

요인7 전체: 정치인에 대한 인식

- 1: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3: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 ()는 역산처리한 평균임.

요인 5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즉, 법의 불공평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값은 다른 문항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응답값을 다시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평균은 1.33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태국 순이었다. 한국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서 법의 불공정한 결정 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수 자체가 1.54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법이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5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7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1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홍콩 순이었다. 한국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수 자체도 2.13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5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0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1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홍콩 순이었다. 대만과 한국의 점수 차는 크지 않았고 대략 2.0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법원의 법 적용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러나 점수 자체는 1.97로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5에 포함된 항목 중 4번 항목은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28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7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홍콩 순이었다. 대만과 한국의 점수 차는 크지 않았고 대략 2.7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법률 시스템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점수 자체는 2.7로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편향된 결과였다.

다음으로 요인 7(정치인에 대한 인식)의 3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국가별 평균은 <표 III-14>와 같다. 요인 7에 대한 전체 평균은 1.81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7에 대하여 약간 동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홍콩과 태국이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고 한국은 평균이 1.74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였다.

요인 7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7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8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홍콩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인 가족의 준법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점수 자체는 1.86으로 동의하는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7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94이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2.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인 가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였다. 점수 자체도 1.67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서 동의하는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7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5였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1.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한국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인 가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중간 정도의 경향이였다. 점수 자체는 1.77로 동의하는 범주에 포함되었다.

(2) 정의·행동 영역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정의·행동 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2009 ICCS에서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었으나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의 정의·행동 영역과 관련되어서는 2개 항목이 해당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II-15>와 같다. 측정척도는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 매우 중요함)였다.

2개 항목 전체의 평균은 3.12이었다. 이 중 역사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3.19였고,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의 정치이슈에 대한 주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3.05였다.

1번 항목은 역사학습이 민주시민으로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유럽은 2.85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체로 유럽에 속한 국가의 평균은 낮은 편이었고 다른 국가는 3.0 이상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파라과이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스웨덴, 영국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2.96으로 평균이 낮은 수준(11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역사학습이 시민의 적절한 행동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평균값이

2.96으로 3점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역사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2번 항목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에서 다뤄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은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태국, 한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스웨덴, 체코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32로 평균이 높은 수준(2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에서 다뤄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주시가 시민의 적절한 행동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평균값 역시 3.32로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표 III-15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정의·행동 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ICCS)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대륙					유럽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2.85	3.37	3.25	3.19	2.77	3.47	2.90	2.41	2.73	
2	2.89	2.99	3.23	3.05	2.74	3.36	2.87	2.70	2.85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1	3.31	3.38	3.50	3.24	3.54	3.11	3.04	3.63	2.96	3.45
2	2.89	2.90	3.20	3.09	2.84	3.29	3.23	2.94	3.32	3.35

1: 역사학습

2: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이슈 주시

2) 시민 참여

시민 참여는 시민 행동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취해야 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다. 시민사회의 원리 및 시스템과 동일하게 시민 참여와 관련되어서도 인지 영역과 정의·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지 영역에는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1개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에는 요인 3에 해당되는 6개 항목이

해당되었다. 요인 3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에 대한 것이었다. 정의·행동 영역에는 2009 ICCS 국제 조사의 5개 항목이 활용되었다. 5개 항목은 모든 선거 참여, 정당단체 가입,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였다.

(1) 인지 영역

시민 참여의 인지 영역에 포함된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은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였다. 이 항목의 전체 평균은 3.40으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대륙 간의 평균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다. 국가별로는 대만, 스페인, 한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영국, 도미니카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51로 평균이 높은 수준(2위)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항의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 3(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의 6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 국가별 평균은 <표 III-16>과 같다. 요인 3에 대한 전체 평균은 1.84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3에 대하여 약간 동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에 대한 평균이 2.89로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21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른의 조언에 따르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가장 약하였다. 점수 자체도 2.73으로 동의하지 않는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51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0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한국의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화합을 위하여 잘못된 행동을 참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56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홍콩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의사결정과정

에서 고위직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다른 비교 대상 국가와 큰 차이는 보이는 수준이었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4번 항목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35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홍콩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생님의 조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항목 역시 다른 비교 대상 국가와 큰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었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5번 항목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12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홍콩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조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항목 역시 다른 비교 대상 국가와 큰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었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6번 항목은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21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종교나 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16 시민참여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대륙				유럽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3.35	3.39	3.45	3.40	3.26	3.49	3.51	3.29	3.21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1	3.50	3.43	3.23	3.36	3.43	3.56	3.43	3.30	3.51	3.43

1: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3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3 전체	2.56	2.54	1.94	2.89	1.78	1.84
1	2.23	2.34	0.72	2.73	1.78	2.21
2	3.06	2.89	1.90	2.84	2.03	2.51
3	2.79	2.59	2.49	3.04	1.92	2.56
4	2.63	2.48	1.91	3.01	1.76	2.35
5	2.43	2.37	1.62	2.78	1.48	2.12
6	2.22	2.55	1.73	2.94	1.74	2.21

요인3 전체: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

- 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 2: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 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 4: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 5: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 6: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2) 정의 · 행동 영역

시민 참여의 정의 · 행동 영역은 시민 참여와 관련되어 민주시민으로 취해야 할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5개 항목(모든 선거 참여, 정당단체 가입,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4점 척도(1=전혀 주요하지 않음, 2=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이었다.

5개 항목 전체의 평균은 3.5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5개 항목 중에는 모든 선거 참여의 평균(3.33)이 가장 높았고, 정당단체 가입(2.40)이 가장 낮았다. 시민 참여의 정의 · 행동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시민 참여의 정의 · 행동 영역 2009 ICCS 국제 조사 1번 항목은 '모든 선거 참여'가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33으로 시민참여 정의 · 행동 영역의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이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유럽은 3.03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태국, 인도네시아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체코, 스웨덴, 영국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59로 평균이 높은 수준(3위)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은 모든 선거 참여가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더불어 점수 자체도 3.59로 매우 강하게 중요성을 인정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2번 항목은 '정당단체 가입'이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2.40으로 시민참여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점수 자체는 중요하다는 인식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의 중간 정도의 범주에 해당되는 점수였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유럽은 2.15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도미니카, 태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체코, 대만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2.64로 평균이 높은 수준(4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정당단체 가입이 시민 참여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점수 자체서 2.64로 중간 정도 수준의 중요성 범주에 해당되었다.

3번 항목은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이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06으로 시민 참여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부대표에 대한 존경심 표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가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유럽과 아시아는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체코, 한국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2.35로 평균이 낮은 수준(14위)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점수 자체는 2.35로 중간 수준의 범주에 해당되었다.

4번 항목은 '정치토론 참여'가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2.48로 시민참여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따라서 정치토론 참여가 시민 참여 행동으로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는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 태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파라과이, 콜롬비아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2.92로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1위)이었다. 전체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상황이었으나 한국은 정치토론 참여의 중요성을 높게 보는 국가였다. 점수 자체도 2.92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5번 항목은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가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2.95로 시민참여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점수는 중요하다라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륙 간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한국, 인도네시아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체코, 영국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36으로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1위)이었다. 평화적 항의 참여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중요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다. 3.36으로 매우 강한 중요성 인식의 수준을 보였다.

표 III-17 시민 참여 정의·행동 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대륙				유럽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3.03	3.41	3.47	3.33	2.81	3.36	3.06	2.99	2.99	
2	2.15	2.50	2.49	2.40	1.91	2.32	2.30	2.07	2.25	
3	2.88	3.25	2.98	3.06	2.39	3.18	3.03	3.01	3.01	
4	2.42	2.30	2.71	2.48	2.26	2.70	2.41	2.28	2.53	
5	2.75	2.95	3.00	2.92	2.58	2.98	2.95	2.69	2.63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1	3.32	3.48	3.42	3.49	3.24	3.04	3.19	3.67	3.59	3.75
2	2.25	2.36	2.84	2.52	2.71	2.06	2.14	2.63	2.64	2.83
3	3.25	3.27	3.39	3.14	3.30	2.89	3.24	3.48	2.35	3.09
4	2.20	2.19	2.20	2.66	2.08	2.57	2.65	2.48	2.92	2.89
5	2.91	3.02	2.95	2.94	2.90	2.82	2.78	3.15	3.36	2.80

- 1: 모든 선거 참여
- 2: 정당단체 가입
- 3: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 4: 정치토론 참여
- 5: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3) 시민 정체성 영역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감 또는 시민으로서 취해야 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을 시민으로 규정하는 특성 등을 시민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원리 및 시스템 그리고 시민 참여와 동일하게 시민 정체성도 인지 영역, 정의·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ICCS의 조사 항목을 배치하였다.

(1) 인지 영역

시민 정체성의 인지 영역은 민주시민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상이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15개가 시민 정체성 인지 영역에 포함되었다. 2009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 요인 2, 요인 4, 요인 6과 관련된 항목으로 각각 7개, 5개,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가치 신념이고, 요인 4는 바람직한 시민 의식, 요인 6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었다. 항목응답은 4점 리커트식 척도(1=강하게 동의함, 2=동의함, 3=동의하지 않음, 4=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 또는 비동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요인 2(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의 7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국가 별 평균은 <표 III-18>과 같다. 요인 2에 대한 전체 평균은 1.84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2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으로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별로 전체 평균은 2.21이었으며, 홍콩이 1.9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한국 순이었다. 한국은 5개국 중 중간이었으나 평균 자체는 동의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4이었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2.0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홍콩 순이었다. 한국은 1.71로 비교국가들 중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자신을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자체도 동의하는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9였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9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태국 순이었다. 한국은 1.75로 비교국가들 중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아시아 연합을 추진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자체도 1.75로 동의하는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5였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1.9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대만 순이었다. 한국은 1.91로 가장 높은 홍콩과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 자체는 1.90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4번 항목은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9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한국은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서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 자체는 1.95로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5번 항목은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4였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홍콩이 1.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한국은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서 아시아 문화 전통에 대한 자긍심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 자체는 1.88로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6번 항목은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6이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1.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1.88로 비교 국가 중 중간 정도로 아시아의 인권신장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에 비교적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점수 자체는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2에 포함된 항목 중 7번 항목은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3이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한국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1.82로 비교 국가 중 중간 정도로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에 비교적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점수 자체는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구분	2009 ICCS 아시아 모듈 요인2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2 전체	1.82	1.90	1.87	1.84	1.81	1.84
1	1.67	1.76	1.99	1.71	2.03	1.84
2	1.70	1.82	1.90	1.75	1.79	1.79
3	1.90	1.93	1.82	1.91	1.76	1.86
4	1.85	1.91	1.90	1.95	1.86	1.89
5	1.81	1.88	1.87	1.88	1.78	1.84
6	1.94	1.96	1.89	1.88	1.72	1.86
7	1.92	2.01	1.74	1.82	1.75	1.83

요인2 전체: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

- 1: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2: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 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 4: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 5: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 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 7: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다음으로 요인 4(바람직한 시민 의식 가치)의 5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국가별 평균은 <표 III-19>와 같다. 요인 4에 대한 전체 평균은 1.86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4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으로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한국은 5개국 중 가장 높은 평균으로 동의와 반의의 중간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9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만, 홍콩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가장 높아서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비교 국가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가장 강하였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82였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2.0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홍콩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1.92로 비교 국가 중 2위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 자체는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5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5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나서 자기수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 자체는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 중 4번 항목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9였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한국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1.81로 비교 국가 중 중간 정도로 영성을 강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자체도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 중 5번 항목은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2.03이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이 2.11로 홍콩과 함께 정신적 성숙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 자체도 동의하지 않는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요인 6(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5개 항목에 대한 대륙별 그리고 참여국가별 평균은 <표 III-19>와 같다. 요인 6에 대한 전체 평균은 1.70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6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으로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9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의 순이었다. 한국은 5개국 중 가장 높은 평균으로 평균값 자체는 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요인 4에 포함된 항목 중 1번 항목은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2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값 자체는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속하였으나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요인 6에 포함된 항목 중 2번 항목은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61이었다. 국가별로

는 한국이 1.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값 자체는 동의하는 수준의 범주에 속하였으나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요인 6에 포함된 항목 중 3번 항목은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체 평균은 1.76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0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순이었다. 한국은 평균값 자체도 동의와 반의의 중간 정도 수준에 속하였으나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9 시민 정체성 인지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아시안 모듈 요인4, 요인6)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4 5개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4 전체	1.84	1.92	1.89	2.00	1.66	1.86
1	2.04	2.00	1.71	2.25	1.50	1.89
2	1.68	1.77	2.03	1.92	1.70	1.82
3	1.71	1.76	1.68	1.92	1.68	1.75
4	1.74	1.86	1.95	1.81	1.62	1.79
5	2.04	2.19	2.07	2.11	1.82	2.03

요인4 전체: 바람직한 시민의식 가치

- 1: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 2: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 3: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 4: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5: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구분	2009 ICCS 아시안 모듈 요인6 항목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체
요인6 전체	1.70	1.84	1.53	1.96	1.52	1.70
1	1.68	1.91	1.57	2.01	1.52	1.72
2	1.70	1.80	1.44	1.82	1.39	1.61
3	1.73	1.82	1.58	2.06	1.64	1.76

요인6 전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 1: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 2: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 3: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2) 정의·행동 영역

정의·행동 영역에는 2009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5개 항목(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환경보호운동 참여, 열심히 일하기, 항상 법을 준수하기)이 포함되었다. 시민 정체성의 정의·행동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20>과 같다. 척도는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음, 2=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로 평균이 높을수록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정의·행동 영역에 포함된 5개 항목 전체의 평균은 3.37이었다. 5개 항목 중에는 항상 법을 준수하기의 평균(3.51)이 가장 높았고,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의 평균은 3.25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시민 정체성의 정의 영역에 대한 전체 응답의 경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 국제적 수준 비교(ICCS)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대륙				유럽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3.04	3.35	3.31	3.25	2.95	3.01	3.28	2.98	3.00	
2	3.15	3.42	3.27	3.30	3.09	3.46	3.26	2.98	3.00	
3	3.22	3.50	3.41	3.39	3.17	3.37	3.37	3.14	3.05	
4	3.31	3.29	3.29	3.30	3.61	3.17	3.09	3.09	3.51	
5	3.53	3.38	3.61	3.51	3.52	3.76	3.46	3.41	3.53	

구분	2009 ICCS 11개 항목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1	3.43	3.40	3.31	3.28	3.31	3.32	3.14	3.45	3.08	3.50
2	3.38	3.52	3.43	3.34	3.47	3.38	3.01	3.25	3.14	3.46
3	3.46	3.57	3.48	3.44	3.61	3.35	3.31	3.47	3.25	3.61
4	3.12	3.20	3.42	3.39	3.37	3.50	3.39	3.58	3.44	2.61
5	3.42	3.33	3.45	3.33	3.47	3.64	3.63	3.72	3.46	3.64

- 1: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 2: 인권 증진 운동 참여
- 3: 환경보호운동 참여
- 4: 열심히 일하기
- 5: 항상 법을 준수하기

1번 항목은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가 시민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시민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25로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태국, 인도네시아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체코, 영국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08로 평균이 낮은 수준(11위)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 평균 자체는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2번 항목은 '인권 증진 운동 참여'가 시민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시민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30으로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중간 수준이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가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스웨덴, 홍콩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14로 평균이 낮은 수준(11위)이었다. 따라서 앞의 1번 항목과 유사하게 한국 청소년들은 인권 증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 평균 자체는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3번 항목은 '환경 보호 운동 참여'가 시민 정체성과 관련된 시민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39였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 아시아가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파라과이, 태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영국, 스웨덴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25로 평균이 낮은 수준(12위)이었다. 따라서 앞의 1번, 2번 항목과 유사하게 한국 청소년들은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 평균 자체는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4번 항목은 '열심히 일하기'가 시민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시민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30으로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중간 수준이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대륙 간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체코, 영국이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태국, 스페인, 스웨덴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44로 평균이 높은 수준(5위)이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시민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평균 자체도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5번 항목은 '항상 법을 준수하기'가 시민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시민 행동으로서 중요한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전체 평균은 3.51로 시민 정체성 정의·행동 영역의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이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가 높은

순위였다. 반면에 콜롬비아, 멕시코가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국은 3.46으로 평균이 낮은 수준(10위)이었다. 따라서 앞의 1번, 2번, 3번 항목과 유사하게 한국 청소년들은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 평균 자체는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해당되었다.

4. 정책적 시사점

1) 분석 결과의 종합 정리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분석 결과를 재분석한 후, 한국을 중심으로 재분석 결과의 특징적인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위 수준의 항목과 하위 수준의 항목을 추출하여 <표 III-21>과 <표 III-22>와 같이 정리하였다. 항목 추출을 위한 기준은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다. 상대적 기준은 각각의 항목이 속한 비교표에서 가장 높은 순위 또는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경우에 추출하는 기준이었다. 물론 1순위와 2순위의 평균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2순위 항목도 포함하였다. 절대적 기준은 항목 측정 척도를 고려하여 평균값이 척도의 중앙값 이상인 경우에 추출하는 기준이었다. 즉, 4점 척도이고 상대적 서열이 1순위인 항목이라도 그 평균값이 2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출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국내 비교의 경우 시민사회 원리 및 시스템 영역은 7개 항목이 높은 평균으로 추출되었고 2개 항목이 낮은 평균으로 추출되었다. 인지 영역의 경우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사회적·정치적 권리 존중, 정치지도자 선출권의 평등, 법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치적 항의 권리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정치적 권리와 선출권, 정치적 항의 권리 등이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권리의식이 민주시민역량으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의 경우에는 공무원 뇌물 제공과 법률 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였다. 즉, 공무원 뇌물 제공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사회의 법률 역시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법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정치인의 가족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높게 인식하는 항목이었다. 정의·행동 영역에서는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를 주시하는 것이 시민사회 원리 및 시스템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중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본역량 영역에서는 진실추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국내)

구분		높은 평균	낮은 평균
시민 사회 원리 및 시스템	인지	ICCS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ICCS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의·행동	ICCS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 아니다. -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역량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추구성
시민 참여	인지	ICCS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ICCS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정의·행동	ICCS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거 참여 -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기본역량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성
시민 정체성	인지	ICCS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ICCS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정의·행동	ICCS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법을 준수하기 - 열심히 일하기
기본역량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성 	

구분		높은 평균	낮은 평균
시민 사회 원리 및 시스템	인지	ICCS 국제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ICCS 아시아	-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행동	ICCS 국제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이슈 주시
시민 참여	인지	ICCS 국제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ICCS 아시아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의·행동	ICCS 국제	-모든 선거 참여 -정치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 항의 참여
시민 정체성	인지	ICCS 아시아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정의·행동	ICCS 국제	

시민 참여 영역에서는 6개의 항목이 높은 평균 항목으로 도출되었고 낮은 평균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 참여 인식 영역에서는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는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법이나 정치권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위나 항의를 하더라도 평화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에는 의사결정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고위직이나 선생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른이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보다 중요시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위직이나 선생님과 같이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수용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행동 영역의 경우에는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모든 선거 참여와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정치적 권리나 정치지도자의 선출권과 같이 시민사회 원리 및 시스템 영역의 선거와 관련된 행동이 시민 참여의 행동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선거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의 인식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치적 항의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되는 항목이었다.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기본역량 영역에서는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방적 태도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의 특성과 요소 그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시민 참여와도 연결될 수 있다.

시민 정체성 영역에서는 6개 항목이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고 4개 항목이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인지 영역의 경우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이 시민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시아인으로서의 인식이나 지역 연합의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영성이 시민의 바람직한 자질이며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들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동의하는 인식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시민 정체성으로서 정신적 성숙이나 도덕성의 성숙을 위한 인식 그리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특징적으로 해석되었다.

정의·행동 영역에서는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법성이 중요한 민주시민 역량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을 함께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시민의 자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기본역량 영역의 경우에는 탐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적 수준의 비교의 경우 시민사회 원리 및 시스템 영역에 10개 항목이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고 낮은 평균에 해당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지 영역에서 ICCD 국제 조사 항목 중 기업이나 정부의 신문사 소유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국내 분석과 동일하게 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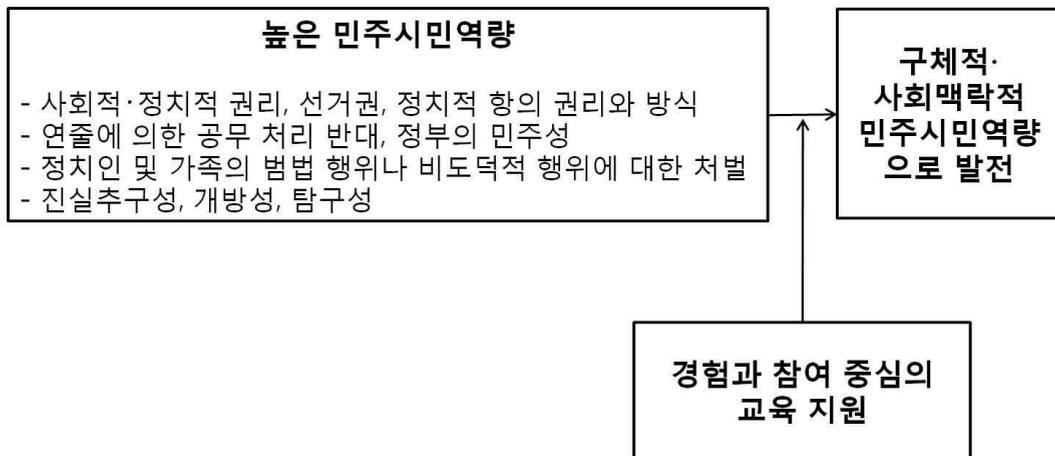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에서는 친인척 등 연줄에 의하여 공적 업무를 처리하거나 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정부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국내 분석과 동일하게 정치인의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였다. 정의·행동 영역에서는 국내 분석과 동일하게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 이슈를 주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시민 참여 영역의 경우 총 9개 항목이 높은 평균으로 도출되었고 낮은 평균에 해당되는 항목은 도출되지 않았다. 인지 영역에서 ICCS 국제 조사 항목 중 비폭력적 정치적 항의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국내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에는 의사결정 시 어른, 고위직, 선생님,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고위직과 선생님과 같은 공적 관계를 갖는 대상과의 관계가 도출되었으나 국제적 수준 분석에서는 그 대상이 더 넓어져서 어른, 부모님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의사결정시 사회적 조언자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보다 충실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시민 정체성 영역의 경우에는 1개 항목이 높은 평균으로 도출되었고, 낮은 평균에 해당되는 항목은 도출되지 않았다. 인지 영역에서 ICCS 아시안 모듈 조사 항목 중 도덕성이 바람직한 시민의 조건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도덕성이 시민 정체성의 요소라는 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정책 핵심 영역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 영역이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시민역량으로서 한국 청소년들이 높게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강점 강화 방식)과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약점 보완 방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 핵심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III-2】 강점 강화 방식의 정책 핵심 논의

앞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영역 중 사회적·정치적 권리, 선거권, 정치적 항의 권리와 방식, 연줄에 의한 공무 처리, 정치인 및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역량 중에서는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위와 같은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정의적 태도의 형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실정을 감안할 때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인식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런 민주시민역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사회맥락적 인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한 정책적 초점으로는 사회적·정치적 권리, 선거권, 정치적 항의 권리와 방식, 연줄에 의한 공무 처리, 정치인 및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경험학습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추천된다. 즉, 이런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사례 중심으로 변환시키고 연극이나 모의법정, 시나리오, 역할극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학교 내에서의 교육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은 기본역량 영역에 해당되는 탐구성, 개방성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상위 민주시민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경험적 방법, 사회참여적 방법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의 기본 역량으로서 이런 탐구성이나 개방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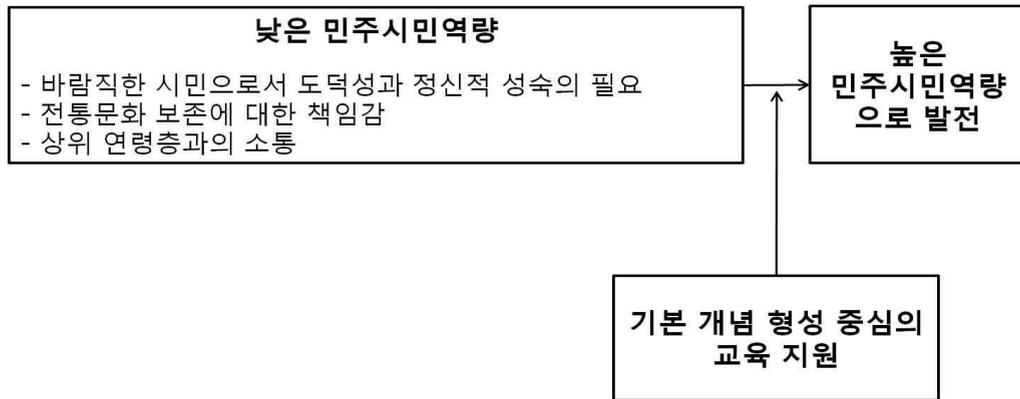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 역시 위와 같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시간에서의 경험적 방법은 수업시간에 제약되기 때문에 보다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회 활동의 개방성, 교내 스터디 서클이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민주시민역량의 연계 등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교육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학교 밖 자원의 활용을 위한 노력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공동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따라서 학교 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민주시민역량의 발전을 위해 학교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적 참여나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역량의 구체화 및 사회맥락화를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밖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시간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높은 민주시민역량뿐만 아니라 낮은 민주시민역량을 발전시키는 것도 정책적 초점이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이나 정신적 성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부족, 상위연령층과의 소통 등에서 낮은 수준의 민주시민역량을 유추할 수 있었다. 물론 측정 항목의 내용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강조되어 응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항목들에서 민주시민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낮은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선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등에서 낮은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구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교과서나 관련 자료 등에서 낮은 민주시민역량으로 파악된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내용을 검토하여 이후의 교과서 편성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림 III-3】 약점 보완 방식의 정책 핵심 논의

더불어 높은 민주시민역량과 같이 적극적으로 경험 학습의 전략을 학교내외에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정착을 위하여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앞서의 높은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학습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의 프로젝트 또는 유사한 방식의 교육방식이라면, 낮은 민주시민역량을 위한 경험 학습은 교사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잃어버리거나 점점 사라지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와 발표, 보전 방법에 대한 토론 등을 고려하되, 많은 부분에서 교사나 주변인의 지원과 참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4 장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정부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3. 민간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제 4 장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교육지원방안이나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 및 이를 통합한 지원체계 등을 파악하였다.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을 통합하여 분석·보고한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보고서 등(강영혜 외, 2011; 조찬례 외, 2011)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한 국내외의 민주시민역량 교육기관이나 사례를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국가위원회, 입법부, 사법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포함하였다.

정부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 - 국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입법부: 국회 의정연수원 - 사법부: 대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삼성꿈장학재단 - 민간: YMCA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은 사회과 등의 과목 시수에 표시된 교육과정이고 비정규 교육과정은 방과후교육과 같이 정규교과에는 포함되지 않는 과정을 의미한다.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 사업(이하 가사토)', '학교문화 연구·선도학교',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 '찾아가는 교육연극'이 사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국가위원회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였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에는 국회 의정연수원과 대법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을 포함하였다. 민간 차원의 경우 기업은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교육지원사업을 다루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YMCA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을 다루었다.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신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과 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분석하기도 하였다.

2. 정부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 학교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 정규 학교교육

학교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정규 학교교육과 비정규 학교교육으로 구분된다. 정규 학교교육은 교과서를 통하여 정규 학교교육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의미한다. 비정규 학교교육은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사토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정규교과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의미한다. 정규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시수나 교과서 등이 사전에 계획되고 배포되어 그대로 교육이 진행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하여 규정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고 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빠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다양한 교육요구를 반영하는데에는 한계점을 갖는 영역이다.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정규교육에 대한 시수나 교육과정 편성의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시민역량 교육이라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사회과, 체육과, 국어과 등의 다양한 교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시수나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나 연구물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교육과정 편성이 각급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청 등에서 자율화되는 추세이고, 교육과정의 계획 역시 그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청 등에 따라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일관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운영 방침이나 시수 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규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과 지원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목적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교육목적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의 2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2조)

교육기본법 2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목적 및 내용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정규 학교교육에서는 학교급이나 교과목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수준이나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더라도 교육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하고 또 이를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 명시해야 한다(강영혜 외, 2011). 이런 목적을 모든 교과에서 반영해야 하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교과목은 사회과 계열이다. 사회과 계열에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 경제, 법 등의 과목들이 포함되는 영역으로 민주시민역량으로 거론되는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12년 고시된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정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이 교육목표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든지, ‘다양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요소들이 융합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표현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사회과목의 목표 중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표현으로 민주시민역량의 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이런 수준의 표현은 민주시민역량이나 시민성 등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참여, 환경생태 보호, 지역사회 재건, 평화 인권 보호 등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목표에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각론의 차원에서는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사회과의 ‘공정성과 삶의 질’ 부분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권자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그 외에도 다문화 이해, 관용성, 사회봉사, 생태환경, 지속가능발전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강영혜 외, 2011).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핵심적 교과인 사회과에서 목표 등에서 민주시민역량이나 교육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제시 및 포함이 필요하고, 이러 목표들이 사회과 구성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 등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나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사회과 교과와 전체적인 구성이 민주시민역량 또는 시민성 등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교수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지침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단지 이론적 강의나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나 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평가 방법도 이런 점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그러나 실제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수업의 방법 등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영혜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만족도가 1.939로 낮은 편이었으며 고등학교 학생의 만족도가 1.828로 중학교보다 낮았다. 또한 수업방법이나 수업시간표, 학교자료, 학교규칙, 방과후활동 결정에서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의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1.794에서 2.510으로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강영혜 외, 2011).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상에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약하게나마 참여형 교육방법에 대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교와 교실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목표와 방법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덕교과에서도 팀을 구성하여 다문화인구에 대한 호혜성을 논의하거나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미술교과에서도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팀으로 하면서 다른 팀원에 대한 배려나 인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법칙을 적용하는 체험을 하는 등 교과 내용이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교수·학습방법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과들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과나 다른 정규교과와 유사하게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영혜 외, 2011). 따라서 한국의 정규 학교교육의 교과에서는 사회과 등에서 교육내용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목표나 교수방법에 있어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전략이 적용되지 않거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는 등의 한계점이 보인다. 더불어 사회과 이외의 교과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가능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2) 비정규 학교교육

비정규 학교교육은 정규 학교교육보다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보다 적극적이다. 민주시민역량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 학교교육도 있고, 비록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교수방법 등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일(가사토) 사업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사업의 구성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가사토’ 사업의 원래 취지는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으로 변화되면서 토요일에 보호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이런 취지로 ‘가사토’ 사업에서는 지자체, 학교,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교육 프로그램,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등 7개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과천시, 2012).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동향을 보면, 생태환경, 역사문화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사토’ 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적지 않은 부분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등 다른 프로그램 유형의 경우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사토' 사업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의 비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표 IV-2

'가사토' 네트워크 참여기관 유형별 빈도

(단위: 개, %)

네트워크 참여기관 유형	빈도	%	누적%
지자체	89	5.7	5.7
교육청	134	8.6	14.3
대학	76	4.9	19.2
기업	27	1.7	20.9
도서관	121	7.6	28.5
복지시설	189	12.1	40.6
문화예술시설	62	4.0	44.6
지역인적자원 참여	362	23.1	67.7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109	7.0	74.7
기타	397	25.3	100.0
합계	1,566	100.0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p.19

2012년의 경우 '가사토' 사업은 총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10개), 서울(9개), 부산(7개) 순으로 '가사토' 사업 선정 지자체가 분포하였다. 예산으로 보면 2012년의 경우 국고지원이 28억 7천만 원, 대응투자금이 28억 3천만 원으로 총 57억 원의 규모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60개 지자체별로 각각 약 1억 원의 예산이 운영된 것이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의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형태였고 주요 참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과 같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참여(23.1%), 복지시설(12.1%), 도서관(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총 1,566개의 참여기관이 존재하여 60개 지자체별로 평균 26.1개의 기관이 '가사토' 사업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재능기부 등의 지역인적자원 참여가 많다는 점, 이들이 대부분 강사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역기관과 학교의 네트워크 강화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2012년 '가사토' 사업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은 총 1,380개였고 수강인원은 13만 명이 넘었다. 이 중 직접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표명한 프로그램은 57개(4.1%)로 비교적 적은

수였지만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민주시민역량에 해당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283개(20.5%)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또한 수강인원의 경우에도 36,300명(27.6%)으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여기에 교수·학습방법상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가사토' 사업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 '가사토' 주제유형별 프로그램 수 및 수강인원

(단위: 개, 명)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수	%	수강인원	%
과학기술교육 프로그램	91	6.6	6,981	5.3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478	34.6	35,007	26.7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57	4.1	3,867	2.9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114	8.3	23,761	18.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102	7.4	18,674	14.2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	124	9.0	13,759	10.5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74	5.4	9,634	7.3
기타	340	24.6	19,765	15.0
합계	1,380	100.0	131,448	100.0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p.34

'가사토' 사업 자체가 민주시민역량 교육으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측면은 프로그램 수강인원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이다. 2012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은 14,608명(11.1%)이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경제적 소외계층이 사회 전체에서 보더라도 다수는 아니지만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중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IV-4 경제상황별 '가사토' 프로그램 수강인원

(단위: 명)

경제상황 유형	빈도	%	누적%
기초생활수급자	2,717	2.1	2.1
차상위계층	4,378	3.3	5.4
일반저소득층	7,513	5.7	11.1
프로그램 수강 총원	131,448	·	·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p.65의 표를 일부 수정함

최근에는 ‘가사토’ 사업이외에도 비정규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단위학교 전체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인 교육부 차원에서는 2012년 10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치활동이나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활동까지 포함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졸업식, 입학식, 학교 축제 등의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더불어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각종 규정의 제·개정과 적용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학교공동체에서의 학생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운영에서도 토론, 협동, 배려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형 및 토론형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 간 멘토링도 활성화하여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의사결정, 민주적 참여, 타인배려 등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자료나 지침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2012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기초하여 2013년에는 ‘학교문화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표 IV-5 2013년 ‘학교문화 연구·선도 학교’ 유형

유형	운영주체	주요 사업 내용
학교문화 선도 부문 (A형 : 110개교)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축제, 졸업식 등 학생 중심의 학교 행사 문화 조성 • 동아리활동, 학생회, 학생참여 규칙 제정 등
법제교육 선도 부문 (B형 : 8개교)	8개 시도교육청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시 전문적 법제교육 제공 •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 활동을 통한 학교문화 개선 • 법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언어문화 개선 부문 (C형 : 32개교)	시도교육청 한국교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언어폭력 관련 생활지도 모델 개발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언어문화 개선 • 육설퇴치 캠페인 등

* 출처: 교육부(2013). p.1

‘학교문화 연구·선도학교’는 전국적으로 150개교를 선정하였는데,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도 부문(A형), 학교생활규칙 등에서 학생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공동체 및 법 교육 차원에서의 법제교육 선도 부문(B형),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언어문화 개선 부문(C형)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유형이 110개, 8개, 32개 학교가 지정되었다(교육부, 2013).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 20개교 지정 및 ‘찾아가는 교육연극’ 15개교 지정을 통하여 체험형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법을 학교에 적용하도록 유도·지원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3).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정 및 지원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나 민주시민의 역량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특색을 갖는다.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다루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민주주의의 현장을 실제로 보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현장으로는 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 관련 역사유적지, 시민단체,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다른 학교 등이다(경기도교육청, 2013).

‘찾아가는 교육연극’은 전문극단에서 인성, 민주시민의식,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연극을 준비하여 학교에서 상연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연극을 보고 난 후 토론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연극의 주요 내용으로 공동체 생활의 갈등, 민주적 학생 문화, 배려와 나눔의 문화 등이며, 학생들은 연극의 전·중·후에 연극에 참여하거나 관람을 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교육연극에 몰입하게 된다(경기도교육청, 2013).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과 ‘찾아가는 교육연극’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과 ‘찾아가는 교육연극’ 프로그램 역시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비정규 교육과정 또는 학교 밖 체험의 형태로 진행되는 비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가사토’, ‘학교문화 연구·선도학교’,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 ‘찾아가는 교육연극’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민주시민역량 교육과정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들로서 학교 및 학교 밖의 자원을 활용하는 경향, 교과서의 내용을 체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향,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경향들은 최근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의 교육 역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방향이 체험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 각종 위원회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교육부 및 교육청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들도 존재한다. 우선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국제기구로서 국가위원회 중에서도 높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한 영역이다. 특히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이 분야의 교육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권에 대한 정보를 사이버, 웹진, 인권도서관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인권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이다. 전자는 교육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상담이나 안내의 성격이 강한 것이며, 후자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지 주요 담당부서는 인권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사이버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권배움터, 인권용어 해설이나 인권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인권지식터, 인권교육 콘텐츠와 인권영화 등을 제공하는 인권체험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방문교육 등 오프라인 형태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3a).

표 IV-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제공서비스

사업명	유형	사업 내용
인권배움터	사이버교육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교육모바일 웹 서비스, 세계인권선언 소개
인권지식터	사이버정보	인권용어해설, 인권교육자료
인권체험터	사이버교육	인권교육 콘텐츠, 인권영화 및 DVD 신청
위원회방문교육	오프라인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형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의 경우 중앙 및 지방인권사무소까지 합쳐서 총 38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인원은 1,300명 이상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a).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상별(노숙인, 유아보육교사, 초중고 교사, 노인, 공무원, 장애인, 군인, 기업인, 스포츠)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대상별 인권강사 양성과정 및 보수과정, 지방의원인권 리더십과정, 방송 및 언론 분야 인권 워크숍,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과정 등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a). 즉, 2013년도 하반기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인권감수성 향상과 강사 양성 및 보수 분야의 교육이 다수이고 그 외에 워크숍 등의 특수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총 44개 과정을 192회 실시하고, 총 수강인원은 14,229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인권교육 계획에서도 인권리더십과정,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감수성과정, 의무교육과정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찾아가는 인권특강도 운영되고 있다. 찾아가는 인권특강의 경우 다문화 분야, 학교폭력 분야, 장애아동 분야, 정보인권 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찾아가는 인권특강은 연중으로 실시된다.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 역시 다수 진행되고 있다. 2013년도 사이버교육과정은 공무원, 학교 교사, 시민 대상으로 총 172회에 걸쳐 34,000명을 수강인원으로 실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사이버교육과정으로는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심화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행정과 인권, 장애차별 예방과정, 성차별예방과정, 차별일반과정(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등 4개 과정), 군대와 인권과정의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이상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과 사이버교육과정 중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2013년의 경우 찾아가는 인권특강 3개 과정, 방문인권교육 프로그램, 사이버교육과정 중 인권의 이해(심화과정)를 제외한 8개 과정이다. 물론 학생이라고 대상을 명시한

경우는 인권특강 3개 과정, 방문인권교육 프로그램이고 사이버과정은 시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표 IV-7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2013년 기준)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교육일정	교육대상
오프라인 교육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특강	연중실시	협의추진	일반시민, 학생 등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인권교육특강	6월~10월	협의추진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특강	6월~10월	협의추진	초중고 학생, 청소년
	방문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중실시	신청접수시 진행	공무원, 일반인, 학생 등
사이버 교육	인권의 이해	9	2월~11월 (8월 휴강)	공무원/시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9	“	공무원/시민
	행정과 인권	9	“	공무원/시민
	장애차별 예방과정	9	“	공무원/시민/교사
	성차별예방과정	9	“	공무원/시민/교사
	차별일반과정	계획중	-	공무원/시민/교사
	군대와 인권과정	계획중	-	공무원/시민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	9	“	시민/교사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3b). p.11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청렴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소송 등을 관장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오프라인과 사이버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하에 청렴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보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돕고 교사의 관련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청렴교육 연구학교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a).

청렴교육 연구학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청렴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각종 청렴교육 기법과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정하여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및 해당 학교를 의미한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a). 일종의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청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청렴교육 연구학교 중에는 청렴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청렴교육 교수학습활동, 청렴교육 실천중심 참여학습 프로그램 등이 우수 사례로 발굴되어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전 변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에 ‘맑음터’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청렴생활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전시하기도 하고, 청렴교육에 참여해서 만든 학습결과물을 게시하여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사례가 우수 사례로 보고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b).

또한 청렴교육 교수학습활동의 우수 사례로는 인천 변방초등학교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청렴관련 덕목을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로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내용의 구성, ‘파란마음 하얀마음’이라는 교재 제작,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재량 및 특별활동의 교과에서 청렴 덕목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청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및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b).

그리고 청렴교육 실천중심 참여학습 프로그램의 사례도 제시되었는데 대전 흥룡초등학교의 청렴의 날 운영이 그것이다. 이 학교에서의 청렴의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매 회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청렴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상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년이었고, 청렴 사례 조사, 청렴 관련 나의 주장 발표하기, 청렴도서 독후 활동, 청렴 연극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b).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교육은 주로 공무원 등 성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청렴교육 연구학교가 실행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연구하고 이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로 실시하여 청렴, 정직, 공정성 등 민주시민역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성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대부분은 오프라인과 사이버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IV-8 대전 홍릉초등학교의 '청렴의 날' 프로그램

청렴의 날	행사명	대상	관련덕목
3. 27.(토)	- 청렴 동영상 시청 및 청렴 사례 조사	1-6학년	공정 책임 정직 약속 절제 배려
4. 17.(토)	- 청렴 관련 나의 주장 발표하기	1-6학년	
5. 15.(토)	- 청렴 인물에게 아름다운 편지 쓰기	1-6학년	
6. 19.(토)	- 청렴 도서 독후 활동 저학년 - 독후 그리기, 고학년 - 독후감 우리 학급 청렴왕 뽑기(1학기)	1-6학년	
7. 16.(금)	- 홍릉 나눔 바자회, 청렴 캠페인(학생, 교사, 학부모)	1-6학년	
9. 18.(토)	- 청렴 연극대회	1-6학년	
10. 16.(토)	- 청렴 가족신문 만들기, UCC 제작	1-6학년	
11. 20.(토)	- 청렴 그리기(캐릭터·만화·포스터·자유화 등) - 우리 학급 청렴왕 뽑기(2학기)	1-6학년	
12. 18.(토)	- 청렴 인물 탐구, 자신의 청렴 사례 발표하기	1-6학년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부터 민주주의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정치자금 사무 관리, 민주시민정치교육, 선거 및 정치제도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운영되는 국가위원회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a). 특히 민주시민정치교육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선거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정당 및 후원회 관계자, 대학생, 교사, 일반국민에 대한 연수 실시 및 연수 자료 개발, 민주시민포럼 및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등을 통한 민주주의 해외 전파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위하여 선거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교수기획부, 시민교육부, 제도연구부의 3개 하위부서로 구성되며, 민주시민정치교육은 주로 시민교육부의 주요 업무에 해당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a). 2013년의 경우 선거연수원의 주요 교육 영역은 민주시민정치교육, 직무교육,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사이버교육의 4개 영역으로 총 54개 과정, 2,810회의 교육 횟수, 수강인원은 143,48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b). 이 중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정치교육의 미래유권자 과정으로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새내기유권자 연수, 청소년리더 연수가

포함된다. 이 세 과정은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사이버교육과정도 운영되는데 청소년이 직접 대상인 경우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이해과정이고 일반시민으로 공개되어 있는 과정은 공직선거법 이해과정 등 정치관계법 교육과정들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b).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거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미래지도자 정치캠프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회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3일 정도 오프라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선거체험, 특강, 미래지도자의 역할 및 평가 등이다.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곧 선거권을 갖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하루 정도 출강 형태로 진행된다. 즉, 시군구별로 약 1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강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시된다. 주요 교과목은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와 의무행사. 선거와 참여의 가치이다. 청소년 리더 연수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1일 출강 형태의 과정이다. 시군구별로 4회씩 실시하며 1회에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 학생회장 선거의 의미 및 절차, 주권의 의미와 참여의 가치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c).

표 IV-9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청소년대상 교육과정(2013)

유형	구분	과정명	대상	일정	횟수	인원
오프라인 과정	미래 유권자 과정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고등학교 학생회장	7월	1	100
		새내기유권자 연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종료 후	250	25,000
		청소년리더 연수	초·중등학생	연중	1,000	40,000
사이버 과정	민주시민 정치교육	민주시민정치교육 이해과정	교사·학생 등	2월~ 12월	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경우 교육 대상은 주로 정당 등 선거관계자, 공무원, 일반시민이고 청소년은 일부 해당된다. 특히 미래의 선거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대부분 초·중등학교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대상에서는 한계가 보인다. 대신 일반학생들은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민주시민정치교육 이해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초·중등교사, 일반시민, 초·중등학생이 모두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c) 초·중등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수준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사이버로 제공되는 '민주시민정치교육 이해과정'의 주요내용은 민주주의 준법, 토론의 매너와 기술,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 참여식 교수법 활용방법 및 시연, 정당정책교육 프로그램 등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c).

3) 입법부 및 사법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행정부 및 관련 국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되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교육적 역할도 수행되고 있다. 입법부는 대표적으로 국회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분석하였고, 사법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분석하였다.

(1) 국회

국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국회 의정연수원을 통한 연수프로그램과 각종 국회체험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의정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국회 조직원이나 대학원생, 교사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의정연수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국회체험, 어린이국회의 체험 형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국회의정연수원, 2013a).

시민의정연수에 포함된 다문화가정 어린이 국회체험은 대한민국 국회 소개, 국회 둘러보기(방문자센터, 본회의장 등), 국회의원과의 만남, 특강, 소통의 밤(레크리에이션 등), 체험학습의 6과목으로 총 15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체험학습이 6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소통의 밤 3시간, 국회 둘러보기 2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5월 1회 운영되고 대상은 전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70명(초등학교 5, 6학년)이다. 여기에 보호자 70명이 추가된다(국회의정연수원, 2013b).

2013년의 경우 5월 1일과 2일에 국회 헌정기념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 국회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강 주제는 한국 문화의 이해, 체험학습은 경복궁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대상자 선발은 각 시도교육청 관할지역 다문화자녀 현황에 기초한 비율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국회의정연수원, 2013c).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2년까지 8회가 진행되었다. 2012년의 경우 246개교 3,991명의 초등학생이 ‘어린이국회 연구회’ 회원으로 등록하였고, 법률안 및 질문서 제출 건수는 303건이었다(대한민국 어린이국회, 2013a).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은 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입법활동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방식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별 1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전국 247개교)에 ‘어린이국회 연구회’를 조직(교사 1명, 어린이 20명)한다. 그리고 ‘어린이국회 연구회’의 활동에는 어린이국회 연구회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체험교육, 지역공동체 문제 발굴 및 법률안 등의 작성·제출, 우수법률안 및 질문서 선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어린이 국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진행, 우수법률안 및 질문서 발표, 최우수 법률안 투표, 연구회 시상 등이 실시된다. 이후에 우수 법률의 경우 정식입법절차를 추진하기도 한다(대한민국 어린이국회, 2013b).

표 IV-10 ‘어린이국회’ 추진체계

구분	활동
어린이국회 연구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거구별 1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 선정(총 247개교) - 지도교사 1명, 학생 20명 내외 구성
어린이국회 연구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국회의원(연구회 대표) 선임(247명) - 지도교사연수 및 어린이국회연구회원 국회체험교육 - 지역공동체 문제 발굴, 법률안 및 질문서 작성·제출 -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 선정·심사(국회)
어린이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 활동 - 본회의(국회의장 주재) -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 발표, 최우수 법률안 투표 - 우수 연구회 시상
사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법률안 정식 입법절차 추진 - 우수 법률안을 국회의원 및 행정부에 통보

* 출처: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

사이버형태로도 의정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의정체험은 아동 및 청소년이 입법활동, 정당활동 등 사이버 메뉴를 통하여 제안하기, 동의, 반대하기, 토론하기, 창당 및 입당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이버 의정체험의 메뉴에는 의회교실, 입법활동, 정당활동, 퀴즈교실, 참여마당,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다(사이버 의정체험, 2013a).

의회교실에서는 민주주의 및 민주정치제도, 대한민국 헌법, 국회 및 국회의원 알아보기, 국회의 정연수 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사이버 의정체험, 2013a). 사이버 의정체험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과 유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고 법안을 처리하는 등의 과정이 인터넷으로 나오는 입법활동 메뉴가 있다. 사이버 의정체험에 가입한 아동 및 청소년은 위원으로서 등록이 되고 각종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켜보게 된다(사이버 의정체험, 2013b).

정당활동 메뉴에서는 창당을 하고 당원을 모집하고 관련된 정당활동을 하는 사이버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명예의 전당도 있어서 사이버 의정체험에 등록된 정당의 활동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원이 많을수록 높은 순위를 받기 쉽게 되어 있다(사이버 의정체험, 2013c). 그 외에도 퀴즈교실, 참여마당, 도우미 등의 메뉴를 통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각종 의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2) 대법원

사법부 차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어린이 대상 민주시민역량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관람과 사이버 홈페이지를 통한 법 관련 안내 및 교재 제공 등이 있다. 즉,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관람과 사이버 정보 제공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홈페이지인 ‘어린이 마당홀’에서는 대법원과 사법부, 법원이 하는 일, 법관이 되려면, 재판의 종류와 절차, 법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및 교재 다운로드, 알쏭달쏭 OX퀴즈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a). 법 교육 교재는 총 6권(1권: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 2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3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 4권: 교과서 속 법원세상, 초등학생용 법 교육 교재 1, 2)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b).

대법원 관람의 경우 사이버 견학과 실제 관람으로 구분된다. 사이버 견학은 ‘어린이 마당홀’에 있는 사이버 견학 메뉴를 통하여 가능하다. 5분에서 최대 13분까지의 7편의 동영상에 탑재되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c). 더불어 실제 관람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관 설명 프로그램, 단체관람 코스, 개인관람 코스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전시관 설명 프로그램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에 단체 관람객을 위하여 전시관 등을 설명하는 프로그램과 개인을 위하여 오후에 제공되는 설명 프로그램이

있다. 단체 관람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사전 예약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개인 관람은 별도의 예약 없이 가능하다(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d).

3. 민간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민간 차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희박한 관계로 국내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민간 차원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여 관련된 사업을 분석하였다. 기업에서는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사업을 현황과 지원체계를 분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YMCA의 지원사업을 현황과 지원체계를 분석하였다

1) 삼성꿈장학재단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삼성꿈장학재단은 2006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시작하여 2013년 현재는 삼성꿈장학재단으로 각종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삼성꿈장학재단, 2013a). 2013년의 비전은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 구현'이고 이를 위하여 개인성장 기회 지원, 배움공동체 지원, 글로벌 리더십 함양 지원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멘토링꿈장학, 리더육성장학, 배움터교육지원, 글로벌장학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삼성꿈장학재단, 2013b). 이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주제의 다양성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은 지역형 교육복지사업과 전문형 교육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삼성꿈장학재단, 2013c). 2012년의 경우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은 93개 사업에 8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중 교육복지중점사업의 경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는데, 사업 수는 185개, 참여기관 수는 337개, 예산은 약 33억 원이었다. 2012년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유형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50개(55.0%), 학교가 59개(21.6%)로 전체 기관의 76.6%를 차지하였다. 지원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6,000명(30.2%), 초등학교 고학년이 7,561명(38.0%), 중학교 학생이 5,134명(25.8%), 고등학교 학생이 776명(3.9%), 탈학교

학생이 402명(2.1%)이었다(삼성꿈장학재단, 2013d).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학습지도, 진로지도, 과학, 문화, 예술,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에는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주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의 하천을 청소하고 이런 경험에 기초하여 마을신문 발간, 환경동영상 개발, 마을 어른 돌봄, 마을 전봇대 색칠하기 등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환경생태 보호, 지역에 대한 이해, 세대 간 호혜성, 지역사회참여 등 민주시민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삼성꿈장학재단, 2013e). 이런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이 민주시민역량 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기업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의 포함,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관련 기관의 포함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표 IV-11 2012년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수	참여기관수	집행액(원)
사업 유형별	교육복지 중점사업	185	337	3,296,606,281
	지역교육네트워크사업	10	311	1,733,600,000
	주제별 교육사업	70	225	1,945,601,769
	창의교육사업	8	8	543,000,000
	합계	93	881	7,518,808,050
구분		사업수(개, %)		
기관 성격별	지역아동센터	150(55.0)		
	학교	59(21.6)		
	청소년 관련기관	14(5.1)		
	교육복지단체 및 협의회	3(1.1)		
	대안학교	5(1.8)		
	복지관	11(4.0)		
	다문화	3(1.1)		
	시설	3(1.1)		
	기타	25(9.2)		
합계	273(100.0)			

구분		학생수(명, %)
학교급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6,000(30.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7,561(38.0)
	중학교 학생	5,134(25.8)
	고등학교 학생	776(3.9)
	탈학교 학생	402(2.1)
	합계	19,873(100.0)

* 출처: 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

2) YMCA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시민사회단체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고민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하였고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YMCA, 천도교 청년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확대되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시민사회단체마다 다양한 접근방법과 이해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었다. 일부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시민정치교육과 같은 것이므로 정치교육으로 이름을 변경·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김기현, 2010). 그만큼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접근과 이해가 정치교육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이 매우 다양화되어 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화되는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오랫동안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해 온 YMCA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YMCA는 기독교사회운동 단체로서 출발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이다. 한국에서는 1901년부터 YMCA가 운영되었고 현재는 전국에 59개의 지부와 재일본한국, 전국연맹까지 포함하면 61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적 단체이다(서울YMCA, 2013a). YMCA의 명칭 자체가 의미하듯이 교육프로그램 등 활동의 주요대상이 청소년이었으나 최근에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YMCA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클럽활동인 그룹활동, 학습과 체험 그리고 바자회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활동, 집합교육의 형태로 장기합숙 프로그램인 캠프활동, 영상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문화환경 운동, 문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시민운동 영역에서 하늘씨앗신용경제교육과 같이 청소년의 경제교육 등 청소년 운동 영역 이외에도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운동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사회체육운동, 국제교류 및 협력운동 등에서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YMCA는 청소년 운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12 YMCA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 사업

운동 영역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운동	그룹활동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등 클럽활동
	문화활동	문화·음악·예술 분야 교육 및 학습
	캠프활동	초록마을캠프 등 장기입소 집합교육
	디지털 문화환경 운동	영상 미디어, 사이버 등의 문화활동
	청소년 보호활동	문제청소년 보호 활동
시민운동	시민소비자 권익보호 활동	하늘씨앗신용경제교육
사회체육운동	스포츠복지활동	독거노인돕기 울타리 봉사클럽
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 조직프로그램	장애/비장애 아동 및 청소년 사회통합서비스
국제교류 및 협력운동	청소년 교류	세계청소년회의 등 국제 교류
	지도자 교류	청소년지도자 초청 내한 행사 청소년단체지도자 해외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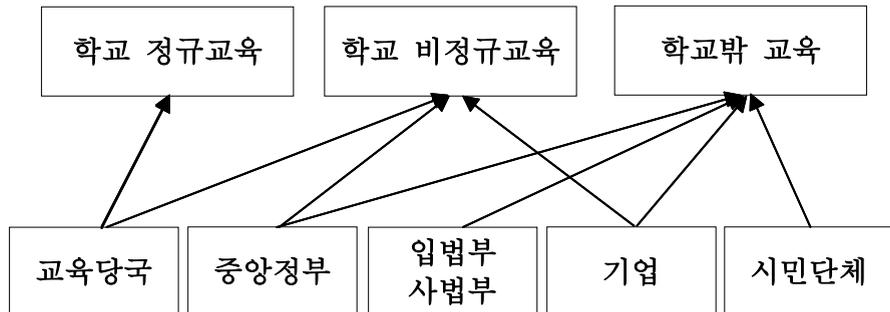
* 출처: 서울YMCA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자료.

이런 기본적인 영역과 활동은 전국의 YMCA에서 모두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은 YMCA지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YMCA의 경우에는 어린이 지도자 클럽을 위한 리더십 육성 프로젝트, 어린이 리더십 학교, 방학 청소년 자원봉사체험 학교, 청소년 음악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YMCA, 2013b). 한편 대구YMCA의 경우에는 청소년운동으로 개구쟁이 생명나라 축제, 청소년 생명 평화제, 농촌 봉사활동 등 생명과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이 두드러진다(대구YMCA, 2013a).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운동이면서도 시민사회개발운동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청소년운동의 지향점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이나 시민사

회개발이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대구YMCA, 2013b). 즉, YMCA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부별로 차별성을 두어서 지역의 특성이나 지향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체계를 그려보면 아래의 【그림 IV-1】과 같다. 앞서 분석한 기관만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인 교육부나 교육청 등은 주로 교과서, 교육시수, 방과후 교육 등의 형태로 학교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위원회 등의 중앙정부는 대부분 학교 밖 교육의 형태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운영하며 일부 학교 비정규교육의 형태로도 진행된다. 그리고 기업이나 시민단체는 학교 밖 교육의 형태가 주를 이루며, 일부 학교 비정규교육의 형태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IV-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제공 체계

이런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합의된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관점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향과 구성요소 등에 대한 일관된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계획·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정치교육으로만 해석하

고 용어를 정치교육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런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어떤 요소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전담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를 국가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학교 및 학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활용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주요 구성요소 등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책적 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행 학교 정규교육의 경우 사회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교과의 목표 등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구성요소나 정확한 방향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학교 정규교육에서 명확한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교육내용을 보면 민주적 절차나 법체계, 자원봉사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교과목표에서는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과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도 교수방법 등을 활용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교과목표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교사연수 등의 방법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학교 정규교과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한국에서 부족한 상황이고, 제한된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향후 한국의 선진국 진입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정규교과의 전 영역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더불어 학교 정규교육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정규교육은 시험,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하여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실시한다든지 민주시민역량 교육 자체를 매우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질화 하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학교 정규교육을 대체하거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정규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이를 정규교과의 시수나 학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제한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보다 실질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인증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단위든 또는 기관 단위든 민주시민역량 교육으로서의 적절한 자격과 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 후 인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인증된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이를 학교 정규교육에 준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원론적으로 학교 정규교육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시 등의 경쟁 문화를 개선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지만,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경우 팀으로 집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적용한다든지,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연극기법 등은 이미 그 효과가 학문적으로 입증된 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체험은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규교과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정규교과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난관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학교 밖의 체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관련 교과 운영에서 학교 밖의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서 창의 체험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연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위원회나 입법부 및 사법부와 같은 중앙정부 기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며, 교육프로그램 보다는 체험이나 관람의 형태로만 운영하는 것도 존재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중요기관이기는 하지만 학교만으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다. 관련된 기관에서도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향과 모형을 수용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산하에 교육기능을 전담하는 연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학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각 중앙정부 기관의 중요 업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에서는 매우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오히려 사회 상황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것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필요사항이며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 5 장

민주시민역량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목 차

1. 분석 개요
2. 국내 우수사례 분석
3. 해외 우수사례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민주시민역량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이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내의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교육과정 등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국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학교와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학교와 평생교육은 교육정책 및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기존의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및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학교체제와는 구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의 체제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은 학교 밖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환경에서 실시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포함한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비공식 문서, 내부 회의자료 등을 의미한다. 2차 자료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서적 및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언론 보도 기사, 민주시민역량 교육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의 체험방문기 등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의 추천도 국내외 사례를 찾는데 활용하였다. 관련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근무자, 관련 연구물 발표자 등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사례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

문헌 자료 및 전문가 추천을 통하여 1차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학교 영역에 7개, 평생교육 영역에 21개였다. 1차 사례 목록을 가지고 연구진 회의 및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교육 분야 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에 충분한 가를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우수사례로는 국내의 경우 학교 영역에서 애월고등학교, 풍납중학교, 작전초등학교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성미산학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사례가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해외의 우수사례는 학교 영역에 미국의 Project Citizen 프로그램과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영역에는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독자상담 및 독서정보 프로그램,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 6개 사례, 국외 5개 우수사례가 분석되었다.

표 V-1 민주시민역량 국내의 사례 분석 대상

	국내	국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월고등학교 - 풍납중학교 - 작전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Project Citizen 프로그램 - 미국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 - 일본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 성미산학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독자상담 및 독서정보 프로그램 -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는 문헌 자료와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문헌 자료는 각각의 사례와 관련된 보고서나 학술 논문, 해당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물, 해당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내부 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면담 자료는 사례 기관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내부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심층 면접을 위하여 우선 해당 사례에 대한 문헌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본 연구의 사례로서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면담 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사전 연락을 취한 후 면담 일정 등을 결정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하여 2~3명 이상의 연구진이 함께 방문하였고, 사전에 면담의 목적, 연구개요, 면담 질문, 면담 시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개요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면담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면담을 위해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였다. 면담지에는 기관의 역사와 배경, 주요 프로그램,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해당되는 사례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생들의 변화,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조언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면담 초기에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를 허락받고, 녹취 내용에 대한 추후 확인 작업을 약속하였다. 면담 과정은 주로 면담 대상자가 근무하는 곳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의 다른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녹취된 면담 내용은 전사되어 이후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면담 내용과 문헌 자료 등은 사례 내용의 비교를 위하여, 배경 및 목적, 추진체계, 정책 및 사업내용, 성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 국내 우수사례 분석

1) 학교 우수사례 분석

(1) 애월고등학교의 학생자치

가) 배경 및 목적

애월고등학교는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이다. 애월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의 읍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타 학교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결손가정,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역적 특성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학생들 역시 낮은 자존감과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학교생활에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며,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흔히 공교육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문제점(부적절한 학생 품행, 일탈, 교사와 학생 간의 괴리 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펼치고자 애월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참여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애월고등학교의 교육이념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의 기대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기르고 학생의 능동적 노력을 강조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러한 기대상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고운말을 쓰며, 주변을 청결히 하고, 인사를 잘 하자”는 창송(푸른 소나무; 애월고등학교의 교목, 애월고등학교 구성원을 일컫는 별칭으로 사용함)인의 다짐을 제시하고 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추구하는 바로 제시함으로서 보다 현실적이지만 뚜렷한 교육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경영 목표를 실현하고자 애월고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p.88).

- 가.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즐겁게 참여하며, 기본 질서를 지키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 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한다.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책임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행사의 중심이 되어, 올바르게 건전한 학교 행사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한다.
- 다. 학생은 신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고(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바람직하게 변화가는 자녀를 보고 학교를 신뢰하며(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는 제자를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머물고 싶은 학교),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학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애월고등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기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이자 주인의식을 갖춘 학생을 육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주체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나) 추진체제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인 애월고등학교의 구성 체계는 타 학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학교의 주요 행사들과 학생들의 학교 내 생활 일부 사항들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한다는 데에서 일반 학교들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애월고등학교 학생회는 일반 학교들의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자체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부, 학예부, 봉사부, 복지부, 동아리부, 체육부, 바른생활부 등 학생회 자체적으로 조직한 부서별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된다. 이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교 내 유일한 기구로서 대부분의 학교에 조직되어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체적인 활동성을 갖지 못하는 타 학교와는 달리 실질적인 학생 대표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애월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¹⁾).

애월고등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회 운영을 지원한다. 학사운영 등 전문적인 학교 경영을 제외한 학교 내 학생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학생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결과를 1차적으로 담당교사 등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 등 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전적으로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한다.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애월고등학교는 주체적이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회 주도의 학교 운영을 추구한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전체조회, 창송인의 날, 소통과 나눔의 시간, 매점 운영, 창송 클린 봉사대 운영 등이 있다. 우선 전체조회는 경우 타 학교와는 달리 학생회 주도의 자체적인 전체 조회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들의 전체조회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나 학교장 등 학교 책임자의 전달사항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형태의 전체 조회를 운영하는 반면에 애월고등학교의 전체 조회는 매우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창송 Time이라 불리는 애월고등학교의 전체 조회는 우선 모든 과정을 학생자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애월고등학교의 전체 조회인 창송 Time은 인성 함양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체 조회 활동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성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학생회는 재능기부, 끼 발표, 각 종 시상, 창송인의 다짐 낭독, 학생 자체적 훈화 “창송인의 고함” 발표 등의 다양한 전체 조회

1) 애월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aewol.hs.kr>(2013.9.28.)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회 중심의 전체 조희 운영으로 애월고등학교는 기존 교사 중심의 전달 및 훈화 식의 전체조희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끼 발산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애월고등학교의 체육대회인 창송인의 날 행사 역시 학생회 주도로 이루어진다. 학생회는 우선 계획단계에서 전교생,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후 결정사항을 담당교사, 학교장 등과 최종적으로 의논하여 확정된 후 다시 학교에 전파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한 체육대회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돈독한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단순히 교내 행사에만 머무르도록 하지 않고 학부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바리스타 체험, 승마체험, 노래경연대회 등 다양한 번외 행사를 통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의 장 마련의 기회 또한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와 교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인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운영한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회의 운영 상황을 교사와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회나 교사들 각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학교 내 사안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학생회와 교사가 만나는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학교 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 밖에도 애월고등학교는 학생회 주도로 매점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간접적인 경제교육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주인의식을 키우고 있으며, 봉사단체인 창송 클린 봉사대의 운영을 통해 애교심 고취와 지역 주민에 대한 학교 홍보 및 관심 증진의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비정기적인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름의 기획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사랑 사진 콘테스트, 스승 존경 주간 행사, 친구야 지각하지 말자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획 프로젝트는 비록 단발성이긴 하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목표, 특정 시기에 적합한 학교 내 이벤트(스승의 날) 등과 연계되어 진행함으로써 학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시	내용	시	비고
4월 26일 1교시	음악연주(재능기부) - 현악 4중주 연주곡 : 캐리비안의 해적 외 1곡 학생 바이올린 체험	15'	재능기부
	애국가제창(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지휘)	2'	
	창송인의 다짐 시간(학생자치회 여부회장)	2'	
	1. 우리는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2. 우리는 고운 말을 씁니다. 3. 우리는 주변을 청결히 합니다. 4. 우리는 인사를 잘 합니다.		
	창송인에게 고함(학생자치회장)	5'	
	내용 : 일반계로 고등학교로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에 맞추어 우리 학생들도 노력하자		
	시상	7'	
이달의 끼 발표	7'		
	내용 : 댄스 공연(리믹스 음악 외 1곡)		
5월 27일 1교시	음악연주(재능기부) - 색소폰 연주 연주곡 : 임재범의 너를 위해 외 1곡 애국가제창(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지휘)	10'	재능기부
	창송인의 다짐 시간(학생자치회 회장)	7'	
	학생 대표 연설(학생자치회 남부회장)	2'	
	내용 : 학교생활에 집중도를 높이자!	5'	
	시상	7'	
	학교장 격려의 말씀	7'	
	이달의 끼 발표	4'	
	내용 : 노래		
6월 24일 1교시	음악연주(재능기부) - 현악 4중주 연주가 :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 각 파트 수석 연주곡 : 모차르트의 아이네클라이네외 2곡 애국가제창(학생자치회 남부회장 지휘)	10'	재능기부
	창송인의 다짐 시간(학생자치회 동아리 부장)	2'	
	학생 대표 발표(학생자치회 여부회장)	5'	
	내용 :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생 즉, 우리 학생 들 몫	8'	
	시상		
	학교장 격려의 말씀	10'	
	시 낭독.		
이달의 끼 발표(컴퓨터 프로그램 영상 편집 상영)	5'		
	내용 : 1학기 동안 학급 학생들과 추억(사진 및 동영상)을 편집 상영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p.91



【그림 V-1】 애월고등학교 전체 조회 「창송 Time」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91쪽; 애월고등학교 홈페이지(2013.9.28.)



【그림 V-2】 애월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 출처: 애월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aewol.hs.kr>). 2013.9.28.

라) 성과

에월고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학교 내 학생 생활 부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역량 강화 효과를 가져왔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교과 내 학습으로서 접근하는 방법도 주효한 방법일 수 있으나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이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준법정신, 주인의식, 질서, 책임감, 소속감 등 정성적 부분의 중요성 또한 강조된다는 점에서 에월고등학교의 이러한 교육적 활동들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학생 스스로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를 학생들의 대표 기구인 학생회를 통해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온전히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존재감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것이 학생 스스로가 아닌 학교, 교사로부터 추진되는 경우 수동적인 참여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반면에, 학생 주도적인 참여는 오히려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고무적인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에월고등학교는 학생회 주도적인 전체 조희나 기획 프로젝트인 스승 존경 주간, 봉사 활동,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학교 문화를 조성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인의식, 자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 준법정신 등의 민주시민 자질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학교생활에 스스로 의도한 변화를 포함(전체조회의 문화 활동, 체육대회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대상 봉사활동 등)함으로써 누적되어 온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학교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학교의 문화를 만들고 이를 향유하는 능동적, 창의적 학교생활을 경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매점 운영을 통해 책임감, 주인의식, 경제적 체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지각 줄이기 등의 기획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규칙 준수 등 준법 태도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캠페인 형식의 기획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회와 학생 전체의 의견을 담아 제정한 학칙을 다시 환기시키고 강압적인 생활지도 보다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서로의 약속에 의한 규칙 지키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적인 학교 내 구성원 육성에 기대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에월고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학교의 오랜 역사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추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어떤 교육적 활동보다도 긍정적인 학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주인이며,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와 규칙을 가진 학교, 그리고 이러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현재 진행형의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인격, 태도, 자존감 등 정성적 부분의 변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며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정책적 시사점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민주 시민의 자질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일부는 몸에 밴 습관적인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반드시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이 중요하다. 즉, 민주시민역량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적 측면에서 교과교육을 활성화하거나, 민주시민의 자질을 강의하는 활동 보다는 학교 내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실제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을 명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도록 장려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학생 자치활동을 아무리 장려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학생 스스로가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애월고등학교의 사례에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의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애월고등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인 학생회 운영과 학생회 의결사항 등에 전적인 자율권을 부여한다. 1차적으로 학교 혹은 학교장, 교사의 입장을 바탕으로 학생회가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활동에 관한한 최우선적인 의사결정 및 학내 의견 수렴의 역할을 학생회에 맡기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회는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이를 학교 및 교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물론 교사, 지역사회의 의견까지도 반영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낸다. 이렇게 제시된 의결사항에 대해서 학교와 학생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자치활동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학생자치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있어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내 의사결정 패러다임의 전환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의 꾸준한 활동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참여와 자기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애월고등학교의 학생회는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교내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을 추구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활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더욱 더 큰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학생회 스스로의 지속적인 반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서 자칫 방향을 잃거나 단발성으로 끝나기 쉬운 학생회 활동의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발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마지막으로 애월고등학교는 학교 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등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학교 내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서 학교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교 이미지 제고의 한 방안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 학교의 이미지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된 학교, 혹은 단체가 공동의 성취를 이루는 것에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 학교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풍납중학교의 청소년 법제관

가) 배경 및 목적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반성하고 인성교육과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법제처, 2013).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제처에서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법제관 제도는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청소년 법제관으로 임명된 학생이 학생대표로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 또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학교 규칙의 내용을 법률과 비슷한 형태로 조문화하는 일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법제처, 2013).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중학교는 청소년 법제관 운영 시범학교로서 황폐화된 학교 내 문화로 인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판단과 스스로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생활화하며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해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풍납중학교, 2012a). 풍납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풍납중학교, 2012a. p.1).

첫째,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법제관을 통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청소년법제관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 자치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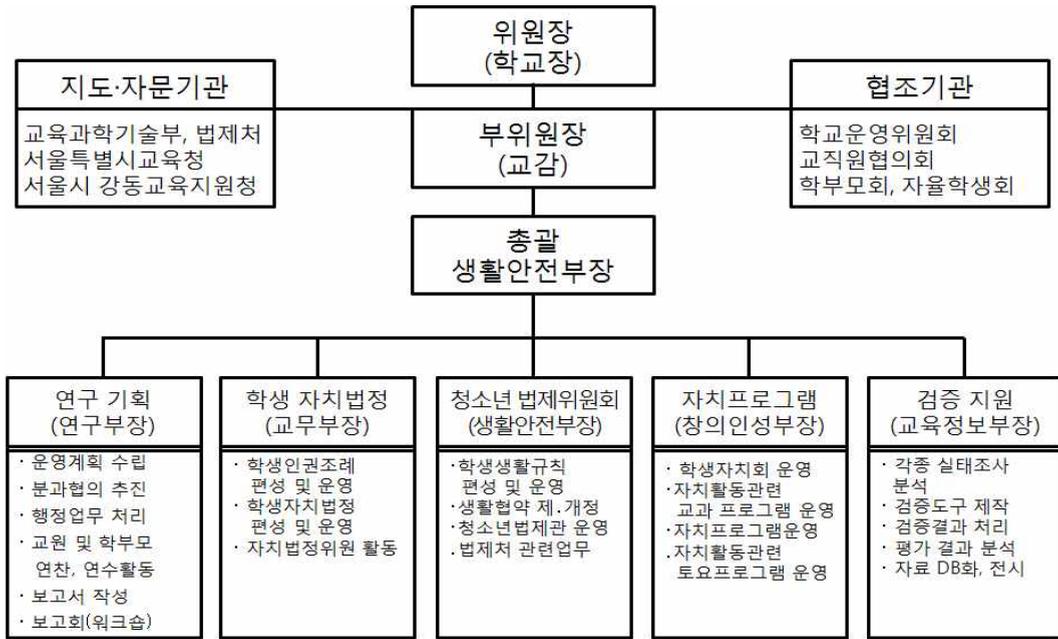
셋째,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학교규칙을 학생 스스로 자치법정을 열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정, 해결한다.

풍납중학교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단순한 자치 법정 체험활동의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수립, 개정, 시행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법제관 제도 운영을 통해 주체적으로 학교 운영 및 학생 생활 전반에 참여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큰 틀에서의 인성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법제관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민주시민역량 육성과 준법정신 제고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추진체제

풍납중학교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각각의 법제관 조직을 구성하고, 의결기관으로서 학생 자치 법정을 조직하였다. 법제관으로 학생 29명을 임명하고, 7명의 학부모 법제관도 임명하였다.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교원 운영 조직은 아래 【그림

V-3】과 같으며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학교 내외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조직은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 신뢰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풍납중학교(2012a). p.6

【그림 V-3】 풍납중학교 청소년법제관 제도 운영을 위한 교원 운영조직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학생 운영조직은 아래 【그림 V-4】와 같으며 아래 조직에 포함된 모든 학생이 청소년 법제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 주도아래 각 분과에서는 분과에 해당된 사항들에 대한 분과회의를 거쳐 분과별 교칙 제·개정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동일한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임명된 학부모 법제관 위원들(7명, 회장 1, 부회장 3, 총무 1, 감사 2)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사항을 결정한 후, 각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종합하여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의 결과를 거치도록 한다.



* 출처 : 풍납중학교(2012a). p.6

* 주: 각 학급회장 포함 29명 법제관으로 운영

【그림 V-4】 풍납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조직

또한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일환으로 학교 내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자율적 처벌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풍납중학교 학생 자치 법정의 구성 및 역할은 아래 <표 V-3>과 같다.

표 V-3 풍납중학교 학생자치법정 구성 및 역할

구성원	구성	역 할
판사	심00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합니다.
검사	채00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 상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변호인	고00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벌점에 도달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됩니다. -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배심원	이00 외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 과벌점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벌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구성원	구성	역 할
서기	김00 외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와 과별집자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합니다.
법정 경위	이00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선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합니다.

* 출처 : 풍납중학교(2012b). p.49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풍납중학교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운영을 위해 우선 인권, 준법정신,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조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준법정신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각 학급에 게시하고 관련 교과의 내용과 연계하여 해당 수업 시간에 인권 및 법과 관련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치활동인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급별 학급회의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 법제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격적인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법제관의 임명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워크샵,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하였다. 풍납중학교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중심 활동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다. 풍납중학교에서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해 아래 <표 V-4>와 같은 절차로 이를 시행하였다.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6.11 ~ 6.20	기초 자료 수합	인권문화팀 제·개정 활동	- 인권조례, 용의복장, 교문지도 항목
		학습문화팀 제·개정 활동	- 학급규칙, 수업시간 태도, 교권존중문화 항목
		생활문화팀 제·개정 활동	- 기본생활 습관, 생활평점제, 성찰교실 항목
6.21 ~ 6.29	청소년 법제관 분과별 협의	인권문화팀 주요 안건 협의	- 두발(길이, 염색, 피머) 관련 - 교복(치마길이, 바지 변형) 관련 - 전자기기(휴대폰 등) 휴대사용 관련 - 약세사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피어싱)관련 - 인공외모(화장, 메니큐어, 서클렌즈)관련
		학습문화팀 주요 안건 협의	- 수업태도 관련 - 교사지도 불응 관련
		생활문화팀 주요 안건 협의	- 상점 항목 관련 - 별점 항목 관련
	학부모 법제관 협의	학부모법제관 안전 협의	- 인권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주요 안건
7.3 ~ 7.20	의견 수렴	교사의견수렴	- 학급 정·부회장 선출 : 런닝 메이트제 - 준법성과 관련된 징계 : 위법, 교칙위반에 대하여 징계 강화 - 수업시간 태도 불손, 지도 불응 : 별점 상향 조정 - 성찰교실 : 학부모 교육 기부단 활용
		학부모의견수렴	- 학습문화 관련 의견 수업태도: 자는 학생을 동영상으로 찍어 부모님께 전송 교사지도 불응 : 수업내용 3번 쓰기, 감상문 쓰기 - 인권문화 관련 의견 두발 : 염색, 파마는 금지. 단, 두발 길이는 자유 교복 : 치마길이는 무릎선 위에 바지는 약간의 변형은 허용 전자기기 : 수업시간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 - 생활문화 관련 의견 상점 항목 : 상점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 문화상품권 수여 별점 항목 : 별점부여 때 부모님 확인전화, 부모의견서 제출
		학생의견수렴	- 생활문화 의견 두발 완전자유화 실시 상/별점제 개선 : 상점 구체화, 기준 추가, 별점 처벌 강화 - 학습문화 의견 회장 선출방법 변경: 남학생 둘 이상, 여학생 둘 이상 후보 생활협약 : 투표권을 강요 시 그 학생에게 투표권 박탈 - 수업시간태도, 교권존중 의견 전체적인 처벌 기준을 완화한다. 사건 발생 현장에 있거나 해도 똑같이 처벌받지 않도록 함 - 인권문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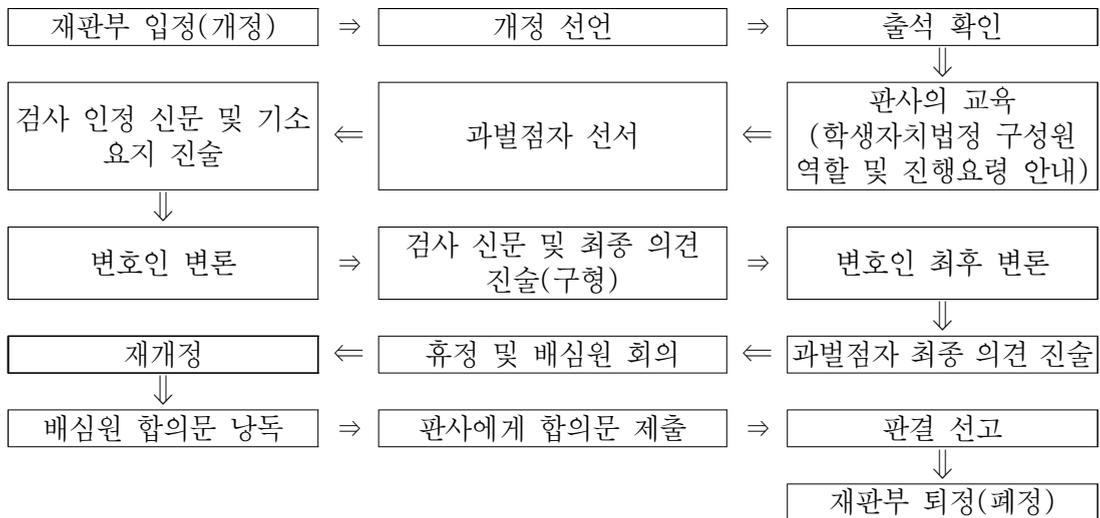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두발 : 머리길이의 자유. 파마와 고대기 허용, 염색 일부허용 단, 염색은 파란색, 분홍색 등 너무 튀는 색은 금지 교복 : 체육복 반바지와 교복 t-셔츠 입기 허용 전자기기 : 압수기간 1주일로 축소 인공외모: 악세사리 허용, 써클렌즈 금지, 귀걸이 4개까지만 허용																											
8.16 ~ 9.7	1차 시안 마련	<table border="1"> <thead> <tr> <th>분과</th> <th>시안주제</th> <th>주요 시안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권 문화</td> <td>두발</td> <td>- 두발 : 길이자울(남여 모두), 염색 탈색금지, 색깔은 학생부 승인</td> </tr> <tr> <td>교복</td> <td>- 교복 : 착용시기 융통성, 가디건 허용, 혼용금지, 치마길이 무릎위 7cm</td> </tr> <tr> <td rowspan="2">학습 문화</td> <td>전자기기</td> <td>- 전자기기 :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중 적발은 2주간 보관</td> </tr> <tr> <td>악세사리</td> <td>- 악세사리 : 반지, 목걸이, 귀걸이 허용, 피어싱금지, 귀 4개 허용</td> </tr> <tr> <td rowspan="2">생활 문화</td> <td>인공외모</td> <td>- 인공외모 : 서클렌즈, 색조라인 금지, 비비크림 허용, 매니큐어 허용</td> </tr> <tr> <td>정부회장수업</td> <td>- 자격 : 1년 전부터 징계 없어야 함, 입명 후 징계시 박탈 - 수업 : 늦게 오면 교과담당 재량 벌점부과, 수업방해시 자치법정 선택</td> </tr> <tr> <td colspan="2"></td> <td>- 벌점부과 : 1~5점, 휴연 적발시 5점, 2차 적발시 선도위원회 회부</td> </tr> <tr> <td colspan="2"></td> <td>- 상점부과 : 1~3점, 학급활동 도우미 담임재량</td> </tr> <tr> <td colspan="2"></td> <td>- 기타 : 상, 벌점 상황 1주 1회 공개</td> </tr> </tbody> </table>	분과	시안주제	주요 시안 내용	인권 문화	두발	- 두발 : 길이자울(남여 모두), 염색 탈색금지, 색깔은 학생부 승인	교복	- 교복 : 착용시기 융통성, 가디건 허용, 혼용금지, 치마길이 무릎위 7cm	학습 문화	전자기기	- 전자기기 :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중 적발은 2주간 보관	악세사리	- 악세사리 : 반지, 목걸이, 귀걸이 허용, 피어싱금지, 귀 4개 허용	생활 문화	인공외모	- 인공외모 : 서클렌즈, 색조라인 금지, 비비크림 허용, 매니큐어 허용	정부회장수업	- 자격 : 1년 전부터 징계 없어야 함, 입명 후 징계시 박탈 - 수업 : 늦게 오면 교과담당 재량 벌점부과, 수업방해시 자치법정 선택			- 벌점부과 : 1~5점, 휴연 적발시 5점, 2차 적발시 선도위원회 회부			- 상점부과 : 1~3점, 학급활동 도우미 담임재량			- 기타 : 상, 벌점 상황 1주 1회 공개	
분과	시안주제	주요 시안 내용																												
인권 문화	두발	- 두발 : 길이자울(남여 모두), 염색 탈색금지, 색깔은 학생부 승인																												
	교복	- 교복 : 착용시기 융통성, 가디건 허용, 혼용금지, 치마길이 무릎위 7cm																												
학습 문화	전자기기	- 전자기기 :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중 적발은 2주간 보관																												
	악세사리	- 악세사리 : 반지, 목걸이, 귀걸이 허용, 피어싱금지, 귀 4개 허용																												
생활 문화	인공외모	- 인공외모 : 서클렌즈, 색조라인 금지, 비비크림 허용, 매니큐어 허용																												
	정부회장수업	- 자격 : 1년 전부터 징계 없어야 함, 입명 후 징계시 박탈 - 수업 : 늦게 오면 교과담당 재량 벌점부과, 수업방해시 자치법정 선택																												
		- 벌점부과 : 1~5점, 휴연 적발시 5점, 2차 적발시 선도위원회 회부																												
		- 상점부과 : 1~3점, 학급활동 도우미 담임재량																												
		- 기타 : 상, 벌점 상황 1주 1회 공개																												
9.10	공청회 개최	1차 시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분과별 청소년법제관 팀장이 발표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와 토론활동 전개																												
9.14	쟁점 사항 재설문 조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쟁점사항(설문 : 교사, 학부모, 학생용) 가정통신문(2012.09.14 발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쟁점사항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div> * 아래의 항목 중 원하시는 의견란에 “찬성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body> <tr> <td>쟁점1 퍼머·염색</td> <td>허용하되,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td> <td>허용해선 안 된다.</td> </tr> <tr> <td>쟁점2 귀걸이·피어싱</td> <td>양쪽 귀 합쳐서 4개까지 허용하되, 크기는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td> <td>허용해선 안 된다.</td> </tr> <tr> <td>쟁점3 소지품검사</td> <td>교육 목적상 필요시에는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td> <td>허용해선 안 된다.</td> </tr> </tbody> </table> - 이하 생략 -			쟁점1 퍼머·염색	허용하되,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해선 안 된다.	쟁점2 귀걸이·피어싱	양쪽 귀 합쳐서 4개까지 허용하되, 크기는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해선 안 된다.	쟁점3 소지품검사	교육 목적상 필요시에는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허용해선 안 된다.																	
쟁점1 퍼머·염색	허용하되,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해선 안 된다.																												
쟁점2 귀걸이·피어싱	양쪽 귀 합쳐서 4개까지 허용하되, 크기는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해선 안 된다.																												
쟁점3 소지품검사	교육 목적상 필요시에는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허용해선 안 된다.																												
9.21	2차 시안 마련	재 설문조사한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2차 시안 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주제</th> <th>개정전</th> <th>개정 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쟁점 1</td> <td>퍼머</td> <td>불허</td> <td>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td> </tr> <tr> <td>염색</td> <td>불허</td> <td>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td> </tr> <tr> <td rowspan="2">쟁점 2</td> <td>귀걸이</td> <td>불허</td> <td>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양쪽 귀 합 4개까지 허용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td> </tr> <tr> <td>피어싱</td> <td>불허</td> <td>1차 시안 : 완전 자율</td> </tr> </tbody> </table>			주제	개정전	개정 후	비고	쟁점 1	퍼머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염색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쟁점 2	귀걸이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양쪽 귀 합 4개까지 허용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피어싱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주제	개정전	개정 후	비고																											
쟁점 1	퍼머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염색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쟁점 2	귀걸이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2차 시안 : 양쪽 귀 합 4개까지 허용 최종 시안 : 허용(학생회 임원과 사전 협의)																											
	피어싱	불허	1차 시안 : 완전 자율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주제	개정전	개정 후	비고	
	쟁점 3	소지품 검사	규정 없음	교육목적상 필요시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한다.	2차 시안 : 안면 피어싱만 불허 최종 시안 : 불허 1차 시안 : 불허 2차 시안 : 불허 최종 시안 : 허용(학교장 사전 승인)
10.18	학교장 결재, 학운위 심의	최종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 출처 : 풍납중학교(2012a). p.16-22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함

한편, 풍납중학교에서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시행과 함께 학교 내 학생 자치 법정을 설치하고 법정 운영에 필요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부여 받은 학생들을 임명하였다. 학생 자치 법정의 구성원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워크숍을 거쳐 학생 자치 법정을 운영하기 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풍납중학교 학생 자치 법정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별, 청소년 인권 문제 등 학교 내에 요구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벌제도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풍납중학교 학생 법정에서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학생 생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민주적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표 V-5 풍납중학교 학생자치법정 재판절차



* 출처: 풍납중학교(2012b). p.50 표를 일부 수정함

또한 처벌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신체적, 정신적 처벌을 배제하고 인권 문화 법제팀이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해 마련한 긍정적 처벌 방안을 바탕으로 상벌을 선고한다.

【학생자치법정에서의 긍정적 처벌 방안】

- 동학년 교실 순회하면서, 사과(반성문) 발인(발표)하고, 발표회에서 그룹을 만들어 개인기(그룹) 발표하기
 - 껌 몇 개 이상(종이컵 하나 가득) 떼기
 - 동네 파출소 경찰아저씨랑 순찰 돌고 확인서 받아오기
 - 학교에서 제공한 영어단어 100개 및 수학 100문제 풀기
 - 인성 관련 책 1권 읽고, 독후감 쓰기
 - 학급 유리창 20장 닦기
 - 운동장 트랙 20~30바퀴 걷거나, 뛰기
 - 징계는 피해자의 말도 들어주지만, 가해자의 말도 들어준 후 결정
 - 지각을 3번할 시, 1주일간 학교를 8시까지 등교 후 확인을 받는다.
 - 수업시간에 떠들면 체육관 청소, 선생님 안마하기, 장애인 도와드리기 와 같은 일을 한다
 - 명심보감 쓰기(10장)
 - 돌이반 1회 봉사 (독거노인 반찬)-> 별도로 봉사시간 인정은 되지 않음
 -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만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학생들이 기피하는 힘든 봉사하기
 -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봉사
 - 선생님들 심부름 25회 하기
 - 문제 학생들 반성 모임을 만들어서 2개월 간 참여하기
 -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소감문 쓰기
 -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을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며 일 돕기
- (풍납중학교, 2012b. p.32)

청소년 법제관 활동과 학생자치법정 활동은 모두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정해진 조직 체계와 절차 안에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풍납중학교의 학생들과 특히 청소년 법제관, 학생 자치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과거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학교 내 제도적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성과

<표 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풍납중학교는 약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바탕으로 학생 생활 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였다. 청소년 인권 조례를 둘러싼 학교 내·외의 갈등 등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학교 생활 규칙으로 많은 학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 생활 규칙의 제·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기존의 학교 내 의사결정구조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내 생활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한다고 해도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풍납중학교의 경우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해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이를 수행하였다.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분과회의,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함께하였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풍납중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만들어진 규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과 캠페인 등은 준법정신, 약속을 지키는 삶에 대한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학생자치법정은 역시, 준법정신, 책임감 등 다양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데 매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법제관 제도와 학생 자치 법정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풍납중학교는 또한 토론과 소통의 문화가 정착되었다. 모든 의사결정은 분과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토론을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교 구성 주체임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법제처, 2013). 마지막으로 풍납중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을 통해 토론과 소통에 익숙해 질 수 있었으며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폭넓게 실시한 인성교육과 함께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풍납중학교, 2012a).

마)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학교들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도를 바꾸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전통적 인식, 학교 자체의 경직성,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등 산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학생 생활 규정 등으로 대표되는 학생인권의 문제, 학교 내 규정과 규칙을 제·개정하는 복잡하고 갈등이 집중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제처와 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청소년 법제관 제도는 매우 효과적이며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특히 풍납중학교가 청소년 법제관 제도와 학생 자치 법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민주시민의 자질은 지식적인 측면 보다는 인성, 태도, 가치관 등에 해당하므로 교과를 통해 지식만을 가르쳐서는 올바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했다고 할 수 없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 등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결과로서 기대하는 모습들을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법제관 제도와 학생자치법정의 경우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경우 예비 시민으로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도에 관심이 줄어들어 참여를 포기하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경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경우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질 높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 중 법질서와 관련한 민주시민역량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 경찰, 법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법질서와 관련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해당되는 각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학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좀 더 가까워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민주시민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효과들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작전초등학교의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작전초등학교에서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를 인성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를 욕설, 비속어, 비방하는 언어 등 언어폭력에서 그 원인을 찾고 언어 순화를 통한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 및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작전초등학교에서는 「솔선·동행·나눔의 가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학교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전초등학교에서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욕설, 비속어 등 언어폭력 예방·진단·치료교육으로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을 유도하여 학교폭력을 줄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작전초등학교, 2012).

작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작전초등학교의 「솔선·동행·나눔의 가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언어사용 실태분석을 통해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속에서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밀도 있는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구성원 간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셋째,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바람직한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언어 순화 운동을 전개하여 교육공동체의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작전초등학교, 2013. p.1)

나) 추진체제

작전초등학교에서는 언어문화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활동을 학교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특성 상 학교 내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는 타 학교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다만 작전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가칭) 가치네 바른 말 이꿈이’ 라고 불리는 교내 언어문화개선 동아리를 조직하여 학교 내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문화개선 동아리에 2명의 담당교사 6명의 학부모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다.

작전초등학교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육성하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각 학년별 선도학급을 지정하여 개발한 수업안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학교 전체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등과 같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운영의 효과를 확인 및 검증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작전초등학교, 2013).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작전초등학교의 「솔선·동행·나눔의 가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은 솔선, 동행, 나눔으로 구분된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아래 【그림 V-5】 참조).

우선 솔선에는 ‘읽물, 아랫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교사-학부모 바른 언어 사용 연수, 교육다큐(육해도 될까요) 시청 및 소감문 쓰기, 전교학생회, 학부모회 주관 연합 캠페인 활동, 미디어프리데이(Media Free Day) 운영, I Message 대화법 사용하기(사랑의 교사 언어 매뉴얼 보급) 등이 있다(작전초등학교, 2012). 이 중 미디어프리데이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대중매체의 언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사, 사랑을 말하다」라는 교사 언어 매뉴얼을 전 교직원에 보급하여 교사들의 언어개선에 힘쓰도록 하였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a). p.37

【그림 V-5】 솔선·동행·나눔의 가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특징



<교육다큐 동영상 시청> <언어개선 교육용 자료> <언어개선 캠페인 활동>
 * 출처 : 작전초등학교(2012). p.4

[그림 V-6] ‘윗물, 아랫물 프로그램’ 활동 예시

동행에는 ‘시나브로 프로그램’, ‘고운말-마중물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다. 우선 ‘고운말-마중물 프로그램’에서는 바른 언어 사용 서약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취지를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쁜 말 없애기 활동, 학년별 특색 있는 고운 말 사용 대회, 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히 나쁜 말 없애기 활동은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비속어, 폭언, 욕설, 잘못된 문법의 언어, 인터넷 언어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언어 사용 자제를 다짐하는 활동으로서 무의식적인 습관적 언어 사용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해서도 평소 학생들이 사용하는 욕설의 어원과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등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욕설의 해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어개선 학부모 연수> <바른 말 쓰기 학년별 대회> <나쁜 말 버리기 활동>
 * 출처 : 작전초등학교(2012). p.6

[그림 V-7] ‘고운 말-마중물 프로그램’ 활동 예시

‘고운말·마중물 프로그램’이 잘못된 언어습관에 대한 반성이라면 ‘시나브로 프로그램’은 바른 언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습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시나브로 프로그램에는 책을 읽고 좋은 문구를 찾아서 공유하거나 바른 말 쓰기 UCC 만들기, 언어지킴이 암행어사제, 바른말 소식지 발간, 바른말 포스터 제작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붙이기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언어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바람직한 언어습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고 있다.



<언어개선 케노피 설치> <언어 캠페인을 피켓 만들기> <매일 바른 말 노래 부르기>

* 출처: 작전초등학교(2012). p.7

【그림 V-8】 ‘시나브로 프로그램’ 활동 예시

마지막으로 나눔에서는 ‘가는 말 오는 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는 말 오는 말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개선된 언어 습관을 확인하고 이를 주위 학생,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내 게시판을 통한 칭찬 글쓰기, 사과와 말을 나누는 Apple Day(내 사과를 받아 줘) 운영, 아름다운 말을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우기, 선(善)플 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제작진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은 대중매체를 통해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직접 대중매체의 언어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제작진에게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진 능동적 주체자가 되도록 유도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바른 언어 사용 상황극>

<칭찬게시판 활용 칭찬하기>

<언어개선 모범어린이 열쇠고리 수여>

* 출처: 작전초등학교(2012). p.7

【그림 V-9】 ‘가는 말 오는 말 프로그램’ 활동 예시

라) 성과

작전초등학교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 V-10】에서 알 수 있듯이 작전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진행된 「술선·동행·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작전초등학교(2012). p.2

【그림 V-10】 2011학년도 언어개선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바람직한 언어 사용의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면서 학교 내 폭력의 문제도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보다 수월한 인성지도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은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인성지도의 기초적 활동으로 향후 다른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적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작전초등학교의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요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교사와 학부모가 솔선하여 참여하고, 수시로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하였다(작전초등학교, 2012). 이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매체 모니터링이나 미디어프리데이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또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프리데이의 경우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가정 내 언어문화와 여가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작전초등학교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은 언어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언어를 매개로 한 학생들의 생활 태도 전반에 걸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마) 정책적 시사점

작전초등학교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역량 교육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소재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전초등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언어생활의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생활의 변화나 개선 여부는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야 한다. 작전초등학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외부강사, 지역 공공기관 등 다양한 외부 인력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적 교육 활동이 필요한데,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한 교육 활동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즉, 민주시민 교육은 소재도 경험도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평생교육 우수사례 분석

(1) 성미산학교의 마을공동체와 대안교육

가) 배경 및 목적

성미산학교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성미산마을 또는 성미산 교육공동체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이다. 성미산학교의 교육이념은 성미산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시되어 있다. '2012년 1학기 성미산학교 교육과정 알림알이'(성미산학교, 2012)에 따르면 성미산학교의 목적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기르는데 있다. 이 목적은 2가지로 구분된다. 앞부분에 있는 '스스로 서다'는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변화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이념의 두 번째 사항은 '서로를 살리다'에 있다. 이는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환경,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찾고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우정, 그리고 서로의 돌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존과 공동선을 위한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성미산학교의 두 번째 교육목표이다(성미산학교 홈페이지). 이런 교육목표는 성미산학교의 출발에서부터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1994년 공동육아를 시작한 성미산마을에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로 입학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운영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 학교는 만들어진 거는, 이 마을 안에 일종의 기초가 되는 게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예요. 대안유치원 같은 거고요.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크면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개중에는 일반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안교육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이 아이를 보낼 학교를 찾아, 초등대안학교를 찾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흐름에 맞는 대안학교도 있어야 되겠구나(성미산학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또한 당시 성산동 일대에 위치한 성미산 개발과 관련되어 서울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생태환경보호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지역의 분위기와 학부모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생태나 환경보호, 공동체성과 마을단위의 공동대응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이런 내용을 성미산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 출처: 성미산학교 인터뷰 과정 중 직접 촬영한 자료.

【그림 V-11】 성미산학교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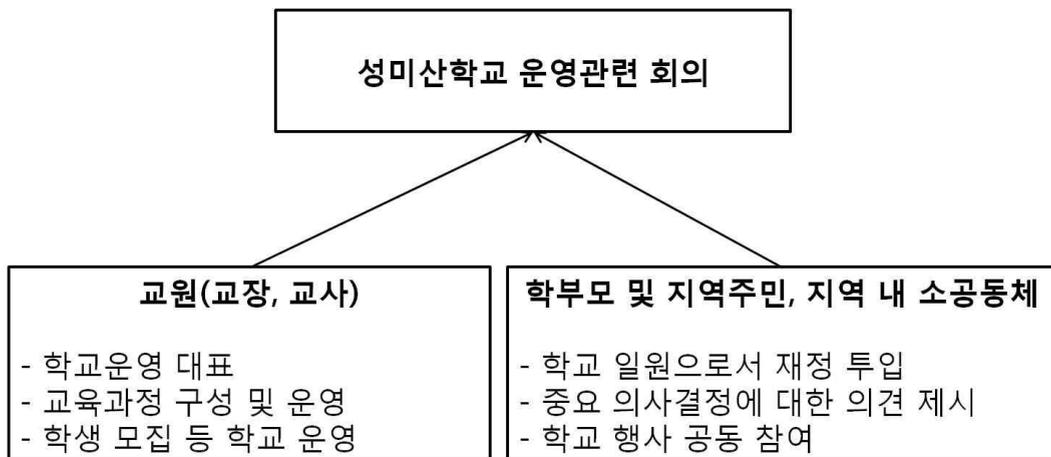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성미산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주변과 함께 하는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교육을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주요 교육의 내용은 생태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 공동체에서의 참여를 통한 생태보호, 성미산 환경보호 운동 추진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나) 추진체제

성미산학교는 대안학교로서 2004년 9월에 지역주민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현재 약 1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초·중·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운영 중이다. 교사 25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40여 명의 성인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사람과 마을, 2012). 학교의 구성 체계는 일반 학교와 다를 바 없다.

성미산학교의 운영과 관련되어 추진체제는 성미산학교 운영에 대한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평상시에는 교사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교 내의 교원 등에 의하여 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이 추진된다. 교원에는 교장과 교사로 구성되며, 약 25명 정도의 교원이 성미산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교원은 학교운영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매일 매일의 학교운영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학급운영에 있어서도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학생 선발의 경우에도 면접 등의 전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형과정에서도 교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함께 진행된다(성미산학교, 2012; 성미산학교, 2013).

학부모 및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소공동체는 성미산학교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는 성미산학교 운영을 위한 회의에서 가능하고 또 수시로 성미산마을의 전체 조합 및 소공동체 회합을 통하여 성미산학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성미산학교, 2012; 성미산학교, 2013).



* 출처: 성미산학교(2012), 성미산학교(2013)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

【그림 V-12】 성미산학교의 추진체제

학부모의 경우 초기 입학과정에서 1,000만원의 입학금과 매달 소정의 등록금을 지불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재정 투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작은 나무(성미산마을의 동네카페)', '마을배움터', '성미산 마을극장' 등 다양한 소공동체 또는 협동조합에서도 성미산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성미산학교의 운영체제는 주요 관계자인 교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소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인다. 물론 상시적으로 주된 운영의 주체는 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내부의 직원들이다(성미산학교장과의 면담 내용 활용).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성미산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의 12학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성미산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 저학년(1, 2, 3학년), 초등 고학년(4, 5, 6학년), 중고등(7-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구성된다. 또한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팀 교육과정도 있다.



* 출처: 성미산학교 인터뷰 과정 중 직접 촬영한 자료.

【그림 V-13】 성미산학교의 교실과 내부

2013년 1학기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정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생태환경의 감수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성미산학교 초등 저학년 교육목표”(성미산학교, 2013. p.13)

1.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바탕으로 흥미와 관심 형성하기
2. 바른 생활습관과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3. 자연친화적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태 감수성 키우기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중점과제와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초등 저학년의 중점과제는 교육목표와 연결하여 ‘기본 생활습관 익히기’, ‘서로 돕고 끌어주는 공동체 문화 만들기’, ‘책 읽는 습관 갖기’, ‘자연놀이, 식물’, ‘기르기를 통한 생태감수성 키우기’, ‘교과통합 주제학습으로 생각 넓히기’의 5가지 중점과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중점과제별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내용이 설정되었다(성미산학교, 2013).

운영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체험이나 경험 학습을 중요시하는 교육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주변의 다양한 사물이나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나 집에서 식물을 부모와 함께 키워보고, 채소를 키워서 수확하고, 자연을 만끽하기 위한 여행을 하는 등 일반 초등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집과 생활공간의 주변에서 체험하는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책읽기 역시 중요한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있었고, 책을 단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편안하게 읽기 위한 환경 조성의 방법, 책읽기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독서기록장 운영, 책의 날과 같은 이벤트를 통하여 자신의 책 읽은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포함되었다(성미산학교, 2013).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특징적이었다. 정규학교교육과정에서도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성미산학교의 경우 주제내용의 통합이나 학년의 통합, 통합팀이나 동아리를 통한 학교교과 시간 이외에서의 통합교육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통합팀이나 통합교과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도 있었다. 이는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는 방법이었다.

초등 저학년 반은 2013년 1학기의 경우 학년별로 한 개 반씩 구성되었다. 1학년은 무지개반으로 16명, 2학년은 요술주머니반으로 14명, 3학년반은 즐거운 방울꽃잎반으로 16명의 학생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동아리는 비즈공예, 요리, 공놀이, 만화이야기. 레고의 5개 동아리가 운영되었다. 초등 저학년은 일반적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시작되어 오후 2시 10분에 5교시를 끝으로 하루 일정이 종료된다.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은 약간 더 늘어나게 되고, 앞의 학년과 연계되어 보다 심화된 교육내용과 새로운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올바른 생활습관의

경우 1학년에서는 기본적인 예절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한 수칙 등에 대하여 익히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모둠학습'이나 '짝공부'를 통하여 다른 학생들과 공동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이나 예절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급에서 각각의 학생들은 일정할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 수행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생활수칙이나 공동체 생활의 방법을 익히게 된다(성미산학교, 2013).

표 V-6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초등 저학년 중점과제와 운영

중점과제	내용/운영
기본 생활습관 익히기	① 공동생활의 약속 지키기 : 시간, 예의, 정리 등 ② 좋은 습관 :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청결 ③ 학습: 과제와 준비물 ④ 스스로 지킬 것들을 알고 실천하고 점검 : 스스로 통장, 자기 점검표
서로 돕고 끌어주는 공동체 문화 만들기	① 모둠학습, 협력학습을 통해 '협력'을 배우기 ② 놀이와 여행, 생활에서 돌봄의 관계 만들기: 봄 여행, 계절별 먼 산 나들이 (야야산), 동아리 ※ 여행과 산행은 학년통합 모둠으로 운영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 ③ 긍정적으로 감정 표현하고 소통하기 ※'봉대 퍼포먼스'를 통한 폭력적 행동 다스리기
책 읽는 습관 갖기	① 책과 친해지는 환경 조성 (책 읽어주기,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 편안한 책 읽기 환경 등) ② 독서 이력을 기록하고 격려(독서 기록장, 독서왕) ③ 책과 함께하는 축제(책의 날, 베품시장) ④ 주 1회 학교에서 함께 책 읽기
자연놀이, 식물 기르기를 통한 생태 감수성 키우기	① 학교와 집에서 식물을 기르며 돌보기 - 1,2학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식물 기르기/ 교실에서 씨앗채소 기르기 - 3학년: 학교(상자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재배 방법을 익히고 수확하여 나누기 / 중앙정원 화단 가꾸기 ② 자연놀이: 성미산과 마을에서 놀며 계절감 익히기 ③ 봄, 여름 먼 산 나들이(야야산)와 봄의 숲에서 흠뻑 빠져 생활하는 봄여행
교과통합 주제학습으로 생각 넓히기	①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협력하는 즐거움 속에서 공부하기 ② 사회, 과학, 몸 등의 영역을 통합하여 일주일에 4차시, 한 학기에 네 가지 주제 공부하기

* 출처: 성미산학교(2013). p.13

초등 고학년은 4, 5, 6학년으로 저학년과는 달리 보다 고차원의 학습을 하게 된다.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되었다. 저학년과 연계되어 학습에 대한 흥미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생태 감수성에서 보다 생활과 실천에 가까워지는 생태적 살림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목표로 포함되었다(성미산학교, 2013).

“성미산학교 초등 고학년 교육목표”(성미산학교, 2013, p.27)

1.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과 능력 기르기
2.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관계 만들기
3. 생태적 살림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실천하기

4, 5학년은 같은 학급에 편성되었고 6학년은 학급이 따로 구성되었다. 고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는 의·식·주의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조건에 대하여 옷살림, 집살림, 밥살림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 옷을 만들고 꾸미고, 교실이나 집을 꾸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밥을 지어보고 농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자기주도학습의 기반 하에 실제로 실습을 하고 만들어가는 경험학습 그리고 살고 있는 마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맺어가는 경험도 하게 됨으로써 매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성미산학교, 2013).

프로젝트 이외에도 공동체 문화만들기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게시판의 활용과 자치회의의 참여 등을 하게 된다. 초등 저학년부터 해오던 책읽기는 더욱 심화되어 동료 학생과 함께 책을 읽고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책읽기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나누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성미산학교, 2013).

표 V-7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초등 고학년 중점과제와 운영

중점과제	내용/운영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진행과정(계획-준비-실행-평가) 익히기 ②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 ③ 문제 발견 및 해결 ④ ‘마을살이’에 대한 이해 ⑤ 마을교육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제 해결

중점과제	내용/운영
공동체 문화 만들기	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② 게시판 등을 통한 살림 공유 ③ 자치회의와 민주적인 의사소통 ④ 나들이를 통한 선후배 돌봄의 관계 만들기
책으로 생각 넓히고 모으기	① 개인별 권장도서목록 만들기 ② 공동도서 함께 읽기 및 생각나눔 ③ 책과 함께하는 축제(책의 날)

* 출처: 성미산학교(2013). p.27

성미산학교의 중고등과정은 보다 다채롭다. 2013년 1학기 중고등과정의 교육목표는 ‘생태적 삶을 상상하고 실천하기’, ‘대안적 삶을 발명하는 용기 키우기’, ‘시민문화 만들기’의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성미산학교, 2013).

생태적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철학의 수준까지 논의하는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삶을 발명하는 용기 키우기는 마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성미산학교, 2013).

동시에 생태에 대한 이해와도 연계하여 관련된 농법이나 기술을 배우고 비즈니스를 해보는 기회도 갖는다. 시민문화 만들기는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과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만들기와 자치회 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성미산학교, 2013).

“성미산학교 중등 교육목표”(성미산학교, 2013. p.40)

1. 생태적 삶을 상상하고 실천하기

- 생태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적 삶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 생태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 생태적 전망 속에서 자기 삶의 비전 찾기

2. 대안적 삶을 발명하는 용기 키우기

- 일터로서 마을에 대한 인식하고 마을에서 먹고 사는 법 익히기
- 적정기술, 유기농법 등 대안적 전문성 갖추기
- 3만엔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실험하기
- 대안적 철학에 기반 한 학문하기

3. 시민문화 만들기

- 자율, 책임,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
- 식구총회와 위원회 활동을 통한 자치능력 키우기
- 동아리 활성화

성미산학교의 중고등의 교육과정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연결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동학교라는 이름하에 철새도래지를 방문하거나 외국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체험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 1학기 7학년의 경우 농장학교를 운영한다. 농장학교는 성미산학교에서 강원도 평창에 운영하는 농장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1년 동안 농장학교에서 기숙하면서 씨 뿌리고, 김매고, 수확하고, 김장을 담그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성미산학교, 2013).

그 이후 8학년부터는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학습은 농장학교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쓰레기(물건), 먹거리, 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주제탐구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농장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시에서 어떻게 생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천을 해보는 과정이다(성미산학교, 2013).

8학년 이후부터는 프로젝트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동학교로 운영한다. 이동학교는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하여 10학년까지는 2주 동안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의 체험학습이다. 그리고 11학년 1학기에는 해외 이동학교를 운영하여 국외의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에 1개월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외 이동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준비와 아이디어를 통하여 계획된다.

10학년부터는 프로젝트 학습과 이동학교와 함께 일머리 실험실을 운영한다. 일머리 실험실은 지역사회공동체 비즈니스를 상상하고 실천해보는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협동조합형태의 지역사회 소공동체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이 만들어 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비즈니스 방법,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게 된다.



* 출처: 성미산학교 인터뷰 과정 중 직접 촬영한 자료.

【그림 V-14】 성미산마을의 협동조합 형태의 소공동체

표 V-8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중고등 학년별 주요 교육과정

학년	학기	주요내용
7학년	1학기	- 농장학교
	2학기	
8학년	1학기	- 프로젝트 학습
	2학기	- 이동학교 : 프로젝트와 연관된 테마, 2주
9학년	1학기	- 프로젝트 학습 : 2학기에는 추가로 졸업 프로젝트 진행
	2학기	- 이동학교 : 프로젝트와 연관된 테마, 2주
10학년	1학기	- 프로젝트 학습 - 이동학교 : 프로젝트와 연관된 테마, 2주 - 일머리 실험실
	2학기	- 프로젝트 학습 - 이동학교 : 프로젝트와 연관된 테마, 2주 - 일머리 실험실 - 해외 이동학교 준비
11학년	1학기	- 프로젝트 학습 - 해외 이동학교 : 해외 공동체 1개월 이상 - 일머리 실험실 - 진로탐색 : 대안적 고등교육기관, 대학, 생태적 직업 등
	2학기	- 인턴쉽 : 3개월 - 진로 확정
12학년	1학기	- 졸업 논문 또는 프로젝트 - 졸업 에세이
	2학기	- 진로에 따른 활동

* 출처: 성미산학교(2013). p.41

11학년 2학기에는 일머리 실험실을 보다 강화한 인턴십을 3개월에서 2년 동안 진행한다. 이때의 인턴십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직업세계를 경험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는 도제교육의 형태로 진행된다. 직접 자신이 해보고 싶은 직업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또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12학년은 고3에 해당되는 시기로 성미산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학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졸업 논문이나 프로젝트, 졸업 에세이, 진로에 따른 활동 등이 주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성미산학교의 교육과정을 3년간의 학습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수료 프로젝트, 6년의 학습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각자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주제를 결정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하여 논문이나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다. 졸업 에세이는 공통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일종의 수필집과 같은 형태이다. 그리고 성미산학교에 재학하면서 했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게 된다.

라) 성과

성미산학교는 기본의 학교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학업성취도나 학습태도 등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관련된 보고서나 논문 그리고 현장의 교원의 인터뷰 등을 종합할 때, 민주시민역량의 발달 또는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중 우선 민주시민역량으로서 민주시민사회의 운영원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와 행동이 심화되고 발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미산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는 자치회의 참여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자치회가 활성화되었고, 이 자치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성적인 농담을 한 거를 애들이 들은 거고,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제, 아니 무슨 여자애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대 놓고 얘기를 하나. 너무 애들도 놀라고, 그랬는데 여자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은 완전 멘붕이 된 거죠.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애네 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거북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미산학교장 면담 中-

때로는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상황에 대한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갖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기도 한다.

성미산학교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민주시민역량 관점에서의 성과 중에 하나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실천과 지식의 축적 그리고 시민참여의 경험이다. 특히 성미산학교의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을 하건 통합팀이나 동아리를 하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하였다. 이는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안내하는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그런 예로 배드민턴 수업과 밥살이 프로젝트 학습의 경험을 들 수 있다.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배드민턴을 가르칠 강사를 찾다가 성미산에 있는 노인들이 비닐 같은 거 치고 하는 배드민턴 클럽 같은 데 가서 거기 계신 분 중에 나이가 계신 할아버지... 수업이 잘 되려나 걱정도 있고 그랬는데...(중략)... 그런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배우다는 생각을 아이들도 안 해봤을 것이고, 또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일종의 강사로 수업을 하는 건데 그럼 경험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인데...”

-성미산학교장 면담 中-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하여 성미산에서 배드민턴 클럽을 운영하는 할아버지로부터 배드민턴을 배운 학생들을 세대 간 융합과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협력 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로 밥살림 프로젝트를 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밥살림 프로젝트도 성미산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직접 밥을 지어보고 반찬 등을 만들면서 생태, 지역사회, 먹거리 문제 등에 대하여 생각하고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이 중 한 학생들이 ‘할머니 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하였다. 지역의 독거노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였다.

“밥살림 친구들이 했던 프로젝트가 할머니 밥상이란 게 있는데, 그게 마을의, 지역의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독거노인분들한테...(중략)... 아이들이 첫째 주는 하나의 음식을 정해서 만들어봐요, 그 다음 한 번 연습을 한 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씩 찾아 가는 거예요...(중략)... 처음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만들었는데, 찾아간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드실 걸 만들어야 되는 구나.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뒤져서 당뇨환자들 식이요법 이런 걸 다 찾고, 그래서 그 분이 드실 수 있는 거를...”

-성미산학교장 면담 中-

‘할머니의 밥상’을 생각한 것도 의미 있는 아이디어였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력 그리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상황에서 프로젝트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밥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당뇨병 할머니를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식사가 식사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당뇨에 대하여 공부하고 당뇨식을 준비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 참여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미산학교에서의 대안학교로서 교육과정은 혁신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만큼 민주시민역량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태와 관련된 실천과 체험의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실행을 하는 등의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역량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지나친 자유스러움,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부적응, 고액의 등록금 등은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마)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한국 학교들에서는 제한되고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민주시민역량을 실제로 발달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성미산학교의 교육과정과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학생들의 변화는 색다르고 기존의 학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성미산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을 기존의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다.

그 중 첫째는 기존 학교교육에서 일부라도 지역의 문제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프로젝트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 내부의

교육자들도 풍부하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역량을 이해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중에 일부를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결합하는 것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중요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거나 교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약간씩 받으면서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 밖의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성미산학교에서는 성미산마을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나 소공동체와 연계하거나 배드민턴 클럽이나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의 중요한 요소인 관계와 사회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유사기관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배우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교육당국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경우 일부 학점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외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단체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습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체제에서는 학점이나 교과이수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대안학교나 다른 나라의 먼 이야기로만 존재할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이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학부모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점이수 등에서 수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학년 간 통합과 학생 자치회의 활성화 역시 민주시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학년 간 통합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 간의 상호 관계 구축, 프로젝트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 자치회 역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참여 경험 축적, 정치적 설득과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성미산학교의 경우 교내에서 학생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치회의를 열고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생태환경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유비지역아동센터는 수학, 영어 등 단순한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직업군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20년 후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의 상황적 변화, 사회적 변화, 직업군의 변화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선택 가능한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최대한의 직업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당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역사회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시각과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유비지역아동센터 이학수 센터장은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비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아동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립성을 키우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체목표는 철학이라 그럴까요. 첫 째는 아이들을 지역 내에서 지역문제를 주도하고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의 기반으로서의 목표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 실정에 맞도록 하는 거. 두 가지 크게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에 참여해야 하고, 자기주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면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필요했어요. 의사소통능력이.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유비지역아동센터장 면담 中-

이를 정리하면 유비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능력들을 배양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로서의 직업적 기본기를 갖추는 것을 돕는 데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나) 추진체제

유비지역아동센터는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경주시 소속의 지역아동센터이다. 2005년 경주지역 대학의 동아리와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유비 행복한 홈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방 형태의 자원봉사로 시작하였으며, 점차 규모가 커져 2007년에 경주시로부터 정식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를 받았다. 또한 2009년부터 정식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규모가 커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유비지역아동센터장과의 면담내용 활용).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은 29명이지만 실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아동들은 4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3명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중·고등학생들이다. 또한 센터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고 있다. 경주시에 소속된 다른 지역아동센터들과는 다르게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가 위치한 충효동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경주시 청소년의 3분의 1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6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유비지역아동센터장과의 면담내용 활용). 이러한 상황에서 유비지역아동센터는 인근에 청소년이 많은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을 고집하여 청소년을 등한시하고 저소득층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속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유비지역아동센터는 아름다운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여 현재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를 유지하고 있다.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활동으로 우선 센터의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 청소년 자립카페 ‘호영꾸에(Huong Que : 고향 향기)’를 들 수 있다. 카페 운영은 센터의 설립 초반에 다양한 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생겨났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1박 2일 캠프에서 학생들의 희망하는 바로부터 시작했다. 센터 주위에 있는 작은 주택을 얻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게 비교적 손쉬운 베트남 커피의 제조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아이들이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깨찰빵 등을 아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호응을 얻어 센터의 주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유비지역아동센터장과의 면담내용 활용).

유비지역아동센터의 또 다른 대표 활동인 충효천 생태청소는 카페 운영 초기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카페 초기에 일반 손님보다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이들의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허다했는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카페 운영이 힘들어지자 그 해결책이 청소였다.

“문제는 그걸 운영하는 애들이 전부 중3에서 고등학생만 골랐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와서 앉아가지고, 죽 치고... 카페가 가정집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왔다 무서워서... 다 풀어헤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 이걸 내 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거든요. 대학생 봉사자들한테 재들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라. 내가 자원봉사 다 끊어줄게... 나가서 청소라도...

처음에 담배꽂초 몇 개 그러더니... 큰 비닐봉투를 사줄 수 있냐 하더니, 어느 날 한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어디서 했냐 했더니 하천에 내려갔대요. 뒤에다가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계속해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저거를 얼마나 꾸준히 하나 보자 했더니 8주를 안 빠지고 계속해요. 그렇게 하는 애들 6,7명이 팀 만들어서...”

-유비지역아동센터장 면담 中-

이렇게 지속된 충효천 주변 청소는 점차 조직화, 정규화 되어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작년에는 충효천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제가 생각해도 어의가 없을 만큼 애들이 다 놔두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충효천을 그냥 청소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좀 하자. 뭐가 있는 지. 그게 벌써부터 아이들 안에서 나왔거든요. 식물만 조사프로젝트 내서 강사 지원받아서 생태선생님이 이름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민들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발전하니까 수질조사도 하고. 울산에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있는 데 그 학생들 불러서 아이들 같이 수질조사도 했어요. 근데 2급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서 조사해보니까 버들치도 나오고, 많이 살아요. 그런 거 하고 하면서 알려지고 신문 만들어서 한 300부를 동사무소 계속 넣으니까 동장님 전화오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성에서 나온 비용으로 100개의 식물을

조사하고 했는데, 100개를 다 실을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가 붙인 이름이, 2.7km에요 구간이. 그래서 이점철로 해봤는데, 27가지만 합시다 해서 27가지만 책으로 만들었어요. 700부 발행해서 동네에 돌렸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유비지역아동센터장 면담 中-

작은 이유로 시작한 충효천 청소 활동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유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초반기 동사무소의 협조가 힘들어지자 본인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관심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이후부터는 충효동과 경주시에서도 충효천을 생태공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에 센터의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하였다. 충효천에서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신문제작은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다.

최근에는 유비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의 주도성이 커져서 충효천을 생태체험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학생들 스스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충효천 주변의 생태체험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학생들이 하고 있다. 전문설계의 능력은 없지만 충효천에 대한 여러 해 동안의 환경정비 경험, 유기농이나 환경과 관련된 지식,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다른 곳 탐방 등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모아 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이다. 또한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충효천 주변의 전봇대를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집집마다 있는 명패를 나무공예로 만든 명패로 교체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 또는 실천하고 있다.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활동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이나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도성과 정서적 안정이 가능해지고 또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학생들의 생태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나 호기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커피바리스타, 야생차 만들기, 발표 음식 만들기, 버려진 자전거 수리하기, 공예실 운영, 야생화 키우기, 고치나 벼 등 농작물 키우기, 이점칠 신문 만들기, 생태환경 동영상 만들기 등으로 프로그램의 주제가 확산되는 것도 유비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제들을 반영하면서 진화한 결과이다.

라) 성과

유비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시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지방에 살고 있으며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아, 성적부진아 등 다양한 문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센터 운영 초반에는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유비지역아동센터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자립심과 자존감이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요, 민주시민이 되더라고요. 토론을 해요, 싸우고, 장사하면서 많이 싸우고, 많이도 아니고 500원 가지고, 내가 많이 했고, 내 손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속하고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리고 신문을 만들고 충효천 알려야 한다는 거를 하는데... 굉장한 발전이었죠. 취재하러 다니다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서울에 연세대 구경시키려 했는데, 연세대를 안 봐요. 안내하려고 했던 이대출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거 참 이상하다고.... 연세대 식당에서 “야, 우린 이런 데 안 가는데 뭐 하러 우리가 가냐” 이러더라고요. 카페나 보여 달라, 우리 카페할거니까. 그래서 와서, “(함께한 협력 교회 자녀들을 대상으로)아니 개들 공부 잘하는 거 맞는데요, 어떤 애는 전국 20등이래요. 근데 개네들이 신문 차렸나요? 지들 신문도 안 읽었으면서.” 그니까 그런 걸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자부심, 자존감은 거기서 탄생했다고 봐요. 별로 아이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유비지역아동센터장 면담 中-

이처럼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좀 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아이들은 센터가 의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여기 주민들이 처음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없는 애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듣고 힘들어하고... 심어 놓은 허브를 훔쳐갔어요. 신기한 허브를 많이 심어놨는데, 등산객들이 와서 파 가요. 야생화를 파 가지고 가시거든요. 처음에 현수막 걸어서 “가져가지 마세요” 했는데, 여기 살던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 다 도둑놈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할머니들 초청하자 자꾸. 공짜로 차 드리자. 그게 지금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주민들이 자주 오세요. 책도 어느 날 와서 옆에 쌓아놓고 가시고. 우리 아이들도 뭐 있으면 갖다드리고...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올해에, 또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유비지역아동센터장 면담 中-

또한 유비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영어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영어 학습은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반복적인 영어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필리핀 등 협력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실제적으로 영어를 체험하고, 사용하고, 그 미래의 활용가치 또한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 정책적 시사점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복지기관에서 가시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유비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주시민역량의 측면에서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성미산학교와 마찬가지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자하는 바를 찾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상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활동이 스스로 원하는 바로부터 출발하고 갖춰지지 않은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 중에 아이들은 많은 점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역할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이다. 유비지역아동센터 활동의 대부분이 아이들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그 동기를 찾아낸 만큼, 아이들은 본인들의 활동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활동들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센터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며,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공공기관, 인근 주민들, 지역의 전문가들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에 익숙하다. 이는 성미산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관계와 사회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역량 교육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 근대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국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각종 사업과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사업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사업, 민주주의기반구축사업,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구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관리사업, 민주시민교육사업,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강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2013.9.25).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교육적 측면에서 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역량 교육 활성화를 추구하는 데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나) 추진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책 연구·사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처음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며, 2001년에 국회 통과와 함께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 등 기관의 추진 사업별 목표에 맞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 유일의 체계화된 연구·사업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두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기관이라는 기관 비전을 표방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발전이 기관의 주된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보급을 위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시민교육 직무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직무연수로서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사 직무연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연수 개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p.1)

- 목 적: 학교 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력 있는 자기 비전을 갖는다.
- 과정명: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
- 일 시: 2013. 7. 23. (화) 09:00 ~ 7. 24. (수) 17:00 -> 1박2일 15시간
- 장 소: 서울국제유스호스텔
- 대 상: 전국 초·중등 교원 25명
- 과 정: 전문성향상과정(교과지도)
- 종 별: 직무연수(서울시교육청 승인 서울교육2013-465)
- 평 가: 최소 12시간(총 15시간의 80%) 이수 시 수료 인정
- 일 정

날짜	시간	내 용	강사
7.23.화	09~10	등록 및 개강식	
	10~12 (2h)	마음 열기 다양한 모습, 비슷한 마음들의 반가운 만남	박근희 (매향여자정보교 교사)
	12~13	점심	
	13~16 (3h)	철학 탐구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가치 확인	고병현 (성공회대 교수)
	16~19 (3h)	비전 찾기 실천을 이끄는 나만의 비전 찾기	박은주 (당곡중 교사)
	19~20	저녁	
	08~09	아침	
7.24.수	09~12 (3h)	사례 공유 내 수업에 활용할 레시피 모음	김춘여(서울구일초 교사) 조영선(경인고 교사)
	12~13	점심	
	13~16 (3h)	체계 잡기 손에 잡히는 학교 시민교육 ABC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외래교수)
	16~17 (1h)	힘 모으기 현장에서 쓸 든든한 에너지 충전	
	17~	폐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을 전파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계획 세우기, 토론형 수업 진행하기, 학생자치 활동 지도하기, 학교 및 교실 문화 만들기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과 관련한 교과 혹은 교과 관련 내용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는 교육 이외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현대사 교사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어, 민주화와 관련한 지식 관련 연수와 민주시민역량 교육 보급과 관련한 연수를 구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활동가 아카데미, 민주시민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각종 사회교육 관련 일반인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전파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학교 이외 다양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진행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사례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획·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V-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동가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예시

날짜	시간	내 용	강사
첫째날	13:30	도착 및 등록	
	14:00	마음열기 -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개 및 인사, 오리엔테이션	전성결 청년평화센터 ‘푸름’
	16:00	강의 - “활동가, 시민교육을 꿈꾸다” 시민교육의 철학, 교육활동가 리더십	곽형모 NGO교육포럼
	18:00	저녁식사	
	19:00	연극워크숍 - “내가 생각하는 시민교육”	어연선 극단 ‘현장’
	22:00	자유시간 및 취침	
둘째날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아침을 열다 - “이야기가 있는 감성충전”	임상환 청년평화센터 ‘푸름’
	10:00	경험공유 워크숍 - “시민교육, 멈추어 길을 묻다”	이은숙 열린사회시민연합
	12:00	점심식사	
	13:30	강의 -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기획” 교육 기획의 이론과 실제	조철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5:30	워크숍 - “내 손에 잡히는 교육기획” 교육기획 실습	이은숙 열린사회시민연합
	18:00	저녁식사	
	19:00	공동체 놀이 - “놀며, 배우며” 쉽게 따라하는 공동체 놀이 체험	전성결 청년평화센터 ‘푸름’
21:00	참가자 친선의 밤		
셋째날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아침을 열다 - “이야기가 있는 감성충전”	임상환 청년평화센터 ‘푸름’
	10:00	강의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과 교육실무” : 교육실무의 A to Z	최지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2:00	점심식사 및 여장정리	
	13:00	마무리 - “다시 현장으로” 교육내용 종합, 참가자 평가	이은숙 열린사회시민연합
	14:00	사진촬영 및 헤어짐	

*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1). p.1-2

민주시민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중등 교사, 시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표 V-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예시

날짜	시간	내 용	강사
첫째날	10:30~11:00	접수 및 연수안내	
	11:00~12:00 (1h)	마음열기	권혜진(홍사단교육운동본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1h)	여는 강의】 “한국사회의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권혜진(홍사단교육운동본부)
	14:00~17:00 (3h)	강의&워크숍】 “의사소통에 관한 이해”	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17:00~18:00	저녁식사	
	18:00~20:00 (2h)	워크숍】 “몸과 마음으로 하는 소통”	이재형(심신통합치유센터)
	20:00~22:00	만남의 시간	
둘째날	09:00~12:00 (3h)	워크숍】 “회의 진행 및 합의 형성 방법”	강영진(성균관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3h)	워크숍】 “참여형 의사결정 방법 소개와 실습”	이은숙(열린사회시민연합)
	16:00~16:30	마무리 및 수료식	

*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2). p.1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주의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보지 <시민교육>을 발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2013.9.25).

라) 성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분야에 있어서 유일하게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러 학교와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중요한 교육활동으로서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학술적인 노력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파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현장과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참 뜻을 전파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단순히 학교를 통해 지식적인 학습으로만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이후에 사회인으로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러한 의식적 측면에서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 정책적 시사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여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마을단위, 혹은 학교단위 프로그램에 비해 다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아직은 교육 현장에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노력은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은 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현재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연구, 개발, 전파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상이나 주제가 한정적이며 참여 규모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보여 진다. 학교나 일반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민주시민 역량들을 테마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제처와 같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과 효과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도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관련 단체,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풍부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분야의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나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개발되어 실행된 프로그램들을 수집하여 이를 전파하는 정보교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

3. 해외 우수사례 분석

1) 학교 우수사례 분석

(1) 미국 'Project Citizen'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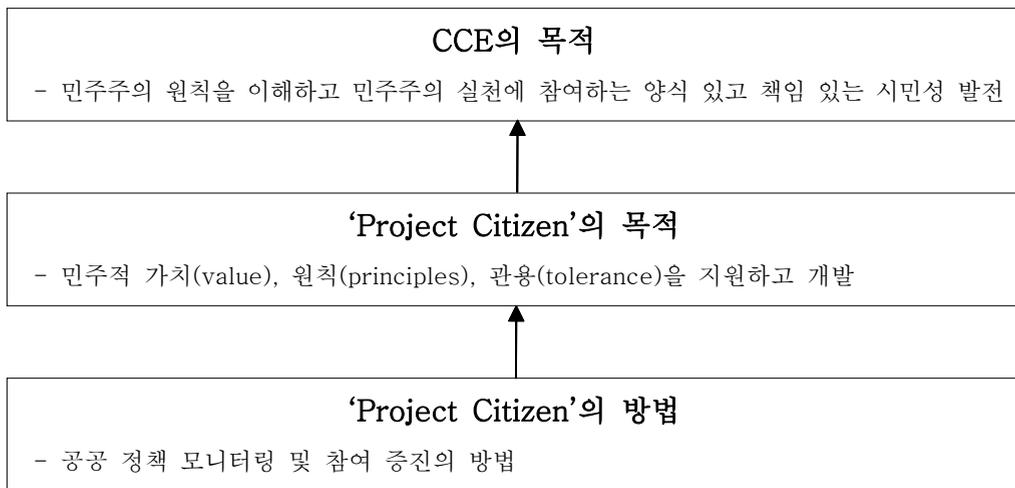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기관인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이하 CCE)'에서 운영하는 학교프로그램이다. CCE는 1960년대 미국의 민주시민 역량 교육이 편협된 인권관련 법안의 개혁, 교육과정의 혁신, 학교 교과서의 현실 사회 내용 반영, 미국 헌법 등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를 주도하기 위한 단체로 탄생하였다.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CCE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계획과 교과서 제작 등은 CCE에서 주관하지만 실시하는 곳은 학교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원할 경우 CCE의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CCE와 MOU를 체결하여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온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미국 시민교육센터(CCE)에서 ‘Project Citizen’의 운영 목적은 기본적으로 CCE 전체의 운영 목적을 수용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기술된다.

CCE 전체의 목적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식 있고 책임 있는 시민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CCE, 2013a). 이런 CCE 전체 목적을 반영하여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민주적 가치(value), 원칙(principles), 관용(tolerance)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CE, 2013a).

이런 CCE 전체 목적과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영향을 주는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CE, 2013a). 이를 위하여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지방(local) 정부와 주(state) 정부의 의사결정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CCE, 2013a). 이상의 ‘Project Citizen’ 프로그램 목적과 방법을 체계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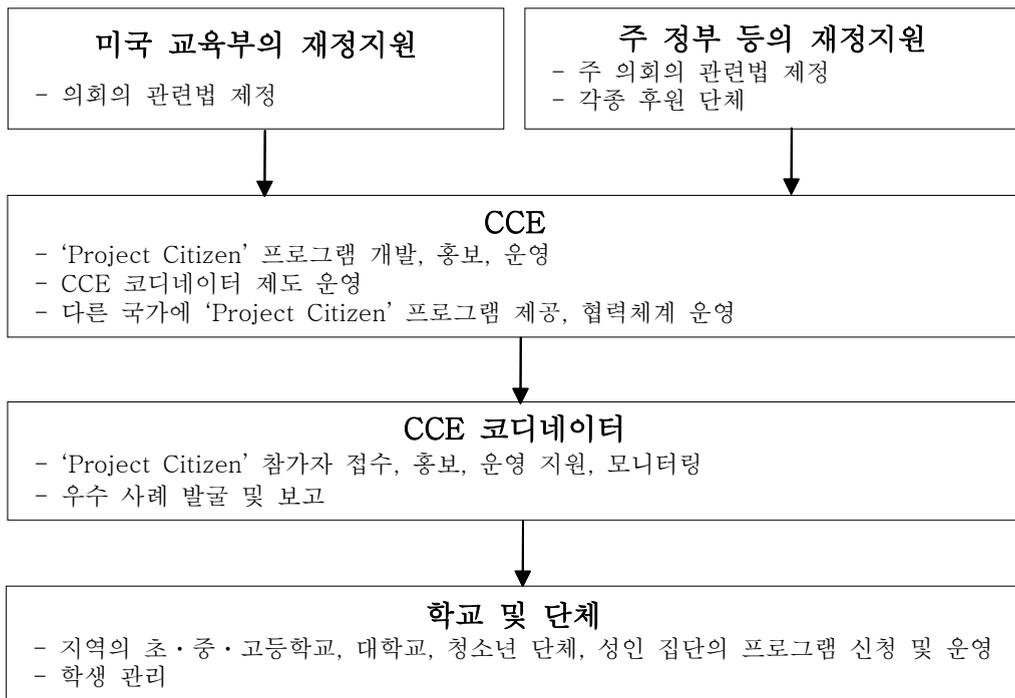
* 출처: CCE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

【그림 V-15】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

나) 추진체제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각 주(state)의 네트워크와 주 의회 등의 지원에 의하여 실행된다(CCE, 2013a). 이 중에서 미국 교육부는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각 주(state)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CCE, 2013b).

물론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CCE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CCE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CCE는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보급하는 주체로서 운영되고 있다. CCE는 미국 전역에 지역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CCE, 2012). 이 코디네이터 제도는 미국의 주마다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교나 교사 또는 학습자가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여 참여에 대한 질문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거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수행한다(CCE, 2013b).



* 출처: CCE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

【그림 V-16】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추진체제

CC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학교에 보급되어 운영되는 학생 주도형의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다. 물론 중간에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학교, 성인 집단 등이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수혜자로서 위치한다.

추진체제의 주체별로 보면, 미국 교육부와 주 정부 그리고 관련 후원단체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의회의 관련법 제정과 주 정부의 관련 법 제정이 뒷받침되어 있다. 실제적인 운영 주체인 CCE의 경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의 주별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역별로 담당자인 코디네이터를 두고 참가자 접수 및 안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코디네이터와 각급학교 등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이 학교 등에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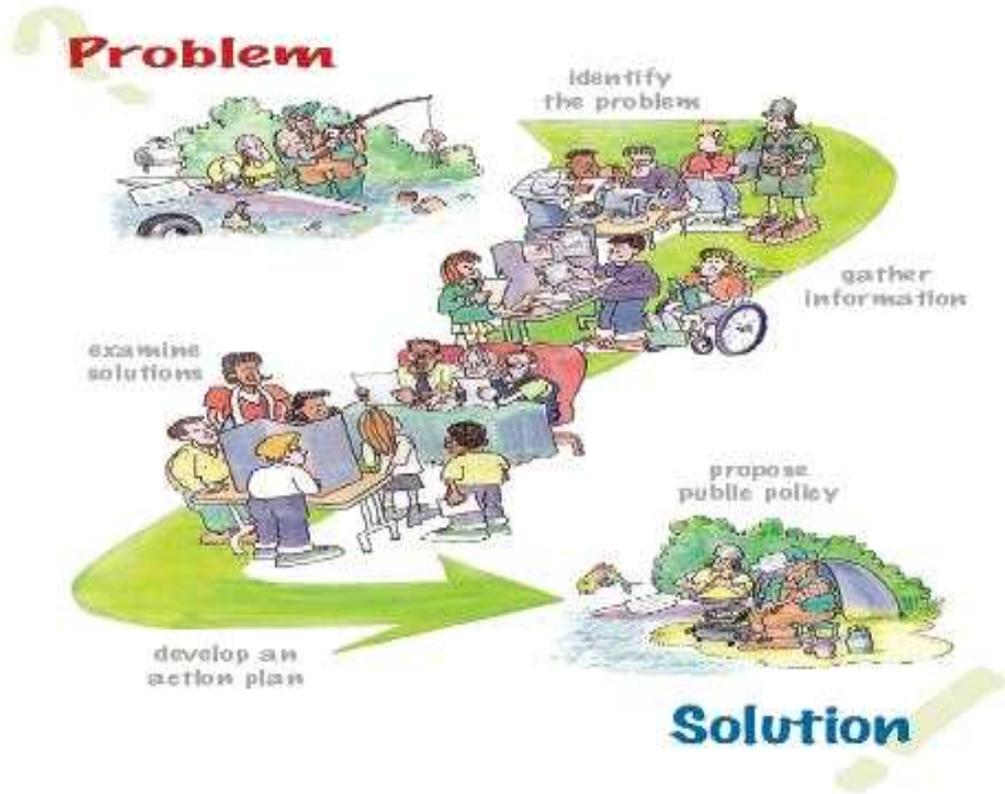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제도, 운영 방법, 민주적 참여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취한다(조철민, 2007).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나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의회 등의 입법활동에도 참여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스케이트보드의 관리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스케이트보드 보관함 설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조철민, 2007).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법을 적용한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한 5단계를 모델로 제안하고 있다. 이 다섯 단계는 문제 규명(Identifying the problem), 정보 수집(Gathering information), 대안 평가(examining solutions), 액션플랜 개발(Creating an action plan), 공공 정책 제안(Proposing a public policy)으로 일종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단계 또는 교육과정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CCE, 2013b).

문제 규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의견을 수합하는 단계이다(CCE, 2013b). 때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집단 형태의 토론이나 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각종 매체와 학습자원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평가도 실시한다(CCE, 2013b).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가치, 중요성, 문제와의 관련성 등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또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정보 수집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결책을 찾는 단계로 진행된다. 대안을 만들거나 이전에 수집한 정보에서 괜찮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기도 한다(CCE, 2013b). 대안이 선정되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실천 계획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대안을 실행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포함된다(CCE, 2013b). 예를 들어 지역의 더러워진 하천을 청소해야 하는 경우 이를 자신들이 직접 청소를 할 것인지, 또 그럴 경우 필요한 청소 도구는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주 의회나 지자체 의회에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실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런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과정을 소개하기 위하여 CCE에서 제공하는 홍보책자의 한 내용이다.



* 출처: CCE(2013b). p.5

【그림 V-17】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교재도 CCE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Level 1: Middle School’은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된 교재이다. 그리고 ‘Level 2: High School’은 고등학교 학생이나 성인이 공공 정책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자이다 (CCE, 2013c).

‘Level 1: Middle School’은 교사를 위한 교재와 학생을 위한 교재로 구분된다. 교사를 위한 교재는 중학교 단계에서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나 민주적 공공 정책의 마련 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다. 구체적인 교수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워크시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격은 16달러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12달러에 판매하고 있다(CCE, 2013c). 교재는 공공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 대한 소개, 지역의 공공 정책 문제 규명, 교실에서 학습하기 위한 문제 선택,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학급 포트폴리오 개발, 포트폴리오 발표, 학습 경험에 대한 반추 등으로 구성된다(CCE, 2008).

‘Level 2: High School’도 교사용과 학생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교재에서도 공공 정책의 개발 과정에 대한 소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소개 등이 다루어진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공공 정책에 참여하려는 성인이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교재는 16달러이고 학생을 위한 교재는 13달러이다(CCE, 2013c). ‘Level 2: High School’에도 공공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문제 규명부터 학습 경험에 대한 반추까지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는 왜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CCE, 2010).

라) 성과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기존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리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한계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지역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경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Fry & Bentahar, 2013).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관련된 교재 등을 개발하여 지역의 학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실제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민주적 가치, 원칙, 관용을 이해하고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개발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Fry & Bentahar, 2013).

더불어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이해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과 함께 다른 해외 국가로 수출되면서 미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확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최근까지 세계의 80개국에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성과를 찾을 수 있다(CCE, 2012).

마)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우선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담당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CCE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와 다른 형태의 기관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CCE는 미국의 대표적이 민주시민역량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Project Citizen'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전담할 수 있는 주요 단체나 기관을 공공 자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방법을 취한다는 점과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민주시민 교육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맺을 때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학습의 방법이 그만큼 실천적이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의 유사한 내용만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 보다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이런 점에서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의 운영 체제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즉, 외부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 학생들의 프로젝트 형태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2) 미국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중에는 정치 교육 영역도 적지 않다. 이 중에서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 중에 하나가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Help America Vote Mock Election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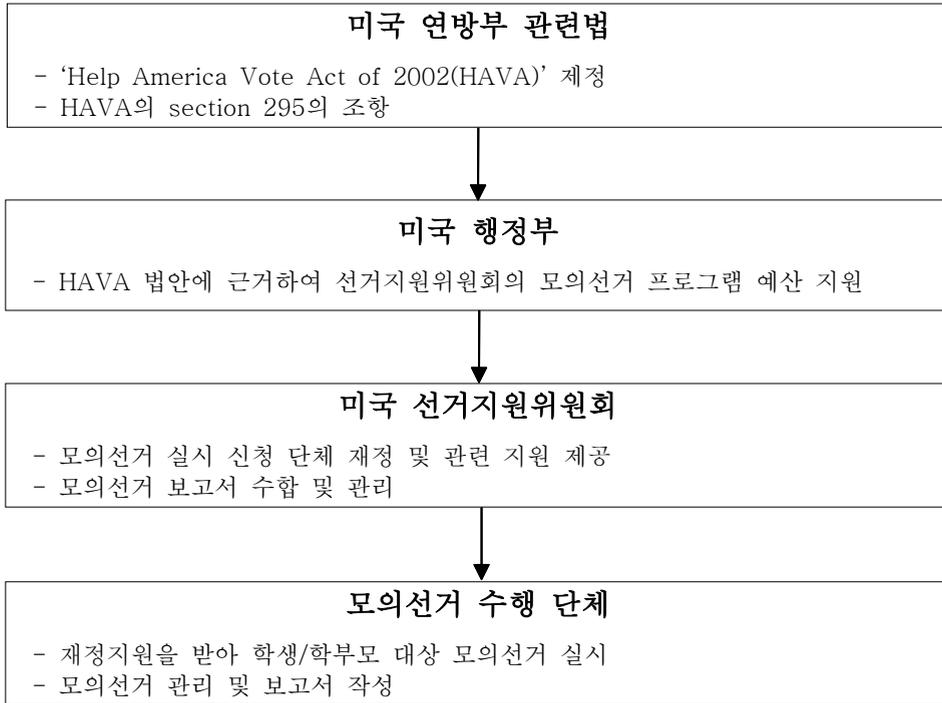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EAC, 2010).

주요 사업 추진 기관은 미국 선거관리위원회(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US EAC)이다.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면서 동시에 민주시민의 의무(duty)로서 투표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EAC, 2010). 그리고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표 방법과 투표 과정 등에 대하여 친숙해지고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다 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실제 이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2년에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관련법인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HAVA)'를 제정하였다. 이 법안을 근거로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EAC, 2010). 모의선거지원 조항이 들어있는 HAVA에서는 모의선거장소나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모의투표권자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모의선거의 운영 역시 대부분 학교나 교실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나) 추진체제

미국의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은 1980년부터 시작되어 약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2013년까지 약 5천 만 명의 학생들이 모의 선거를 준비하거나 참여하면서 선거과정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National Student Mock Election, 2013a). 2012년 대통령선거까지 18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은 연방법의 지원 조항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주정부의 재정 지원 신청과 구체적인 모의 선거 지원 자료 개발 등의 프로그램 추진, 학교나 교실 단위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에 의한 모의 선거 준비 및 실시의 세 단계의 체계를 취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EAC, 2010; National Student Mock Election, 2013a).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V-18】과 같다.



【그림 V-18】 미국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체제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연방 법안은 2002년 제정된 ‘HAVA’ 법안이었다. 이 법안 중 ‘Section 295(295절)’에서는 전국 학생 및 학부모 모의 선거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재정 지원 주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295절의 관련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사한 미국의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에게 학생과 학부모 모의선거협회가 실시하는 투표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또는 교실 단위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 의하여 구성된 모의선거협회 또는 유사관련 단체가 모의선거를 통한 교육활동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고 관련 재정 지원 및 기타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선거지원위원회가 존재한다. 물론 선거지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예산은 미국의 행정부가 ‘HAVA’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HAVA법」

295절. 전국 학생/학부모 모의선거

(a) 일반: 선거지원위원회는 미국선거에서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 비당파적 기구인 전국 학생/학부모 모의선거협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투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수여하는 권한을 가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a, p.40)

<Help America Vote Act Title II Subtitle D Part 6>

Section 295. National Student and Parent Mock Election

(a) IN GENERAL: The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award grants to the National Student and Parent Mock Election, a national nonprofit, nonpartisan organization that works to promote voter participation in American elections to enable it to carry out voter education activities for students and their paren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a, p.40)

모의선거 수행 단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이 되는 모의선거협회이다. 그러나 이런 단체가 따로 존재하기 보다는 주정부, 지역교육구, 학교 등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의선거를 교육적 활동의 하나로서 실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신청을 선거지원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경우 모의선거협회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에서 모의선거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의선거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거지원위원회에 신청하기도 한다. 이런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모의선거가 실시되면 그 결과와 학생들의 참여, 참여한 소감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선거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 더불어 활동모습 사진이나 학생들의 소감, 투표결과 등이 모두 인터넷상의 관련 홈페이지(www.nationalmockelection.org)에 게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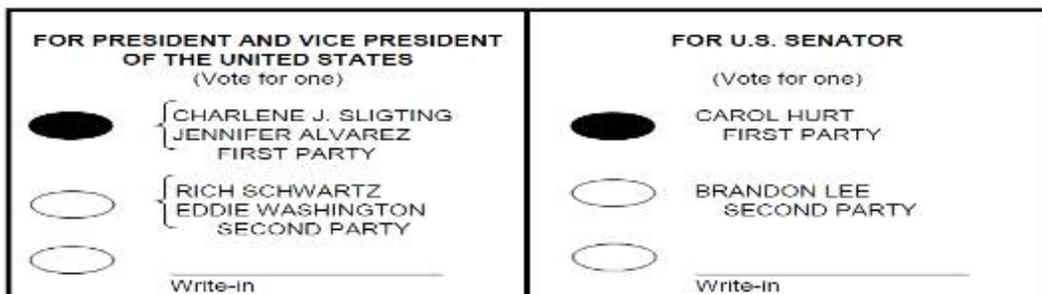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미국의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는 점을 ‘HAVA’법에서부터 명시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정치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 기초하여 미국 선거지원위원회는 모의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을 방아서 예산지원을 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0개의 단체에 8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a). 특이한 사항은 미국의 모의선거지원은 실제 선거와 맞물려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면 실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5일 전까지 대통령 모의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a). 이를 ‘HAVA’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투표용지를 개발하거나 준비하고 선거일정 등을 정하고 실시하는 등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실시를 직접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선거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모의선거를 위한 선거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모의선거를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이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투표소 관리 지침, 투표소 게시물 등 실제 선거를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물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주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와 연동하여 모의선거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물론 관련 비용을 모의선거지원과 관련하여 선거지원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았다. 일리노이 주의 2012 대통령 모의선거 매뉴얼에서는 모의선거 실시를 위한 지침이나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또 투표용지 및 표기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서 투표공지서 작성법, 투표소 내 투표자 이동 경로, 선거인단 등록 서류, 선거감시인단 등록, 투표소 내 표시물(안내문, 안내 표지 등) 등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Illinois State Board of Elections(2012). p.8

【그림 V-19】 미국 일리노이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 투표용지 표기법

NOTICE OF ELECTION

NOTICE IS HEREBY GIVEN THAT ON _____ (date)

AT _____ (Name of school and/or name of classroom) _____ (place)

AN ELECTION WILL BE HELD FOR _____ Federal Offices

WHICH ELECTION WILL BE OPENING AT _____ (Time) AND

CONTINUED OPEN UNTIL _____ (Time) OF THAT DAY.

Dated at _____ (Name of School) this _____ day of _____, 20____

ELECTION AUTHORITY

* 출처: Illinois State Board of Elections(2012). p.21

【그림 V-20】 미국 일리노이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공지서 작성법

일리노이 주뿐만 아니라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매뉴얼을 사전에 보급하고 모의선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보다 더 자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 텍사스 주의 경우 주 자체에서 ‘Project VOTE(Voters of Tomorrow through Education)’를 실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모의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즉, 주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투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지원 및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텍사스 주에서 2012년 대통령 모의선거와 관련되어 배포한 매뉴얼의 경우 매우 체계화되어 있어서 6단계로 모의선거의 준비와 실시 그리고 개표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모의선거 6단계를 보면, 선거인단 등록 과정(Step 1), 선거인단 등록 유도 및 홍보(Step 2), 모의선거일 준비(Step 3), 선거감시단 및 운영단 지정(Step 4), 투표 및 개표 장소 준비(Step 5), 개표 결과 정리(Step 6)로 구성된다(Texas Secretary of State, 2012). 이 6개의 단계별로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의 경우 실제 2012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사진과 실명을 기재하고 실제 투표용지로서 사용할 정도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서 개표서류, 개표결과 및 선거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지, 투표소 게시물, 투표부스와 투표함의 예, 전자투표 설명서 등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이 매뉴얼에 담겨있다.

2012 Texas Student Mock Election

OFFICIAL BALLOT (BOLETA OFICIAL)

Instruction Note: (Nota de instrucción)
Vote for the candidate of your choice by placing an "X" in the square next to the candidate's name.
(Vote por el candidato de su preferencia marcando con una "X" el cuadro a la izquierda del nombre del candidato.)

PRESIDENTIAL (PRESIDENCIAL)



Mitt Romney/Paul Ryan
Republican Party
(Partido Republicano)



Barack Obama/Joe Biden
Democratic Party
(Partido Democrático)



Gary Johnson/Jim Gray
Libertarian Party
(Partido Libertariano)



Jill Stein/Cheri Honkala
Green Party
(Partido Verde)

WRITE-IN (VOTO ESCRITO)



* 출처: Texas Secretary of State(2012). p.18

【그림 V-21】 미국 텍사스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 투표용지

PLACE FIVE TALLIES IN EACH SQUARE

EXAMPLE:

Candidate 1 or Proposition					None/Blank	Protest/Other
Candidate 2 or Proposition						

NAME OF CANDIDATES OR PROPOSITIONS							TOTAL

See reverse side for instructions. (Elector verify that the above is true and correct. Tally sheet used by voter. The above described structure. Signature of person who used sheet.)

* 출처: Texas Secretary of State(2012). p.25

【그림 V-22】 미국 텍사스 주 2012 대통령 모의선거 개표용지

이런 주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나 준비에 대한 지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모의선거를 준비하고 실제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모의선거를 단지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연습과 학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선거지원 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용가능한 교육용 교재 또는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적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시민정신, 민주주의, 미국의 정치적 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모의선거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다(National Student Mock Election, 2013b). 실제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면 소개(introduction), 정부(our government),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American principles), 모의선거 과정(the electoral process)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련하여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책자나 동영상 미디어 등의 교육자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National Student Mock Election, 2013b).

라) 성과

미국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로서 우선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그 동안 5천만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와 투표의 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선거 경험을 가지고 성인으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아직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은 투표에 대한 경험을 실제와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권을 갖는 나이에 진입하여도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든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전자방식의 투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투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된다. 따라서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거를 경험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선거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사 또는 학부모는 선거와 관련된 매우 실제적이고 선거의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선거과정에 대한 친숙함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거를 감시하고 또 민주주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한 매우 강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거를 준비하고 투표인단의 등록을 받고 개표를 하는 등의 활동을 직접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선거에 대한 경험을 학령기 학생들이 갖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주요 선거, 예를 들어, 회장 선거, 반장 선거 등이 이루어지지만 일종의 인기투표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최근에는 선거 운동을 보다 강화하고 실제 투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초보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하나로서 미국의 모의선거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에게 선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모의선거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재외국민의 선거를 위한 모의 선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의선거는 교육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선거제도를 시험하고 문제점을 찾기 위한 모의선거라는 점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미래의 투표권자들의 민주적 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갖는 모의선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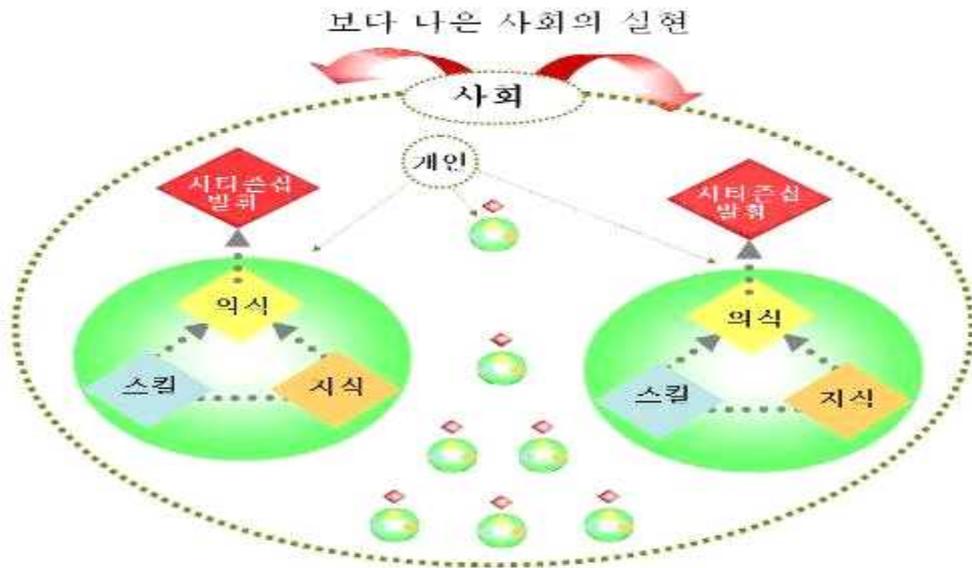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의선거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제도 실시에서 편리함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선거지원위원회가 직접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보고를 받고 결과를 수합하여 공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물론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교수자료의 제공은 선거지원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제적인 자료의 개발과 제공은 선거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각급학교나 단체 등의 신청을 통하여 모의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제도 실천을 위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본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현재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문부과학성에서도 시민의식 육성을 주제로 연구개발학교를 지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미츠비시연구소에 의뢰해서 연구한 ‘시티즌십 교육과 경제사회에서 사람들의 활약에 대한 연구회 보고서’는 현재까지 일본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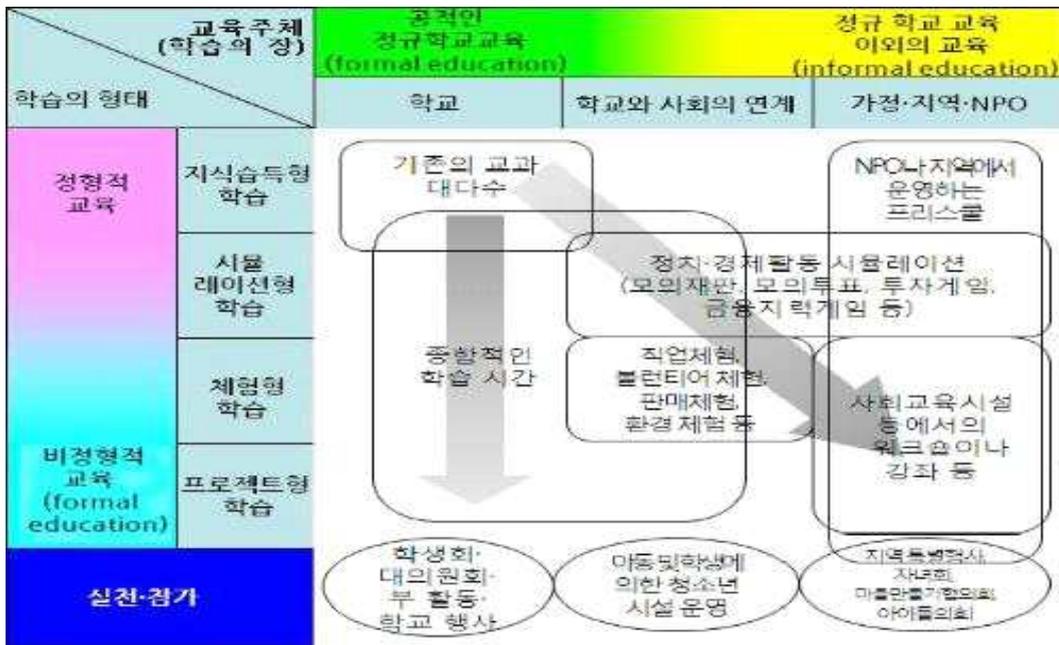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들이 의식, 지식, 스킬을 균형 있게 습득하여 시민의식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자기실현과 동시에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그림 V-23】 참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 출처 : 경제산업성(2006). p.35

【그림 V-23】 개인의 시티즌십 발휘와 사회와의 관계

일본의 경제산업성 보고서(2006)에 제시된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행주체와 학습형태에 의한 분류인데 그 중 교육시행주체에 따른 분류는 공적인 정규학교교육(포멀 에듀케이션)과 학교 밖 비정규교육(넌포멀 에듀케이션)으로, 학습형태에 의한 분류는 정형적 교육, 비정형적 교육, 실천·참가형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교육대상자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재학생 대상의 학습 프로그램, 사회인 대상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 보고서(2006)에 제시된 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분류방식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분류를 제시하면 【그림 V-24】과 같다.



* 출처 : 경제산업성(2006). p.41

【그림 V-24】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분류

학교주체의 대표적 사례로써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프로그램은 주로 학령기 대상의 정형적이고 공적인 정규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즈야마 미츠하루(水山 光春, 2010)는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2006)를 수정하여 다음 <표 V-11>과 같이 시민의식 교육을 분류하고 실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프로그램은 이 중 대표적인 실천 사례의 하나이다.

표 V-11 시티즌십 교육의 범위와 활동

범위	좁은 시티즌십	넓은 시티즌십
활동	국정이나 지방정치를 지탱하는 투표자(유권자) 개인으로서의 시민성 육성	커뮤니티의 변화를 이끄는 것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을 육성
정적 시티즌십 아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적인 시티즌십	국정이나 지방정치에 관한 정치적인 교양, 정치에 관한 지식과 이해, 일본국 헌법의 정신, 의회제 민주주의의 기능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대립상황(국정이나 지방정치에 관한 공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나 개인 간의 갈등과 같은 행정부의 범위를 벗어난 공공의 과제를 포함)에 관한 지식과 이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라든지 민주주의
동적 시티즌십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실천적인 시티즌십	정치적 권리행사로서의 선거나 투표, 기타 정치활동	커뮤니티 문제의 해결 커뮤니티 활동 참가

* 출처 : 미즈야마 미츠하루(2010). p.27

미즈야마 미츠하루(2010)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형적인 시민교육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의 핵심이 되는 사회과 위주의 접근방법과 사회과 이외의 영역과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범학교적(학교전체) 접근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한 바 있다.

먼저 사회과 위주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아동 수 약 750명, 교직원 수 30명인 중간 규모 학교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시민' 교과목을 설치하였다. 이 '시민' 과목에는 초등학교 3년부터 6년까지 연간 105시간(105/980~105/1015), 즉 전체 수업시간의 약 10%를 할당하고 있다(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a). 이 새로운 '시민' 교과목의 목표는 '제안이나 의사결정의 절차를 배우으로써 날로 가속화되는 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의사결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능력', 즉 시민적 자질의 바탕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란, 개인의 소망 실현을 위한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적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시민과

는 3단계의 판단을 포함한 학습과정을 설치하고 독특한 방식의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b).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사회과 위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제안이나 의사결정 방법의 습득을 통해 점점 가속화되는 사회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힘으로서의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라 하겠다(미즈야마 미츠하루, 2010).

이 학교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최근 청소년의 의식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은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판단력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략)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제안하거나 행동하는 단계에 이르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행동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도자의 교육관 문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왕에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 지도자들의 교육관 문제도 있다. 우리 교육지도자들 중에는 미리 준비된 문자, 지식, 도덕을 학습자들이 마치 열심히 저축하듯이 머릿속에 쌓아가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이른바 은행식 교육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b).

다음으로 범학교적(학교전체) 접근방법에 있어서 2008~10년 문부과학성 지정 연구개발학교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기존의 ‘시민’ 교과목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과목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학교에서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이 학교가 독자적으로 정의한 공공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민주적 사고에 기초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며, 특히 자신과 친구들과의 차이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이다(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9).

특히 이 학교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이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나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 등에서 각자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하였다. 즉, 일부는 친구나 주변 일에 관여하지 않고 혼자 제 멋대로 행동한다든지, 마음을 닫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친구 교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됐다(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9).

이 학교의 범학교적인 시민교육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다양성 존중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인 학교로 바꾸어 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권리주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 두 번째의 특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마음과 신체 발달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이다(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9).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권력과 권위의 작용은, 교실 내에서는 교사-어린이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중학생들에게는 교사-어린이 관계뿐만 아니라 어린이-어린이 사이의 권력관계도 나타난다. 따라서 마음과 신체의 발달 차이가 큰 중학생들로서는 새로운 어린이-어린이 사이의 권력관계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는 이렇게 권력관계가 불안정한 시기라는 점에 특별히 주목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미즈야마 미츠하루, 2010).

결국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범학교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학교에서 정의하는 공공성을 육성하는 것인데, 공공성이란 교사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운다는 관점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다(미즈야마 미츠하루, 2010).

‘함께 배움을 창조한다’라는 명칭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생으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써 지향하는 목표는 첫째, 어린이들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교사와 함께 자치한다. 둘째, 어린이들이 생활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셋째, 어린이들이 주변의 문화를 알고, 이질문화와의 공존을 생각한다. 넷째, 어린이들이 주변의 경제를 알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능력의 기본이 되는 자질과 능력(참가, 협의, 창조)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경제산업성, 2006).

또한 시민의식 함양과 관련된 다른 능력과의 관련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 <표 V-12>와 같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학습형태로는 다른 연령 간의 교류학습, 과제선택학습·프로젝트형 학습, 지역사회와의 협동학습·시뮬레이션형 학습, 타교와의 교류학습 등을 들 수 있다(경제산업성, 2006).

시민의식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의 관련성	I. 의식	a: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b: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c: 사회참가에 관한 의식
	II. 지식	a: 공적,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
		b: 정치 분야 활동에 필요한 지식
		c: 경제 분야 활동에 필요한 지식
	III. 스킬	a: 자기/타인/사회의 형태와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이해하는 스킬
		b: 정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c: 타인과 함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능력

* 출처 : 경제산업성(2006). p.45-46

나) 추진체제

일본의 다양한 시민교육 가운데 초중등학교 공교육에서 정규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교육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1976년부터 시작된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제도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고 있다.²⁾ 연구개발학교제도는 여러 가지 교육적 과제라든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교를 연구개발학교로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게는 학습지도요령 등 현행 기준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실험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지도방법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공교육은 반드시 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시민교육만을 위한 독립된 과목이 없으므로 시민교육을 독립된 정규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부과학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과편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제도이므로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경우도 이런 연구개발학교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2)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 지정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mext.go.jp/a_menu/shotou/kenkyu/index.htm 2013.10.4

일본의 초중등 공교육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경우 그 추진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부 행정절차 규정으로서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 제도를 이해해야 하며, 둘째로는 실시 주체인 학교와 학교법인에서 진행되는 추진체제를 동시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쪽의 전체 추진체제를 개략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 문부과학성이 연구개발과제를 정한 다음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교육위원회에 학교 추천을 의뢰, 학교 관리기관이 주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설정해서 문부과학성에 신청한다.
- 학교 관리기관(학교법인)이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연구개발학교 지정신청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 문부과학성은 심사 후에 연구개발학교로 지정(기간은 원칙 4년, 과거엔 3년)한다.
- ▶ 문부과학성은 연구개발의 기획, 심사, 평가 등을 위해서 문부과학성 산하에 교육연구개발기획 평가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지정을 받은 오차노미즈 초등학교는 시민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실시,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지도위원회와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실제지도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아울러 관련 발표회, 자체평가, 외부평가 등을 시행한다.
- 학교 관리기관은 매년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 기간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 문부과학성은 이런 평가보고서들을 수집, 정리, 편집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
- 학교와 정부는 연구 성과를 최대한 공개하고 또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재정리한 자료.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미즈야마 미즈하루(2010)는 지식, 기능, 가치라는 3가지 측면에서 시민교육의 학습내용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V-13> 참조).

표 V-13 학습내용 구성요소

분류	구성요소		
	지식	기능	가치
사회과 어프로치 :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과】	사회과 내용과 거의 비슷한 지식	가치판단·의사결정	
범학교 어프로치 :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각 교과별 지식, 시민교육의 지식으로는 분명치 않음	친구들과 자신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	공공성·다양성

* 출처 : 미즈야마 미즈하루(2010). p.31

먼저 사회과적 접근에 있어서 경제산업성 보고서(2006)에서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과 학습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표 V-14> 참조).

또한 경제산업성 보고서(2006)에서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범학교적 시민교육 프로그램 학습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표 V-15> 참조).

표 V-1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과 학습내용 사례

도입대상	초등 4~6학년
주제	“훗카이도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시민(사회과)】
목표	시민교과 4년간의 목표 : 우리나라의 국토, 역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시각/사고방식을 살려서, 제안이나 의사결정 활동을 통해서, 세계로도 눈을 향하는 책임 있는 시민의 자질을 배양한다.
키워주고 싶은 의식·지식· 스킬	(정보수집/가공) 환경이나 산업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한다. 환경이나 산업의 경향성을 추측한다. 환경이나 산업의 의미를 서로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 (실현 의지) 산업의 모습을 자료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환경이나 산업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국토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시민의식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능력	의식-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다양성, 다문화 존중
	지식-공적·사회적 분야	문화, 마을가꾸기, 환경문제
	지식-경제분야	시장원리, 자본주의의 기능에 관한 기초
	스킬-자신/타인/사회의 인식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사물을 철저히 생각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
	스킬-정보/지식수집/이해/판단	대량의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가치판단력, 논리적 사고력, 기획력, 구상력
	스킬-의사표명/의견청취/의사결정 실행	프레젠테이션 능력, 듣기능력, 토론력, 리더십, 팔로워십력
상정된 학습시간	약 10~13시간	
학습활동내용 (실천사례: 초등1년)	<p>개요 :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시뮬레이션을 시도한다. 홋카이도의 자연조건을 살려서 그 지역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생산활동, 개발사업 등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p> <p>조건 : 어떤 요리점으로부터 홋카이도 도카치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나 지형을 살리고, 또 홋카이도 주민들의 생활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p> <p>(1) 회사를 만들려면 무엇을 조사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도카치 지방의 기후, ② 도카치 지방의 산업, ③ 도카치 지방의 교통망, ④ 도카치 지방의 마을부흥운동 실태 등</p> <p>(2) 회사를 기획한다. (3) 사업을 제안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고한다. (4) 각각의 회사 업무내용이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고, 여러 번 자신들의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한다.</p>	
지도 포인트와 유의점	<p>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홋카이도 지도,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한다. ‘홋카이도 지역주민의 생활도 윤택하게 한다’는 조건에 특별히 주목시켜서 사업을 구상토록 한다. 자기가 시작하려는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 근거에 중점을 두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영역들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p>	
기대 효과	‘조사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서 얻은 정보를 살려서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교재, 준비물	홋카이도의 지도, 사진자료 등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유사사례	<p>이 사례의 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p> <p>(1)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점 메뉴의 개발 (2) 식재료 조달계획 ㉠어떤 재료를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3) 개발한 메뉴의 식재료 자급률에 대해서 생각한다. (4) 현청(도청) 소재지에 지점을 내는데 있어서, 각 도도부현(시도군)의 이름이나 현청(도청) 소재지 이름 등을 조사해서 기록한다. (5) 이 요리점이 쌀 생산까지 직접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나 ㉡쌀 품종은 어떤 것으로 하나 ㉢책임자는 누군가(후보지와 후보자)?</p>	

* 출처 : 경제산업성(2006). p.47-49

도입대상	초등1~2학년	
주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친구(생활과)】	
목표	가정에 따라서 약속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가정에서 약속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한다. 교실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책을 생각한다.	
키워주고 싶은 의식·지식·스킬	<p>지역사회, 가정, 학교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한다.</p> <p>각 가정마다 약속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p> <p>약속이 자기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한다(능력)</p> <p>조사: 자기 지역과 가정의 약속에 대해서 보호자를 통해 조사해서 기록한다. 이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p> <p>커뮤니케이션: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에 포함된 공통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룹별로 토의한다. 또 각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p> <p>참가: 다른 지역, 가정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급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p>	
시민의식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능력	의식-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다양성 존중
	지식-공적·사회적 분야	사회적 규범
	스킬-자신/타인/사회의 인식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남을 이해하는 능력
	스킬-정보/지식수집/이해/판단	가치판단력, 논리적 사고력, 기획력
	스킬-의사표명/의견청취/의사결정 실행	공감적 비판의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 남의 말을 듣는 능력
상정된 학습시간	6~8시간	
학습활동내용 (실천사례: 초등1년)	<p>(1) 튜닝 액티비티: 약속을 소재로 한 작문을 읽는다.</p> <p>(2) 참가, 조사: 자신의 지역, 가정의 약속에 대해 조사한다.</p> <p>(3) 커뮤니케이션: 같은 약속, 다른 약속을 그룹으로 묶어서, 그 의미에 대해 이해를 높인다. 자기 집에서의 약속을 반원 모두에게 전달한다. (그룹별 발표) 자기 집에서는 없는 약속을 발표한다. (전원이 앞에 모여서 이야기) 자신이 모르는 약속이나 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기록한다.</p> <p>(4) 참가 커뮤니케이션: 자기 학급에서 필요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한다.</p>	
지도 포인트와 유의점	‘집에서의 약속’이라고 할 때, 내용이 다양하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한정(예를 들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규칙)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에서의 약속’과 ‘집에서의 관습’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한다.	
기대 효과	서로의 가정이나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다.	
교재, 준비물	서로를 이해하고, 안심하고 마음을 여는 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의 기초를 만든다.	
교재, 준비물	작문용지	
기존 프로그램이나 유사사례	특별히 없음	

* 출처 : 경제산업성(2006). p.46-47

라) 성과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시민과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그 성과와 과제 역시 연구개발 측면의 성격이 강한데, 시민과의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미즈야마 미츠하루, 2010).

먼저 성과에 있어서 사회를 보는 세 가지의 눈(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b)인 “① 사회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동시에 있다. ② 개인의 이해와 사회 전체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③ 그렇게 때문에 세상에서는 넓은 시야에서 사회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궁리와 노력이 필요하다.”을 키워줄 수 있다는 시각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미즈야마 미츠하루, 2010).

다음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저학년 수업과목인 ‘친구’에서 익힌 개인적인 의사결정력, 타인과의 관계성 등이 중학교 시민교과에서는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제안이나 의사결정의 요점을 어떻게 추릴 것인가 하는 점(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b), 그리고 제안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배움을 일상생활이나 창조활동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미즈야마 미츠하루, 2010).

마) 정책적 시사점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시민’ 교과목을 설치하여 초등학교 3년부터 6년까지 연간 105시간, 즉 전체 수업시간의 약 10%를 할당하여 수업을 함으로써 학교의 교과를 통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2008~10년 문부과학성 지정 연구개발학교로써 2008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기존의 ‘시민’ 교과목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과목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범교과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적 접근과 범교과적인 접근의 양 측면에서 총체적 교육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의 시민교육은 주로 지식의 습득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상당히 한정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 교재만이 아니라 학생회나 학교행사 등 학생들이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써 학교운영의 장이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나

일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에 있어서 학생회나 학교행사 등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의 학생만이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참가 공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학령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회나 학교행사 등의 활동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적극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 학생회나 학교행사 같은 활동을 학교 내에서만 제한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시설 등과 연계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경제산업성, 2006).

종전의 공민교과나 시민교과와 별도로 2004년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학습시간은 범교과적 관점에서 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종합학습시간에 활용된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프로젝트형으로, 과제(테마)나 상황의 설정이 유연하고 나아가 과제나 상황 자체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테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지식·스킬·의식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등에 따라 학교 단독으로 주체가 되거나 학교 밖 조직과 연대하거나 또는 학교 밖 조직이 주체가 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경제산업성, 2006).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도덕 과목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알리미 자료를 통해 볼 때 2013년 서울 중학교의 도덕 수업시간은 평균 147.1시간으로 2010년의 167.8시간에 비해 3년 만에 20.7%나 줄었고 전체의 85.5%(306개교)는 올해 3학년에서 도덕 수업을 하지 않으며, 전체 수업시간인 3366시간의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동아일보, 2013.5.13).

다음으로 일본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속초등학교 시민교육을 통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은 교사에 대한 강조이다. 이 학교는 교사들 자신이 먼저 시민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일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의식이 바뀔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과 태도의 변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탐구와 노력이 가능해 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체와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자원에 대한 활용을 최대화 하고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 우수사례 분석

(1)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독자상담과 도서정보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CLP)은 민간의 기부에 의하여 세워진 공동도서관으로서 기본적인 미션과 비전은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의 기부목적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앤드류 카네기는 문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다 좋은 동료와 함께 문해 및 독서 능력과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중요한 운영 목표이다. 이런 점은 현재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미션과 비전에도 반영되어 있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미션은 ‘문해 문제와 학습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to engage our community in literacy and learning)’이고(CLP, 2013c), 비전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을 통해 지역민은 개인 성취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해 문제를 해결하고 연관성을 개발하게 된다.”(Through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the people of our region will develop the literacies and connections that support individual achievement and strengthen the power of community).

* 주: CLP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재정리한 자료.

즉,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은 문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진작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하여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은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자상담과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독서 안내를 위한 목적을 갖기도 하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일환으로 지역에 대한 서비스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CLP, 2013a).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청소년 대상의 독자상담과 도서정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위기의

청소년을 찾고 이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상황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상담 서비스와 독서를 통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LP, 2013a; 2013b). 지역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위한 활동으로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이연옥, 2010).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밖에서의 서비스로서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 사회참여, 사회변혁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와 참여를 목적으로 관련된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개인적인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기능을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독자상담과 도서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청소년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일차적인 목적은 위기 청소년의 발견과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해소에 목적이 있으나 점차 민주적 절차의 이해와 참여, 자원봉사 참여,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중요 정책이 구상되고 실천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요소들이 지역사회 공헌이나 참여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전개되고 있다(CLP, 2012a). 따라서 위기 청소년의 구제, 청소년의 지역 참여와 자원봉사, 지역주민과의 연계 등은 모두 청소년 도서상담 및 도서정보 제공의 중요한 목적으로서 서로 연계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나) 추진체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은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피츠버그 지역의 민간 자선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즉, 1890년 유명한 철강 산업의 CEO였던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서 피츠버그 시에 1백 만 달러가 기부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이 출발하였다. 따라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은 공동도서관이면서 개인의 기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와 피츠버그 시에 의하여 관할되는 공동도서관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 전체의 운영 체계는 '앨러게이니 지역 도서관 협회(Allegheny County Library

Association: ACLA)’의 구성기관으로서 이 도서관 협의의 결정사항이나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관 중에 하나로서 ACLA를 포함한다. 특히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관을 세 개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엘러게이니 지역 도서관 협회’가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다(CLP, 201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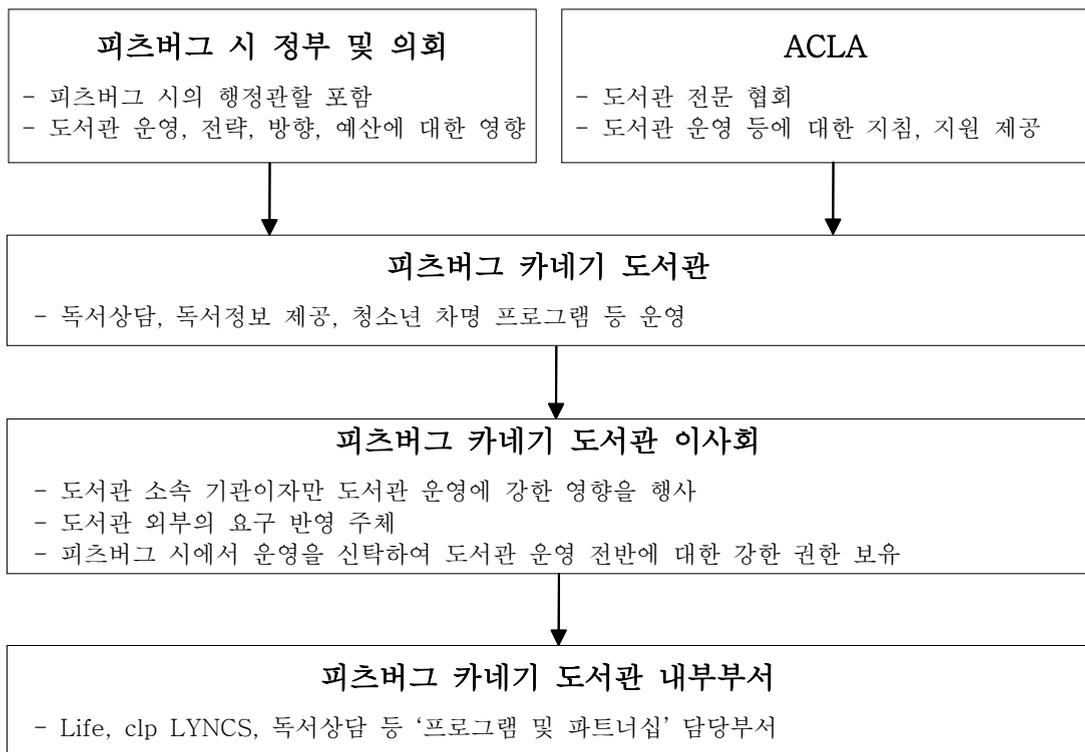
‘엘러게이니 지역 도서관 협회’는 일종의 도서관 업무의 방향과 전문적 기관의 연계를 위하여 유관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도서관의 운영은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 및 피츠버그 시와 연관된다. 특히 피츠버그 시는 앤드류 카네기가 직접 피츠버그 시에 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기부금을 내는 등 가장 기본적인 운영체계 요소로 포함된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관여 등은 그리 크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은 피츠버그 시의 관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영향주체는 ‘엘러게이니 지역 도서관 협회’와 피츠버그 시 정부 또는 의회라고 할 수 있다.

ACLA와 피츠버그 시 등이 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 인력 채용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위치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은 도서관 내부에 존재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은 내부 조직도 도서관의 운영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외부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내부 조직, 즉, 외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내부 조직은 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이사회가 이에 해당된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이사회는 중요한 역할은 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외부에서의 요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도서관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CLP, 2013e). 이사회는 4개의 종류로 구성되는데 생명 이사, 공공 이사, 임시 이사, 당연 이사로 구분된다. 생명 이사는 주민의 삶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생명 윤리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공공 이사는 공공 분야 또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임시와 당연 이사는 임기나 기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해지는 이사의 유형이다(CLP, 2013e).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이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문제와 연관되고 지역주민과 의미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CLP, 2013e). 그래서 이 이사회 구성원도 자세한 약력과 역할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사진의 구성에서도 도서관과 지역의 대화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인사 중에서 발탁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CLP, 2013e).

도서관 내부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팀들이 존재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상담 및 독서정보제공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 등은 도서관 내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직무로 분류되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CLP, 2013f).



* 출처: CLP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그림으로 재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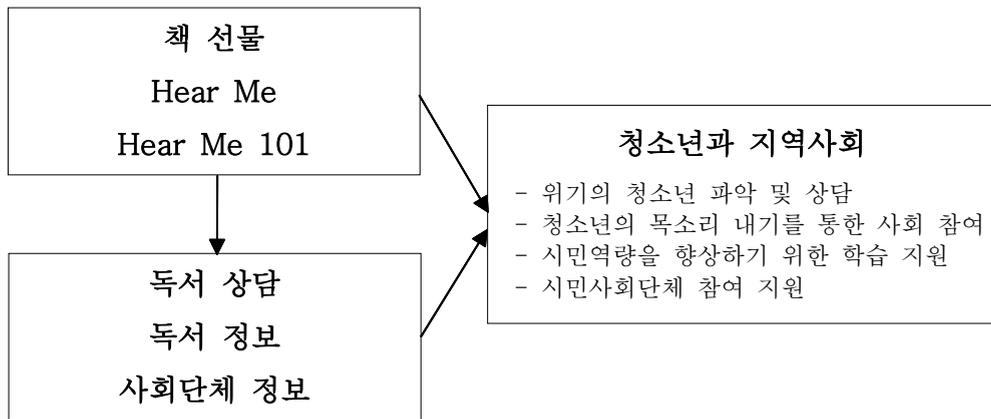
【그림 V-25】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추진체계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사업 전체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우수한 동료들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문해 및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

에서도 격차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비전과 미션에 적합화 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나 또는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이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접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과 부모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우에는 ‘책 선물’ 프로그램이 있다. 원래는 ‘책으로 시작하자’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극빈층을 위한 아동병동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있거나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책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Karen, 1998). 이 프로그램의 경우 가정에서 책읽기를 지도하기 어렵고 또 도서관 역시 이용하기 어려운 극빈층의 부모와의 만남을 갖기 위한 접점을 찾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소개,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 등으로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책 선물’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들에서 4권의 책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선물한다. 최근에는 도서관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3권의 책과 무료 책 쿠폰을 세트로 해서 선물하고 있다. 그리고 쿠폰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보다 다양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하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Karen, 1998).



* 출처: CLP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그림으로 재정리한 자료.

【그림 V-26】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Hear Me’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ear Me’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Hear Me, 2013a).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통하여 고민과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찾고 또 이들의 사회적 참여까지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Hear Me 101' 프로그램이라는 쓰기, 커뮤니케이션 기술, 미디어 문해 기술 등을 교육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스스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이다(Hear Me, 2013b). 이런 기회를 통하여 기본적인 문해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참여함으로써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책 선물'이나 'Hear Me' 프로그램은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학부모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위기의 청소년, 사회변화에 대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서비스와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치학(Politics), 자원봉사(Volunteering), 환경(Environment), 관계(relationship) 등을 주제로 관련된 서적과 사회적 활동을 위한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CLP, 2013b).

예를 들어 정치학의 경우 투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지역사회 단체, 세계적 규모의 사회단체, 사회적 네트워크 형태의 단체 등을 다수 소개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하고 상담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물론 정치학과 관련되어 해당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제공된다. 다만 이 책들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해 능력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CLP, 2013b).

라) 성과

도서관의 기능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것만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프로그램의 성과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20만 명의 방문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P, 2012b).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이를 상담과 안내의 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을 도와주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Hear Me' 프로그램과 직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Hear Me 101' 프로그램과도 연동하여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이 관심 있는 영역과 관련된 사회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지 책으로만 학생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단체와 청소년을 직접 연결하는 매개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관으로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이 자리매김하고 있다(CLP, 2006). 또한 지역의 문해 능력 역시 미국 전역에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도서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CLP, 2006).

마) 정책적 시사점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민주시민 역량 교육이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있으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서비스의 형태로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갖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첫째로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고 다큐멘터리와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한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방법이 된다. 민주시민역량의 내용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민주시민의 역할과 사회참여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 역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역량의 한 방법으로서 청소년의 의견을 자신들이 다양한 미디어로 만드는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직접 사회참여의 방법과 내용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상담과 필요한 지식에 대한 안내, 그리고 관련된 사회단체를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 직접 교육이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관련된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향점과 조직의 구조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된다.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에서는 이사회를 구성을 공공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진이라고 해서 분야의 전문가만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계층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반영할만한 조직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가) 배경 및 목적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생태 및 환경보존과 관련된 교육에서 유명한 도시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시이다. 행정구역상의 프라이부르크 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촌, 마을 등이 모두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의 지속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영위하는 지역들의 전체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라이부르크 시 전체의 환경정책과 교육뿐만 아니라 태양열 발전으로 유명한 3km 정도 떨어진 보봉(Vauban) 마을, 산촌마을공동체이자 생태환경교육의 장소인 시몬스발드(Simonswald) 등이 모두 포함된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녹색도시'라는 별칭을 사용한 최초의 도시가 될 정도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선진화된 시스템이 운영되는 도시이다. 그 시작은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시 근교에서 핵발전소의 건립에 대한 반대운동의 전개 및 성공적인 저지의 과정에서 프라이부르크가 학생, 반핵운동단체 등의 집결지로 활용된데 있다(FWTM, 2013). 그 이후 시 전체의 개발 정책

및 관련 환경교육의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녹색도시로서의 소개 홍보 책자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로까지 번안하여 프라이부르크 시 경영 및 홍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FWTM, 2013).

프라이부르크 시의 녹색도시로서의 모습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즉, 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기반으로 녹색시장, 환경산업, 환경연구, ② 미래지향적인 이동성을 강조하는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교통 계획, ③ 프라이부르크 시의 자본으로 자연을 강조하는 산림과 물 관리, ④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과 시민 참여, 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이를 위한 환경교육이 그것들이다(FWTM, 2013).

환경교육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녹색도시로서 발전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가져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을 위한 유엔 회의에서 제시된 아젠다(AGENDA) 21을 수용하고 이후 1996년 제시된 기본 강령을 녹색도시로서의 환경운영과 환경교육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 강령은 ‘사고는 범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에서부터’였다(FWTM, 2013). 이 강령이 의미하는 바는 환경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목적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이며, 방법은 실천과 경험 그리고 체험을 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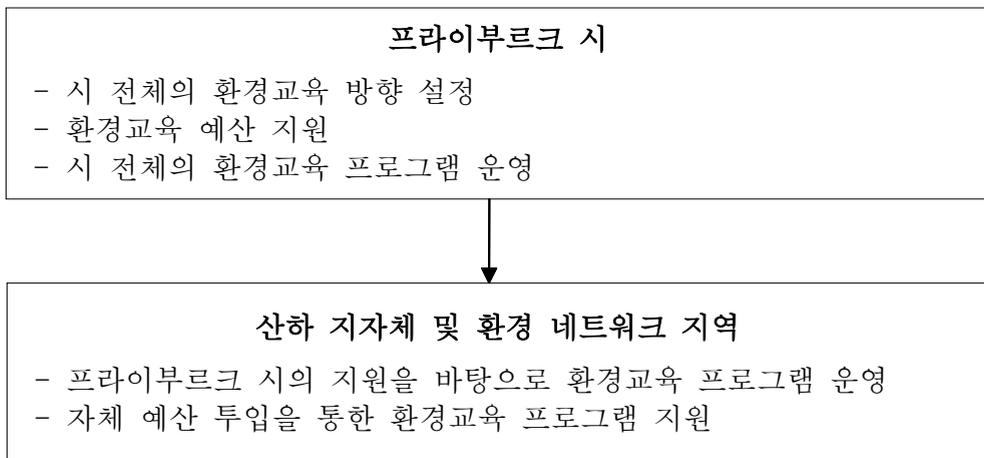
유엔의 강령을 수용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환경교육을 자연체험학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모토로 ‘성공적인 환경과 자연보호는 구체적, 감각적 경험과 만져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를 설정하였다(FWTM, 2013). 즉,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환경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환경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사례로서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을 들 수 있다.

나) 추진체제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체제는 시 전체에서의 환경교육의 체계와 하위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진체제로 구분된다. 즉,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기본적인 환경교육의 방향과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실제적인 실천과 모습은 프라이부르크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시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시 전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사업의 진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시의 산하 또는 유관하게 환경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지원을 받고 또 자체적인 예산을 통하여 각자의 상황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모빌(Eco-mobil)은 일종의 이동환경 교육차량으로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의 운영도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시의 도심부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보봉 마을의 경우에는 생태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환경교육장으로도 활용하는데 이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지원과 함께 보봉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보봉 마을 이외에도 산촌마을인 시몬드발트는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20Km 정도 떨어져있으면서도 시의 환경정책과 유관하게 연동되는 환경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 녹색도시 홈페이지, 2013; 환경보전협회, 2011).



* 출처: 프라이부르크 시 녹색도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

【그림 V-27】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다) 정책 및 사업 내용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의 사례로서 시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코모빌과 에코스테이션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운영 형태로서 보봉 생태주택단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에코모빌은 세계 최초의 환경교육을 위한 이동환경교육차량의 이름이다. 1992년부터 이동환경교육차량을 배치하여 공무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 국가에서도 이를 활용할 정도로 유명한 환경교육 아이템이 되었다(프라이부르크 시 녹색도시 홈페이지, 2013). 에코모빌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체험시설이나 장소가 있는 곳까지 학습자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의 제공과 차량에 환경기술 및 교육시설을 탑재하여 차량 자체가 환경교육의 아이템으로서 활용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 에코모빌 신청 홈페이지, 2013).

프라이부르크 에코모빌

- 환경교육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 제공 기능
- 차량 자체의 환경 교육 및 홍보 기능

* 출처: 프라이부르크 시 에코모빌 신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

【그림 V-28】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코모빌의 기능

환경교육장으로 이동하여 체험형태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코모빌은 학습자 이동교통편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상은 6세 이상의 모든 시민으로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습자이다. 편지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에코모빌을 타고 3시간 정도의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인원은 평균 12명에서 35명 정도가 되며,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전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숲, 물, 동식물, 지질학 등이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에코모빌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아이템은 약 111개 정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비버, 두꺼비, 도마뱀, 장어, 올빼미, 사슴벌레 등 동물과 숲 등이 주요 학습 아이템이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에코모빌을 타고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이후 숲이나 관련된 체험학습장에서 놀이와 체험의 방법으로

진행된다(프라이부르크 시 에코모빌 신청 홈페이지, 2013).

에코모빌은 환경교육장으로의 이동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차량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자체만으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약 7톤 정도의 대형 트럭을 개조하여 내외부에 환경교육을 위한 디자인과 설비를 갖추었다. 외부의 경우 자연습지, 녹지, 숲, 물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녹색의 디자인이 차량 외부 모두에 적용되었다.

또한 에코모빌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되 최대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집광판을 설치하여 차량운행을 위한 전기를 발전하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과 비디오, 컴퓨터 등의 시설과 책상 및 의자가 배치되었다. 또한 교구체로서 현미경과 쌍안경, 동물 탐지기, 수질 분석 도구, 관련 서적 등이 비치되었다.



* 출처: 프라이부르크 시 에코모빌 신청 홈페이지(2013).

【그림 V-29】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코모빌의 디자인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코스테이션은 에코모빌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환경교육장이다. 1년에 15,000명의 방문객이 600개 정도의 교육이벤트를 통하여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 녹색도시 홈페이지, 2013). 에코스테이션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서쪽 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00 평방미터의 규모에 100종류 이상의 약용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동식물이 있는 자연환경체험교육장이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프라이부르크 에코스테이션 홈페이지, 2013).

에코모빌과 유사하게 에코스테이션 역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에코스테이션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시설을 통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천연염료를 추출하여 염료로 그림을 그리는 천연염료 그림그리기 과정, 에코스테이션 안의 수질을 측정하는 수질 측정 과정, 천문대의 망원경을 활용하여 별자리를 확인하는 별자리 과정 등이 운영된다(프라이부르크 에코스테이션 홈페이지, 2013). 에코스테이션에서 특히 유명한 과정은 초록색 교실이다.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3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초록색 교실에서는 수질오염, 에너지, 온난화, 자원절약, 다양한 생물종, 사회와 자연동식물, 이민자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에코스테이션 홈페이지, 2013).

에코스테이션의 특징은 시설에 녹색도시로서의 환경보호 시설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시설에 들어서면서 호수공원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부레를 다리 아래에 부착하여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지어졌다. 그 외에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거나, 지붕에 흙을 덮고 진디를 키워서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공법을 적용한 생태건축물도 있다. 이 건축물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프라이부르크 에코스테이션 홈페이지, 2013).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교육은 체험과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시설 자체가 환경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점 이외에도 프라이부르크 시에 소속된 지자체별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체험학습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보봉 마을은 태양열 발전으로 유명하다. 1945년 완공된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집이 회전하면서 태양광을 받아서 발전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헬리오트롭은 태양광발전을 통하여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보봉 생태주거단지도 있는데 이곳은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라고 하여 에너지를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환경보전협회, 2011). 이런 주택 건축의 기본적인 방향과 함께 보봉 마을에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경전차(트램) 운영, 모래와 통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가지치기한 나무를 태워서 운영하는 화력발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환경보전협회, 2011). 이런 보봉 마을의 시설과 체계는 이곳을 방문하여 실제 녹색도시의 시스템을 체험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의 방식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보봉 단지에서는 단지에 위치한 환경시설, 예를 들어 가지치기한 나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태양광주택, 자전거 이동 등의 현장을 청소년들이 방문·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의 시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외부 경험교육과정으로 보봉 단지의 시설을 탐방하고 시설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기술의 적용을 체험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여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라) 성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환경수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녹색도시로서 환경과 생태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도시로서 유명하다. 특히 가장 훌륭한 환경교육의 방법은 체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환경교육이 이런 방향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프라이부르크의 다양한 환경교육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에코스테이션의 경우에만도 1년에 15,000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에 참여하거나 방문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인구가 22만 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모든 시민이 에코스테이션 환경교육에 참여한 숫자가 된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성과도 존재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힘으로 시민의 환경보호 및 시설운영, 관련 정책의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프라이부르크 시의 녹색도시 정책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FWTM, 2013). 이런 성공의 요인에는 핵시설 설립 추진 반대 운동이 성공하면서 나타난 긍정의 효과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단합된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그 이후 환경과 녹색도시로서 프라이부르크를 변화시키는데 통일된 인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체험식의 교육방식도 환경교육의 성과와 이후 시민참여까지 이어지는 성공요인이 된다. 이론적인 학습도 실시하지만 이런 이론적 학습은 반드시 체험학습과 연결된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보기 어렵다. 학교 밖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녹색도시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활발하다.

마) 정책적 시사점

프라이부르크 시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로서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 시민참여 유도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시민의식과 역량의 구성요소로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고, 프라이부르크 시의 사례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생활 자체가 환경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나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도시의 시설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이런 시설과 시스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과 시스템에 청소년이 찾아가서 체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시민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나 시스템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것 없이, 쓰레기 분리수거, 태양광 발전 주택, 자연친화 교구재를 활용한 놀이터, 에코 모빌과 같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둘째로 환경교육 전문시설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에코모빌이나 에코스테이션과 같이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환경시설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 지역의 자연에 대하여 학습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학교 안에서의 환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로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형식의 청소년 참여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을 녹색도시의 아이টে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환경을 통한 사회참여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 전문기관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작게나마 시작하는 경우가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에코모빌이나 에코스테이션의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수질 점검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여 주변의 수질 오염 수준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 안을 간단하게나마 제출하기도 한다. 때로는 실제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관련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시에서 공모하거나 프로젝트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이 활용될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상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내용이 정치교육이건 환경교육이건 각각에 대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기구의 운영을 통하여 학교나 지역사회단체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 수준에서의 통일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향을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등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 역시 개별 실행 기관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담기구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우수 사례로 제시된 학교나 미국의 모의선거 프로그램 등을 보면, 프로그램의 준비나 진행, 주요의사결정 등에서 학교의 학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토의와 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하여 학생들이 책임지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무형식학습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민주시민역량을 학교생활을 통하여 강화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이런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위원회 등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장 등의 주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성인들이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지원하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교사나 학부모의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기회로서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단지 위원회의 일원으로 지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교사나 학부모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참여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셋째,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체험과 경험 그리고 생활 속의 소재로 구성된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수한 사례들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이나 이론적 내용만 다루는 것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의 삶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거리를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 프로젝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청소년이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는 민주시민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거리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시간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청소년이 이후의 지역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넷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실행 기관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려고 하기 보다는 지역의 상황, 청소년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 중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교육, 환경생태, 학생 자치, 준법성 등 민주시민역량의 영역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여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으나 지역의 상황이나 여건을 토대로 체험이나 경험을 하기 위한 상황이 모든 민주시민역량을 수용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민주시민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둬으로써 보다 시도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체험과 경험을 누적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실천하는 등의 과정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하나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초점을 둔 하나만이 강화되는 것은 또 아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봉사, 주도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는 찾는 주도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등 민주시민역량의 다른 측면이 함께 발달한다는 점은 사례 분석의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그것만이 발달하기 보다는 경험과 체험, 주도적 노력, 지역과의 연계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민주시민역량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우수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재능기부 형태의 지역 인적 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활용하여 체험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이 그것들이다. 이런 활동은 지역과의 연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지역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좀 더 발전하면 지역민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가능해진다. 즉, 청소년이 참여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프로그램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은 지역의 다른 기관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적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의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제 6 장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야별 문제점
3. 분야별 정책 과제
4. 정책적 시사점

제 6 장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제를 방향과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의견 조사 문항은 민주시민역량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과 정부, 학교, 지역사회 혹은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 그리고 기타 정책 과제에 대하여 서술형의 응답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 특성 관련 문항 3개, 교육 분야 문제점 관련 문항 1개, 정부, 학교, 지역사회, 기타의 정책 과제 관련 문항 4개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의 형태는 응답자 특성 관련 문항의 경우 선다형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문제점이나 정책 과제에 대한 문항은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의견조사 설문지 참조).

의견조사 대상자는 학계, 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로 구분하여,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연구 수행 경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험, 분야 관계전문가의 추천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총 82명의 의견조사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조사 실시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도를 문의하여 73명을 의견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에게 이메일 및 직접 조사의 방식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51명이 의견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한 51명의 응답자 특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VI-1>과 같다. 학계 9명, 학교 교사 20명,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22명으로 대부분이 현장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장근무자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8명, 여자가 3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을 보면, 30대, 40대, 50대 이상이 비슷한 응답자수를 보였고, 20대는 7명으로 가장 적었다. 근무기관의 유형을 보면, 대학이 12명, 초중등학교가 11명, 기타가 11명의 순으로 많았다.

표 VI-1 정보분야 의견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구분		학계	학교	평생교육기관	합계(%)
성별	남	9	7	2	18(35.3)
	여	0	13	20	33(64.7)
	합계	9	20	22	51(100.0)
연령	20대	0	5	2	7(13.7)
	30대	1	6	8	15(29.4)
	40대	3	5	8	16(31.4)
	50대 이상	5	4	4	13(25.5)
	합계	9	20	22	51(100.0)
근무기관	초중등학교	0	11	0	11(21.6)
	대학	3	9	0	12(23.5)
	연구기관	4	0	4	8(15.7)
	평생교육기관	0	0	9	9(17.6)
	기타	2	0	9	11(21.6)
	합계	9(17.6)	20(39.2)	22(43.2)	51(100.0)

조사를 통하여 수합된 응답 자료는 1차로 전사과정을 거쳐서 문항별로 정리하였고, 다시 문항별 전사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 유의미한 내용이 담긴 의견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I-2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분류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전문가 의견	근본적인 문제점	.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문제점	학교의 비민주적 환경 교육방법 교육내용
	정부의 정책과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법과 제도의 보완 교사 연수
	학교의 정책과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문화 변화 학교와 외부 기관의 연계
	지역사회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의 정책과제	지역사회기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자원의 학교 활용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내용분석의 대분류 범주는 문제점과 정책과제였고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문제점의 2개 중분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정부의 정책과제, 학교의 정책과제, 지역사회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의 정책과제의 3개 중분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소분류의 범주를 설정하여 수집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2. 분야별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점

의견조사 응답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교육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었다. 한국의 교육제도 측면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어나는 대목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 또는 제도가 빈번하게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과 제도가 암기식이거나 시험위주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고 이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기 위한 풍토, 사회적 분위기, 교육 제도적 상황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암기식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입시와 연관이 많지 않은 분야의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또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듯함.”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이고,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입시위주교육을 그대로 두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해 나가기란 어렵다고 본다.”

-학계 전문가 의견 中-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는 문제점에 대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복잡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면서도 또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민주시민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반에 걸친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간에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입시위주의 교육이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장애물로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입시경쟁, 서열주의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교육 현실이 민주적 시민의 성장이 기본이 되어야 할 상호 승인과 협력 및 연대를 저해하고 있음.”

-학계 전문가 의견 中-

“지식습득 중심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한함. 특히, 대학입시중심의 교육은 지식지상주의 가치관을 형성케 함. 지식습득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대학입시중심 교육 역시 지향되어야 함.”

“학생들의 입시 위주 및 내신 성적 중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향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사회 속에서 어울려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옆의 친구를 이기지 못 하면 자신의 내신 성적은 낮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경쟁이므로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향상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

-교사 의견 中-

입시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학생들의 상호 협력과 이해, 호혜적 태도와 배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우관계 및 학업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경쟁이고 옆의 학우를 이겨야만 하는 순위의 싸움은 학업이나 그 외의 영역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문제점이 된다. 특히 민주시민역량은 교과서를 통하여 배우는 것과 함께 교과서 외적으로 체험과 삶의 공유를 통하여 획득되어 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박은중,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에 경쟁과 시험 준비가 모두인 것처럼 만들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관계를 통한 민주시민역량의 강화, 사람의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학교 교사는 지식지상주의의 가치관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고 이런 지식위주의 교육 또는 지식습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향과는 역행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운영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순위싸움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의 삶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런 의견 역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교과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입시위주 교육이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든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원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과 함께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주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괄적인 내용이지는 하지만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 분야에서 전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매우 장기적으로 뚜렷한 정책 목표로 포함되어 실행되어야 하는 교육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도 장기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시 주객은 전도되어 단편적으로만 교육 처방을 하는 수준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다뤄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신미식, 2011).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권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이고 비긴급성의 교육원리를 도외시한 채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가중함.”

-대학교 관계자 의견 中-

교육 정책의 일부로서 교과서에 대한 편중과 체험 중심의 방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입시위주의 교육적 풍토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교과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편중되게 하고 또 교과서 중심의 이론만을 강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적 풍토로 1)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편중 현상: 특정 교과 중심(사회 및 도덕)의 교육 기회 부여로 인한 교육 충실도 저하, 2) (교과서)이론 중심의 교육적 한계 : 실천(현장) 중심의 교수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입시위주의 교육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일부 교과 및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생시킨다는 관점의 의견이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만 역시 일부 교과의 편중으로 다른 교과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이 어려워지는 것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주로 다루는 교과가 형식적 또는 제한적으로 다루지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하여 사회과 같은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국어, 영어, 수학마저도 교과서의 내용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현실적으로 연결하거나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즉, 국어 교과서의 교육내용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이나 민주시민역량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과서적으로만 이해하거나 학생들의 체험을 제공하지 못한 채로 교육과정이 운영됨으로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은 그것 자체만으로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어렵게 하는 학교문화와 풍토를 만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학업을 위한 동료와의 관계에서 호혜성과 상호 협력을 배울 수 없도록 하고,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동시에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과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진다면, 학생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과서 속의 이론을 아는 것에만 초점을 두도록 하는 문제들 역시 입시위주 교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문제점

(1) 학교의 비민주적 환경

전반적인 교육 정책이나 제도에서의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함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이런 의견은 근원적인 문제점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것들이었다. 이 중에는 학교의 운영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과 교육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앞서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일부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의식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공동체 의식의 결여, 공동 작업이나 공동 참여 기회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시민의식은 더 취약해진 것이 아닐까?”

-학계 전문가 의견 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기회가 필수적이다.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의 학생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교육적 조치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공동체 의식 또는 공동 의식이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조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교육과정의 진행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삶에 협동적 노력, 함께 만들어 가는 지식, 공동 작업의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무형식 학습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교칙을 개정하거나 학교 내 문제 해결 등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필요성 혹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인터뷰 中-

유사한 관점에서 학생 자치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의 주요 주체들이고 학생도 이런 주체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 학생 자치가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임원 선출 등의 민주적 과정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학칙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에도 전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학생의 삶과 학생 자치와 관련된 의견과 함께 교사에 대한 의견도 다수 수집되었다. 교사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역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시스템이 전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구성원들 간의 의견충돌과 갈등을 당연히 여기고 이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교사들의 민주시민역량이 증진됨. 그러나 현재 학교 환경에서 교사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교실에서도 이와 같은 상명하달식 전달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따라서 학생들이 이에 저항할 때 대응하는 방법도 체득하기 어렵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학교장 및 교감의 선출 방식부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

-학계 전문가 의견 中-

학교의 보수적이고 상명하달식의 문화는 교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교사도 학교 운영의 주체이자 교육실행의 주체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이나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권리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구조와 과정, 상명하달식의 소통 방식과 복종을 강요하는 문화 등은 교사의 교실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민주적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 교사의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이 낮아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의 가르침은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교사 스스로가 시민의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의식 자체가 부족한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교사 의견 中-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점을 교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성과도 나타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는 교사의 민주시민역량이나 인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실천과 학생들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부족하게 하는 학교나 교육의 상황보다는 교사의 의식과 그로 인한 교육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학교나 교육의 비민주적 환경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경우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과 교육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교육방법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는 학교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 중에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학급경영과 같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키워질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이 축소되거나 실제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현 2009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통합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경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여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방향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다양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이 수업시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동아리 활동, 정보화 교육, 독도 교육, 보건교육, 자유탐구, 학교행사로 활용 등의 문제로 이전 7차 교육과정에서 매주 1시간 이상씩 확보할 수 있던 학급회의 시간을 1달에 한번 혹은 1년에 몇 차례 밖에 할 수 없어서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났다.”

-교사 의견 中-

위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학급회의는 학급단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나 활동에 의해서 밀려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해마다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교육당국의 정책이나 정책 초점에 의하여 이를 한정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급회의는 1주일에 1회는커녕 1개월에 1회도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물론 이런 의견은 학급회의의 관점에서만 본 것일 수 있다. 독도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제시한 학교 교사의 의견과 동일하게 학급회의는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 내 활동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이 학교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학급 수준에서 민주적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학습회의는 무형식학습의 방법으로 민주시민역량을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학급회의의 목적과 형식 자체가 형식교육의 방법으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학교정규교육에서의 의미가 큰 과정이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하여 토론이나 의견발표 등의 수업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이나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시민교육

이 학교에서 각과 교육과정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방법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강영혜 외, 2011). 따라서 토론이나 의견 발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 등은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방법이 된다.

“토론이나 의견발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교사에 의한 일방적 지식전달 방식의 수업방식. 교사의 수준이 토론사회를 볼 수 있을 만큼 올라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도 꾸준한 연수의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쌍방향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토론 등의 교육방법이 다양한 교과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학교 교사의 의견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법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교과서의 이론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천과 행동을 변화하기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체험과 실천을 위하여 사례분석, 역할연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실제 상황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교과서를 통한 이론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학습되어 왔지만 실천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실천적 경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 같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사례 자료를 분석하거나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 근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교사 의견 中-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학급회의와 같은 학교 자체에서의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사례분석, 시뮬레이션,

역할연기와 같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연수 등을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민주시민역량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되어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시민의식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부재.”

-학계 전문가 의견 中-

“학생의 다양한 체험을 교과관련 체험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생의 교과관련 중심체
험활동을 지양해야함.”

“학교 교과 과목에 민주시민의식, 역량향상에 관련된 교과과목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학교
교과서나 학교 수업시간에 언급해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교사 의견 中-

마지막에 제시된 의견은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 학교 교과서에서의 변화나 교육과정 시수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에 너무 얽매이기 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형태와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과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과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되어 보다 다양한 교과에서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체계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시민역량 강화가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각 급 학교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요 민주시민역량이 학년별로 구성되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서 학교교육을 거치면서 민주시민역량이 성숙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못함.”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유형별 지도 내용이 불균형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교사 의견 中-

3. 분야별 정책 과제

1) 정부

(1)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로 학교 및 기타 민주시민역량 교육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중에서 우선 학교의 교과목에서 민주시민의식이 보다 많은 수업시간이 할애되고 또 독립된 교과로서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사회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중요하다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하나의 독립 교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정규시간을 할애하는 형태의 제안이다.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부가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함.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교육프로그램(학교커리큘럼)을 설치·운영함.”

“학업시수조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함.”

-학계 전문가 의견 中-

“교과목으로 편성할 것(ex: 시민교육, 민주시민사회등) 그리고 교과목을 실행할 수 있는 일상시스템을 고민할 것(ex: 학급 및 학교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의사 결정 구조, 운영방식 등 세부적으로 적절하게 내용을 만들고 시행하게 함).”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되어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이런 교육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자율학기제를 진로 탐색의 수준에서 보다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공동체 이해,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을 통한 민주시민역량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형성될 수 있다.

“자율학기제”를 단순한 진로 탐색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 체험 활동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학계 전문가 의견 中-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각 교과별 특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주당 1시간 이상씩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정규 교과 내용 및 주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 설계 시 모든 교과들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정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각 교과서 선택활동시간에 무엇을 공부할 지에 관해 선생님과 학생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도 교과서에 예시안 한 페이지만을 넣어두어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고, 사회 및 도덕 교과서 내용을 학급과 관련된 주제로 바꾸어 토론과 토의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면 부족한 학습어린이회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사 의견 中-

학교 교사 중에는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급회의의 운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정교과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주시민역량을 위한 토론의 주제와 내용을 편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규교과에서의 학급회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약간의 추가나 변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정규교과의 영역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주제를 제안하는 의견도 상당수 수집되었다. 의견조사 대상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재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이해를 위한 탐방수업, 경제이해를 위한 국가와 세계경제의 연관성 체험 프로그램, 다문화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정치교육을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 전국시민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가정과 지역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 전국단체와 연계한 전국 탐방 수업: 각 지역의 특색, 전통, 사고방식 등 비교
- ② 경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 경제단체와 연계한 국가 및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체험
- ③ 다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 국제단체기구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연계한 다양한 민족과 국가체험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함양을 위한 연수
- ④ 정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 시민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정당 및 정치체험
 - 중고교생들 대상 공공기관(국회,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및 각종 국가 및 사회행사(선거 참관인활동, 고교생의 경우 집계 작업 참여 등) 참여 기회 부여
- ⑤ 시민의식을 위한 프로그램
 - 국제 종교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종교 체험
 -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 행동)'과 유사한 프로그램
- ⑥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 교육부 시민교육 육성회 구성, 교육 연구 및 평가,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시민교육 홈페이지 및 SNS 지원활동
 -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 운영
 - 인성·민주시민의식·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극 및 뮤지컬 보급

(2) 법과 제도의 보완

다음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로 법과 제도의 영역에 대한 의견이었다. 일부 위의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사업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전담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른바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제도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
- ②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민주시민교육원) 설립
- ③ 범국가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④ 중앙·지방정부, 학술·연구기관, 다양한 민간단체 등이 공동참여(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중)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이런 내용은 현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관련된 법적 지위나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의견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각 부처나 기관별로 필요한 규정이나 행정 사항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만, 통일된 방향과 구성요소를 갖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법이나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일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보다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 등을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학교나 그 외의 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또 질 관리를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확대한다면 민주시민역량 교육이라기보다는 민주시민역량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에 기초한 전담기구의 운영도 생각할 수 있다.

(3) 교원 연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한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 일관되게 지적되었다. 즉, 교원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민주시민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수프로그램에 민주시민역량 교육역량강화를 주요 주제로 포함하고,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연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민주시민의식 교육전문가의 육성과 파견은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높은 강사를 활용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수를 강화함.”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학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의견 中-

“철학·역사교육 강화할 수 있는 의무교육 이수시간 지정 및 이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교육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서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민주시민의식 교육전문가 파견의 경우 철학과 역사 교육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민주시민의식의 영역이 다양하고 이를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교과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에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각 교과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으로 하나의 교과나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어떤 형태이건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섭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기관들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 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이런 경우 민주시민의식 교육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

외부의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기존에 교과별로

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시민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교사 승진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연수나 일정연수 프로그램에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시민역량 교육 역량에 대한 연구 및 교육내용 개발을 통하여 30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학교

학교 수준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집되었다.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었고 일부는 학교 외부에 있는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1)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영역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하여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었다. 관련된 의견은 전체적인 방향에서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램 주제까지 다양하였다. 기본적으로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대상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를 포함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시민의식 관련 교과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학교 자체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학부모 교육.”

-학계 전문가 의견 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이런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포함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나 학부모는 자기 자신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들은 학교 단위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연수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의견을 제시한 관계전문가는 학교 단위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상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연수기관에서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동아리나 클럽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동아리 등의 활동과 함께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제시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가정 체험 및 종교 체험,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주요 요소로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교 체험의 경우 종교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성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종교 이해 등의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2) 학교 문화 변화

학교 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졌다. 이런 의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방안 중에 하나는 학생 자치와 의사결정 과정 참여였다. 학교 내에서 학생회와 같은 학생 자치의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자치의 운영 방식도 민주적 토론이나 참여 확대의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회와 같은 학생조직이 공정한 선거와 합리적인 규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학교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의식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의견 中-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학급운영의 민주화

-학계 전문 의견 中-

학생 자치는 학교 전체에서도 가능하지만 단위 학급에서도 가능하다. 단위 학급에서도 교사가 주도하여 학급 운영을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급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발언권 보장, 학생의 참여 확대,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 등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무형식학습의 방법으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 자치와 관련하여 토론하는 주제와 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정답이 보이는 토론 주제 보다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급회의 및 전교어린이회의에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 및 체험 학습 장소 선정, 아침 자율 학습 과목 선택, 급식 메뉴 선택 등과 같이 학생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전교학생회를 공개된 장소(예: 강당)에서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한 실행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의견 中-

학생 자치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토론이 실제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들이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참여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 자치의 토론은 보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이 토론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론 주제와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토론 참여 확대, 결정된 사항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수행 강화, 결정된 사항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동의와 책임감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생, 교장, 교감 등의 토론의 장을 확대하여 학교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학생 참여 위원회를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에서 확대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장의 경우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의 중요한 원칙들이 준수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장은 지원직으로서 행정직원들을 통해 교사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함. 덧붙여 교장은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을 보호하고 원칙을 지키는 재판관의 역할도 담당해야함.”

-교사 의견 中-

학교장도 학교의 구성원이며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자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옹호하고 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거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교장의 모습에서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학교와 외부 기관의 연계

학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밖에 있는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 등과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은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거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우가 있다.

“학교 바깥의 민주시민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단체,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시민 단체, 경제단체, 관공서, 언론사 등과 연계한 지역의 다양한 현안 관련 체험.”

-학계 전문가 의견 中-

학교 자체적으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연계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지역사회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참관한다든지, 치안 분야와의 연계를 통하여 범질서를 지키고 옹호하는 체험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참여와 연계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이버 형태나 간접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다.

3) 지역사회 및 학교 외 교육기관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및 학교 외 교육기관에 대한 의견 중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이를 위한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이며,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원은 지역사회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다만 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규모 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기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지역자원의 학교 활용,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구분되었다.

(1) 지역사회기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견이 지역사회기관에서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의 우수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함께 제시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지역 및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는, 학교등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경력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교사들(육성회소속)을 학교에 파견, 지자체, 정당,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에게 시민교육 기회 제공을 의무화.”

“지역신문과 연계하거나 혹은 청소년회관 등과 연계해 지역별 학생 신문 발행(청소년놀이문화, 참여공간, 유해논란 등)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의식과 시민의식제고.”

-학계 전문가 의견 中-

기본적으로 학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손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 기관들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지자체, 정당,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은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의무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센터 등으로 지정하면서 의무화를 중요한 선정지표로 적용하여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의견으로 학생 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제시되었다. 지역의 언론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신문을 만드는 법은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생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신문뿐만 아니라 뉴스 동영상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보도하는 등의 불공정에 대한 감시와 보도 등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시민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마을 학교를 만들어서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을로서 변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의견도 있었다. 프로그램 단위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사업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학교를 통하여 보다 거부감 없이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학교와 같은 직업체험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함.”

-학계 전문가 의견 中-

“학교 외 기관의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등의 실시로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필요.”

-교사 의견 中-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평생교육 분야의 발달강좌와 같이 학교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법은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한 농산어촌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농산어촌 등에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단체 등의 수가 적으며

또한 그 기능 역시 편중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학교가 받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를 찾아가는 형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학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학교와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다. 지역에 있는 노인회나 동문회 등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단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성인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역 구성원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청소년을 직접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있으나 다른 한편, 지역의 성인들이 청소년을 지도하고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노인회, 동문회를 통해서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 교사 의견 中-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는 직접적 교육을 진행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등 시청, 지역의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2) 지역자원의 학교 활용

지역에서는 학교보다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교육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회관, 지역사회교육기관이 이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학교와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회관 등을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센터로 재편해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를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확대하여 학교 방과 후 수업에 활용.”

-학계 전문가 의견 中-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퇴직공무원,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시민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교사 의견 中-

기관의 직접적인 활용도 가능하지만,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사회 교육기관에는 이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강사들이 민주시민역량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에 가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 역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강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학습형 일자리로서 활동이 가능하고 또 재능기부와 같은 형태로도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기관, 강사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학교에 제공되어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학교가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역사회단체의 프로그램이 강사 등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와 학교의 교류, 지역사회단체의 정보 사이버 탑재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산발적이고 분화된 형태로 시민성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을 모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체 홍보와 교육 정보에 대한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그래서 최근에 지역마다 구축 중인 다모아 정보시스템에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기관의 정보가 탑재되어 학교 등에서 손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네트워크 강화 행사 등을 갖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이다.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단체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지자체 등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유관기관과 학교 등이 참여하는 민주시민역량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는 지자체 등의 행정 부분의 참여, 지역사회단체의 참여, 학교의 참여 등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지역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학교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지역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등.”

“지역사회 인사, 기관,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 설정.”

-학교 외 교육기관 종사자 의견 中-

민주시민역량 교육 협의체는 일종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계획이나 지원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역에 만들어진 협의체에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추가하여 기존의 협의체의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협의체에는 평생교육 협의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사항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활성화 계획 또는 민주시민역량 강화 계획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지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협의체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교육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부모,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민주시민역량 교육 분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문제점,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장은 전체가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의견을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민주시민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이 확대 또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학교 문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은 불필요하거나 교과서로만 배워도 되는 영역이 되었다.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체험 형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정규 교과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과를 따로 만들거나 현재 있는 교육과정에 보다 확대하여 담아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과 등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확대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 내용을 단지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에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즉, 실제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학생들이 프로젝트 형태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 교육과정으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시수체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의견 중에는 일주일이 1시간 정도의 민주시민역량 교육도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수가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는 등의 수시 운영에서의 문제점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 시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관련 정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체험이나 경험이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육방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 학교 행정가 연수 등을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영역에서 보완·실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기관에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기관이 기관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방문, 관람, 체험 등을 가능하도록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나 의회 활동에 대하여 지역청소년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와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민주시민역량이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삶에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문화나 학생 자치에 대한 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생 자치, 동아리 활동, 의사결정과정 참여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삶을 토하여 민주적 절차, 준법정신, 호혜성 등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역량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관련 기관에서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시민역량의 구체화,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실행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만약 독립적인 설치가 쉽지 않다면, 기존의 관련 기구(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중복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토대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범부처적으로 가칭 ‘국가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를 기존의 국가위원회 수준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쉽지 않다면 가칭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실제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가칭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관련 단체, 학교, 학부모,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조성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의제 발굴, 행정지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민주시민역량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나 관련 기관의 교육을 위해 파견하는 방안, 지역 민주시민역량 교육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우수 사례의 확산 등이

가칭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다.

넷째,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활동이 학점 등으로 인정되는 것을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형태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찾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과 관련된 이수학점을 학교 밖에서의 활동과 연계하여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기관과 학교의 연계 강화, 민주시민 체험 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추동력 확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활동 속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경우, 민주시민역량이 청소년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지역주민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제 7 장

민주시민역량 함양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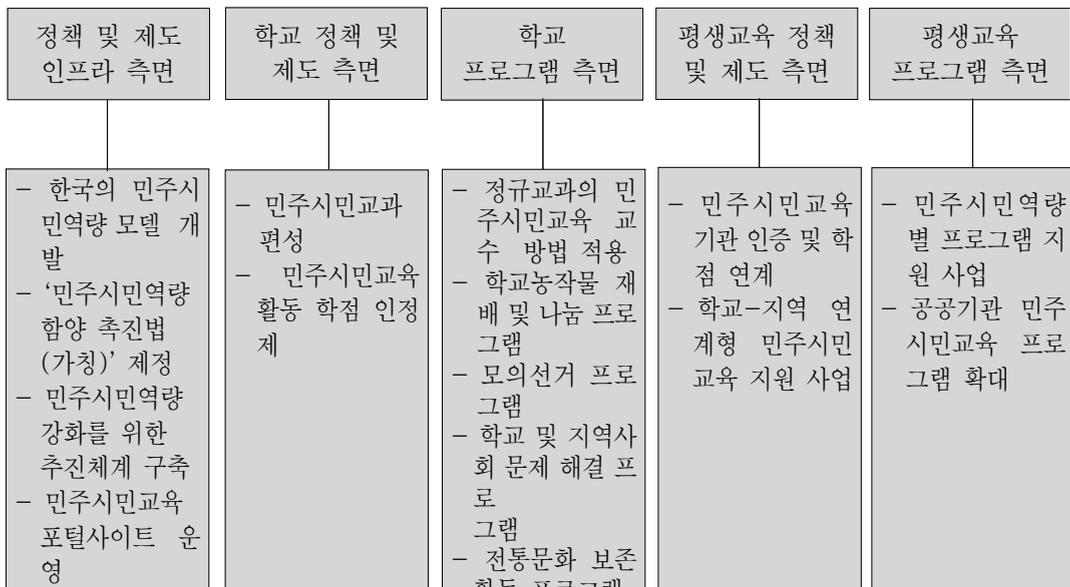
목 차

1.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2.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3. 학교 프로그램 측면
4.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

제 7 장

민주시민역량 함양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및 과제

연구진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 방안 및 과제는 5개의 영역(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학교 프로그램 측면,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체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방안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교와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 다시 정책 및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영역이 5개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15개의 정책 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VII-1】 정책 방안 및 과제

1.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은 학교나 평생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정책 방안은 국가 수준의 민주시민역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의 결과, 국가 수준에서 민주시민역량을 통일된 방향으로 강화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교나 공공기관의 민주시민역량 관련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방향 또는 방향이 **없이** 증후적으로 개발되어 진행되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제시되는 민주시민역량 모델이나 국가 단위에서 제시되는 모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측정과 분석,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ICCS에서 사용하는 민주시민역량 모델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원리와 시스템, 시민 참여, 시민정체성의 영역에 해당되는 역량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런 역량 모델은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기보다는 국제적 조사와 분석을 위한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된 역량이라는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는 역량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추진체계 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가 수준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크게 법적 기반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체제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체제 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기반은 민주시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모델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역량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실행,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관련 사업의 추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마련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법적 기반이 형성되면,

그 법을 기초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또는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른바, ‘국가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과 국가 수준의 추진체계 구축의 2가지 사항은 정부, 국회, 관련 기관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과제 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

① 목적

- 한국 상황에 부합되는 민주시민역량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 행동지표 등을 포함하는 역량 모델 개발

② 과제 내용

- 연구기관에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으로 발주하여 한국 상황에 부합되는 민주시민역량의 기초 모델 개발
- 민주시민역량에 포함될 수 있는 하위 구성요소를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실증적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역량 모델 개발
- 역량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관련 우수 사례 발굴, 역량별 행동 지표 개발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도록 연구 용역 구성
-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을 하고 난 후 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토론과 검증 과정 반영
- 본 연구에서 연구된 바를 반영하여 한국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민주시민역량을 강점 영역(민주주의 절차 및 권리, 연줄주의에 대한 반대 의식, 사회적 도덕성, 개방성, 탐구성, 진실 추구성 등)으로 구분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주시민역량 모델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또한 낮은 민주시민역량으로 분류된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상위 연령층과의 소통은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역량으로 포함하는 것도 필요함

③ 추진 방식

- 교육부의 연구 용역 발주 형태로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가칭) 연구 용역’을 발주
- 용역 발주라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
-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이 단기 과제로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 연구과제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년 연구 용역으로 발주

④ 기대 효과

-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영역 및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및 향후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제공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방향 제시

정책 과제 2: ‘민주시민역량 함양 촉진법(가칭)’ 제정

① 목적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과제 내용

- 교육부 등 정부기관의 법안 제출 형태로 ‘민주시민역량 함양 촉진법(가칭)’을 국회에 제출 및 제정

③ 추진 방식

- ‘민주시민역량 함양 촉진법(가칭)’ 마련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법안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 1차적으로 마련된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원,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법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회 제출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의 법안 제출 형태로 국회에 상정

④ 기대 효과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제공
-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정책 과제 3: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목적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계 형성
- 민주시민역량 강화관련 사업 추진체계 마련
- 민주시민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 조성

② 과제 내용

- 중앙정부에 ‘국가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칭)’,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 설치 및 운영
 - 교육부 산하에 ‘국가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검토, 의결, 의견수렴 등의 장치로 활용
 - ‘국가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칭)’는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 전문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도록 방향 설정
 -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교육부 산하 기구로 설치하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기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을 처음부터 신설로 할 것인지 지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신설을 위한 예산 등의 소요가 부담될 경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 지방정부에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는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의 산하 기관으로서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구임.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군 단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시·군 단위에 설치할 경우 전국에 200-300개의 센터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초기에는 우선 광역시·도에서 설치하고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는 중앙정부 기구인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의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기구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지역 상황에 부합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계획과 실행도 주요 업무로 함

③ 추진 방식

- 원칙적으로는 ‘민주시민역량 함양 촉진법(가칭)’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칭)’,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법안 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교육부 자체 규정이나 기타 방식으로 기구를 설치·운영
- 주된 추진 부서는 교육부 산하 관련 부서에서 맡아서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상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생교육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운영

④ 기대 효과

- 민주시민교육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관련 사업 추진 체계 확보
-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의 상황에 부합되는 거버넌스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 조성
- 민주시민교육 계획 및 사업 실행의 중추 기관 마련을 통한 지속적 사업 추진

정책 과제 4: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① 목적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국가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② 과제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현황,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정보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 일반 국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민간기관의 담당자 등도 다른 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해외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신뢰롭게 획득할 수 있는 정부 운영 포털사이트 운영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산하 유관 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

④ 기대 효과

- 민주시민교육 정보의 체계적 제공
- 민주시민교육 실시 기관간의 정보 유통 강화
- 민주시민교육 참여 촉진

2.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학교는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 중요 기관 중에 하나이다. 정규교육과정이나 또는 비정규 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민주시민역량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등에 의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학교관련 정책이나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민주시민교과를 만들어서 편성하는 것, 학교 밖의 민주시민활동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학점으로 연계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과제 1: 민주시민교과 편성

① 목적

- 민주시민교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과서 개발

② 과제 내용

- 민주시민교육 정규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기존의 관련 교과에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규교과 시수 할당 및 인센티브 제공
 - 사회과 등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교과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관련 교과내용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시수를 결정
 - 민주시민교과 시수는 1주일에 3시간으로 하고 민주시민교과를 정규교과로 선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민주시민교과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는 민주시민교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민주시민교재 연구비 지급, 민주시민교육 실행보조비 지급,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
- 민주시민교과서 개발 및 보급
 -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민주시민교과서 개발 지원
 - 민주시민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관련 교과 교사의 교재개발위원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민주시민교과서 개발이후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과 현장연구 활동 지원, 민주시민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사연구회(학교단위) 운영 예산 지원 등의 방안 적용
- 타 교과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편성
 - 민주시민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연계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교과서에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해당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활동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포함
 - 예를 들어, 국어과의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와 관련된 교과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국어 소양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교과서에 포함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중심으로 민주시민교과 편성 관련 사업 추진
- 교육부의 민주시민교과 관련 예산 편성
-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과서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④ 기대 효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시간 확대
- 다양한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전방위적 적용 지원

정책 과제 2: 민주시민교육 활동 학점 인정제

① 목적

- 학교 내·외의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교과학점 연계
- 학교 내·외의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 평가 인정

② 과제 내용

- 학교 내·외의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점 부여
 - 학교 내에서 비정규교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사회과 또는 민주시민교과 영역에서의 학점으로 인정
 -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역사회 생태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평가하여 사회과나 민주시민교과 또는 관련 다른 교과의 일부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정규교과와 연계
 - 학교 밖에서 청소년이 시민사회단체, 기타 교육단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과나 민주시민교과 또는 관련 다른 교과의 일부 학점으로 인정
- 학교 내·외의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 평가 인정
 -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의 학점 부여를 위하여 관련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서류를 검토하여 민주시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방문 점검 등을 실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교 정규교과의 민주시민교과 학점 중 일부 학점으로 인정

③ 추진 방식

- 교육부에서 민주시민활동 및 교육의 학점 인정을 위한 기본 지침 마련
- 평가·인정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향후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가 설치될 경우 주요 사업 추진은 이 두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함

④ 기대 효과

- 학교 안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민주시민활동 활성화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활동 및 민주시민교육 참여 동기 부여
-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의 민주시민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3. 학교 프로그램 측면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정규교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또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정규교과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수 확보 등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정규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에 초점을 둔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이는 전문가 의견이나 주요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토론 등의 민주적 방식이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연극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학생 자치 활동 등이 보다 확대·강화되어 민주시민역량을 갖추기 위한 경험과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그 외의 체험중심의 방법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비정규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적용하는 국내외의 사례를 통하여 체험 활동의 효과성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하거나 한계를 지우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결과를 반추하면서 이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차·2차 보고서의 재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에게서 부족한 민주시민역량으로 나타난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상위 연령층과의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정책 과제도 제시하였다.

더불어 민주시민활동과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역량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주도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함께 민주시민활동을 준비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사항들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과제 1: 정규교과의 민주시민교육 교수방법 적용

① 목적

- 학교 정규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수방법 적용
- 민주시민교육 교수방법 적용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의 제공

② 과제 내용

- 토론, 역할극 등의 교수방법의 전 교과에서 적용하도록 지침 제공
 - 사회과나 민주시민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론, 역할극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 토론이나 역할극의 교과적용을 위한 우수사례 제공 및 학교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과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이 제공되기 위하여 토론이나 역할극 등의 방법이 적용된 우수사례 발굴 및 책자나 동영상 자료 제공
 -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연극을 개발하여 극단이 학교에 방문하여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연극을 상연하고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심 유도
 - 민주시민역량 강화 연극 프로그램이 초반에는 극단이 가서 보여주고 관람하는 형태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연극으로 꾸며서 발표회를 갖고 고민하는 등의 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우수사례집 개발 및 보급
- 지역의 극단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연극 방문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이 운영하는 민주시민연극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에서 관리하되 관련된 예산 지원 및 사업 관리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④ 기대 효과

-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을 통한 민주시민역량의 실질적 강화
-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참여적 학습 활동 강화
- 지역 극단 등 예술단체의 활성화 및 학교와 연계 강화

정책 과제 2: 학교농작물 재배 및 나눔 프로그램

① 목적

- 학교 내 도시농업 형태의 농작물 재배 프로그램 운영
- 재배된 농작물을 저소득층, 독고노인을 위한 먹거리로 전환하여 봉사활동 전개

② 과제 내용

- 학교 내 운동장이나 기타 부지를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로 활용
 - 신청학교 중 선발하여 학교농작물 재배 및 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함. 선정된 학교는 학교의 운동장 등의 부지를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으로 개간하고 관련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전개
- 지역주민과 학생의 공동재배 및 공유
 -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의 농작물 재배 참여하도록 하고 동시에 학교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농작물 재배반에 참여하도록 함
 - 재배된 작물의 일부는 재배에 참여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이나 식자재로 공유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 센터 등의 도움을 얻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농작물 재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산출된 농작물을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실시하도록 함
 -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직접 재배된 농작물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을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이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함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교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재정 지원 제공
- 시도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조관계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보 공유

④ 기대 효과

- 농작물 재배과정 참여를 통한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
- 지역주민과의 공동재배를 통한 청소년과 상위연령층의 소통 기회 확대
- 지역의 소외계층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시민으로서의 정신적 성숙, 타인에 대한 호혜성 등 민주시민역량 강화 기회 제공

정책 과제 3: 모의선거 프로그램

① 목적

- 모의선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교 단위 실시

② 과제 내용

- 주요 선거 시행 시기와 연계하여 학교 단위의 모의선거 프로그램 운영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지자체 장 선거 등의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실시 일주일 전까지 신청한 학교에서 동일한 모의선거를 실시
 - 학부모 및 학생들이 학교단위로 모의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의선거 공지, 투표인명부 작성, 선거 공고, 투표소 운영, 개표 진행 등 선거와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함
 - 투표용지나 선거인 명부 등은 실제 선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작되며, 이는 모의선거를 지원하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함
- 프로그램 진행 방법
 - 학교단위에서 모의선거 주관기관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여 모의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관련된 예산, 투표용지 등의 관련 서류 양식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
 - 모의선거를 학교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선거결과는 실제 선거가 종료된 이후 개표 및 선거결과공고를 하도록 함
 - 모의선거 실시 후에는 특정 시기까지 선거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모의선거 주관기관에 제출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교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 제공
- 향후 '국가민주시민교육진흥원(가칭)', '지역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가 설치될 경우 주요 사업 추진은 이 두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함

④ 기대 효과

-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 증진
- 미래 투표권자의 선거에 대한 경험 제공
- 선거 등의 주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관심 유도

정책 과제 4: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① 목적

-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전개

② 과제 내용

-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 마련
 - 학교 학생 자치회에서 학교의 문제점이나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해결방안의 실제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학생 자치회는 전교생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진행
 -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학교 운영 문제, 지역사회에서의 환경문제,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의 눈으로 찾고 이를 학생자치회의 안건으로 상정
 -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공개토론 및 학생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더불어 결정된 해결방안이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되도록 함. 지역사회문제라면 해결방안을 지역의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해결방안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지원
 - 교육청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안된 해결방안이 실제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교육청이나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방안 중 우수한 경우 시상이나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및 실시

③ 추진 방식

- 학교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지원 제공

④ 기대 효과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의식 강화
-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시민으로서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 유도

정책 과제 5: 전통문화 보존 활동 프로그램

① 목적

- 학교에서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및 홍보 활동 실시

② 과제 내용

- 학교 단위에서 지역 전통문화 보존 활동 프로그램 실시
 -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주요 전통문화, 문화유산, 역사적 자료나 장소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 문화유산 등의 직접 체험 기회 제공, 문화재 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 참여 등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재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청소년들이 구상하는 ‘우리 문화재 알리기’ 사업 진행. 이 사업에서 신청한 학생들이 지역 문화재를 홍보하고 가꾸기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이 기획된 안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심의하여 선정함. 선정된 방안은 이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도록 함

③ 추진 방식

- 학교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지원 제공

④ 기대 효과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강화
-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차세대 관심 유도

4.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평생교육 영역은 학교 영역과 함께 청소년과 성인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이다. 평생교육 영역은 학교와는 달리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할 수 있다. 이런 특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법이 나타나는 영역이 평생교육 분야이다. 민간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하기 쉽지만 질적 관리, 지역상황 반영, 학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이 과제로 지목된다. 질적 관리는 민간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운영하는 기관의 상황의 열악성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의 차원에서 질적 관리와 제고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재정이나 시설에서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수한 민주시민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관리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체험 방식, 지역 자원의 활용, 학생의 주도적 참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발전 등이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학교 정규교육 학점과 연계 등을 통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민간평생교육기관과 학교의 관계는 갈등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창의체험 프로그램, 보육기능 강화 등으로 인해 민간평생교육기관과 학교는 학생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경쟁 관계에 놓이기 쉽다. 민간평생교육기관이나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오후나 저녁 이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인근 학교와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시설 공유, 교육프로그램 공유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반대로 경쟁적 또는 갈등적 관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학교나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등은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아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입시위주교육 등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들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과제 1: 민주시민교육기관 인증 및 학점 연계

- ① 목적
 - 평생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질 관리
 -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정규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학점 부여

② 과제 내용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이외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하여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인증하고 프로그램에 인정
- 기관 단위로 인증을 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하는 것이 보다 상세한 평가 및 질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재검토
- 프로그램 단위로 인정하기 위하여 교육방법과 내용, 지역 자원의 활용, 학생의 주도적 참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 후 학교 정규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 평가·인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의 민주시민교과나 관련 교과외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하도록 하여 이후 진학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사업을 공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

④ 기대 효과

-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활동 증가
-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부담 경감

정책 과제 2: 학교-지역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① 목적

- 학교와 지역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② 과제 내용

- 하나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서 학교와 지역관련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설 등도 공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학교와 지역관련 기관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일부는 학교에서 일부는 지역관련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
 - 예를 들어, 월, 수, 금 오후에는 지역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체험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화, 목 오후에는 학교에서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이론적 학습 진행

- 학교와 지역관련 기관의 시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관이나 지역관련 기관의 시설을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사업을 공지하고 학교와 지역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선정 및 이후 진행 관리

④ 기대 효과

- 학교와 지역관련 기관의 협력적 관계 유도
-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자원의 활용 활성화
- 지역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질 향상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성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주제로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체계성은 앞서 논의한 평가·인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일부 보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체험의 방식을 장점을 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높게 평가되는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생교육 영역 중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공공기관 중에는 제한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이 원래

기능이 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와 효과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국내의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들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과제 1: 민주시민역량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① 목적

- 차별적 수준을 보이는 민주시민역량에 따라서 차별적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과제 내용

- 한국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는 민주시민역량(민주주의 의식, 민주적 절차 및 권리,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부의 민주성,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등)의 경우 체험과 참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체험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가칭)’ 추진
 - 지원받기 위하여 해당 영역(민주주의 의식, 민주적 절차 및 권리,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부의 민주성,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함
 - 교육내용의 질적 우수성과 함께 지원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참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계획 및 의사결정, 지역사회에서의 경험과 참여를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활용 등을 선정 지표로서 고려해야 함
- 한국 청소년에서 낮게 나타나는 민주시민역량(도덕성과 정신적 성숙,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상위 연령층과의 소통 등)의 경우 기본적인 학습과 기초적인 체험 등으로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고려. 이에 ‘기본 역량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가칭)’ 추진
 - 이 사업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방법도 중요하지만 부족하고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민주시민역량이라는 점에서 주요교육내용(도덕성과 정신적 성숙,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상위 연령층과의 소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위한 토론 등의 교수방법을 중요요소로 반영

③ 추진 방식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사업을 공지하고 신청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 선정 및 이후 진행 관리

④ 기대 효과

-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간의 차별적 수준 보완
- 민간기관 등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실행 유도

정책 과제 2: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① 목적

- 공공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기능 강화하도록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
- 공공기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증가 및 학교, 민간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② 과제 내용

- 입법부, 사법부, 각종 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체계성을 갖고 확대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
 - 각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국가 수준에서의 전체적인 운영 전략이나 방향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공공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종류나 프로그램 수 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협의회(가칭)’를 구성
 - 이 협의회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중요 민주시민교육 실시 기관의 장이나 실무진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 및 방안 마련
- 방문 형태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가칭)’ 마련
 -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가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방문뿐만 아니라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체험 중심 교육 등으로 다양화되고 참여하는 청소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사업비 지원, 민주시민교육 백서 발간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포함
 - 또한 공공기관에서 학교나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 운영 등을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가칭)’의 주요 요소로 포함하여 추진

③ 추진 방식

-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등의 협조를 얻어서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협의회(가칭)’,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가칭)’ 등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

④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 공공기관 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 유도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민주시민 협력 강화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혜, 양승실, 유성상, 박현정. (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대봉. (2003). **인적자원개발의 개념변천과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서울: 원미사.
- 구혜정. (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2 '가사토' 사업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b).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과천시. (2012). **2012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자체점검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김기현. (2010).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0 민주시민교육공동세미나 자료집**, 2010.12, 51-56.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술. (2005). **정치참여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2004). 한국사회 시민의식 실태와 교육적 함의: 비판의식 및 다양성, 존중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1(3), 333-354.
- 김태준, 이영민.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이영민. (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2011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참가안내**.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방법 연수 안내**.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2013 교사직무연수 안내**.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문에 없음.
- 박은중. (2007).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 방향 모색. **敎育研究**, 21, 39-71.
- 박성업. (2004). **고등학생들의 학교급별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희봉, 이희창. (2010).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1-29.
- 법제처. (2013). **청소년법제관, 이렇게 활동합니다**. 전자책. 서울: 법제처.
- 사람과 마을. (2012). **2012 성미산마을**. 서울: 성미산마을 내부자료.
- 삼성꿈장학재단. (2013e). **2013 배움터지원사업 워크숍 자료**. 서울: 삼성꿈장학재단 내부자료.
- 성미산학교. (2012). **성미산학교 2012년 1학기 교육과정 알림알이**. 서울: 성미산학교 내부자료.
- 성미산학교. (2013). **성미산학교 2013년 1학기 교육과정**. 서울: 성미산학교 내부자료.
- 손경애. (2012).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경영과 정보연구**, 31(2), 115-142.
- 신미식. (2011). 한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61, 219-242.
- 이강빈. (2009). 민주시민의식으로서 공정성에 관한 도덕교육적 의의: 중등도덕교과교육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29, 345-366.
- 이연옥. (2010).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51-76.
- 작전초등학교. (2012).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인천: 작전초등학교 내부자료.
- 작전초등학교. (2013). **2013학년도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공모 제안서**. 인천: 작전초등학교 내부자료.
- 전기호, 이병규, 박헌준. (2010). 사회적 네트워크, 협조적 행동,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 **한국인사조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1-23.
- 전선영. (2011).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 785-799.
- 조진만. (2010). 민주시민의식과 투표참여: 정치교육에 대한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85-104.
- 조찬례, 이한규, 조지현. (2011).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 및 관련법안 연구**. 대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철민. (2007). 미국의 시민교육을 느끼다: LA지역 민주시민 교육기관 방문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식**, 12월호, 24-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a).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2013-3호.
- 지은림. (2007). 대학생용 지구시민의식 척도 개발의 타당화 및 관련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0(2), 151-172.
- 최길한. (2003).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적 지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풍납중학교. (2012a). **2012 인성교육실천 법제교육연구학교 보고서**. 서울: 풍납중학교
- 풍납중학교. (2012b). **2012 인성교육실천 연구학교 우수사례 발표**. 서울: 풍납중학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b). **2013 학교문화 개선 연구·선도학교 2차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환경보전협회. (2011). 해외 선진 환경교육 사례 및 국내 적용방안. **Policy & Issues 기획특집**, 4, 24-27.
- 현영섭. (2011). **HRD 핵심지식**. 서울: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출판부.
- 현영섭. (2012). 재개발 지역 중고령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해체와 평생교육요구. **평생교육학연구**, 18(1), 23-50.
- 현영섭. (2013). 2012 '가사토'사업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서울: 한국평생교육진흥원.
- 홍영란, 박영범, 장원섭. (2003).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전략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김태준, 조영하, 박희봉, 양정호. (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현영섭, 정혜령. (2008). **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제 비교 연구: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현영섭. (2009).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 교육청. (2013.9.16). “체험한다. 교과서 속 민주주의 현장.”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3a.9.3). 인권교육 월별 교육일정: 2013 하반기.
http://edu.humanrights.go.kr/01_sub/body01_2.jsp(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2013b.9.3). 2013년 인권교육 종합계획(안).
http://edu.humanrights.go.kr/01_sub/body01_3.jsp(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6.10). 교육기본법 2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08&efYd=2013032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a.9.3). 청렴교육연구학교란?
<http://www.acrc.go.kr/edu/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10070101>(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3b.9.3). 우수사례.
<http://www.acrc.go.kr/edu/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10070201#>(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 국회의정연수원. (2013a.9.4). 연수안내.
http://training.assembly.go.kr/new/training_info/cTrainingList.jsp(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 국회의정연수원. (2013b.9.4). 다문화가정 어린이 국회체험.
http://training.assembly.go.kr/new/training_info/cTraining05.jsp(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 국회의정연수원. (2013c.9.4). 2013년 다문화가정어린이 국회체험안내.

- http://training.assembly.go.kr/new/training_info/cTrainingView.jsp(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 교육과학기술부, (2012a.9.4).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정.
- <http://www.moe.go.kr/web/100020/ko/board/view.do?bbsId=141&pageSize=10¤tPage=1&encodeYn=Y&boardSeq=28167&mode=view>(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과학기술부. (2012.10.2).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본격 추진.” 보도 자료.
- 교육부. (2013.4.30).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우리가 만듭니다.” 보도자료.
- 대구YMCA. (2013a.9.5). 주요활동/청소년운동. <http://www.tgymca.or.kr>(대구YMCA 홈페이지)
- 대구YMCA. (2013b.9.5). 주요활동/시민사회개발. <http://www.tgymca.or.kr>(대구YMCA 홈페이지)
- 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a.9.5). 어린이 마당홀.
<http://www.scourt.go.kr/kids/index.html>(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b.9.5). 법교육.
<http://www.scourt.go.kr/kids/edu/edubook/index.html>(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c.9.5). 사이버 견학.
<http://www.scourt.go.kr/kids/about/video/index.html>(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대법원 어린이 마당홀. (2013d.9.5). 관람안내. 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ids/about/about_around/tour/index.html(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2013a.9.5). 연혁.
http://child.assembly.go.kr/child/child_5.jsp(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2013b.9.5). 추진체계.
http://child.assembly.go.kr/child/child_4.jsp(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 도서관운동연구회. (2002). Karen, V. M. 저(1998).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서울: 한울.
- 동아일보. (2013.5.13).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한데 인성교육 확대.”
- 민병모 외 역. (1998). Spencer, L. M. & Spencer, S. M. 저.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서울: PSI 컨설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사업회, 미국 시민교육센터(CCE)와 ‘시민교육 세계의회 한국

- 개최' 공동노력 양해각서 체결.
<http://www.kdemo.or.kr/ko/notification/notice.html?uid=84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a.9.25). 미션/비전.
<http://www.kdemo.or.kr/ko/about/vision>(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b.9.25). 교육사업.
<http://www.kdemo.or.kr/ko/about/education>(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사이버 의정체험. (2013a.9.5). 사이버 의정체험이란?.
<http://youth.assembly.go.kr/index.jsp>(어린이국회 홈페이지)
- 사이버 의정체험. (2013b.9.5). 입법활동.
<http://youth.assembly.go.kr/legislation/index.jsp>(어린이국회 홈페이지)
- 사이버 의정체험. (2013c.9.5). 정당활동.
http://youth.assembly.go.kr/political/political_index.js(어린이국회 홈페이지)
- 삼성꿈장학재단. (2013a.9.9). 설립취지.
http://www.sdream.or.kr/about/about_01_02.jsp(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 삼성꿈장학재단. (2013b.9.9). 사업개요.
http://www.sdream.or.kr/work/work_02_03.jsp(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 삼성꿈장학재단. (2013c.9.9). 배움터교육지원사업.
http://www.sdream.or.kr/work/work_03.jsp(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 삼성꿈장학재단. (2013d.9.9). 2012년 사업지원현황.
http://www.sdream.or.kr/work/work_06_2012.jsp(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울YMCA. (2013a.9.9). 전국 YMCA. <http://www.seoulymca.or.kr>(서울YMCA 홈페이지)
- 서울YMCA. (2013b.9.9). 주요 사업. <http://www.seoulymca.or.kr>(서울YMCA 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b.9.9). 업무범위. <http://www.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a.9.9). 조직 및 기능. 웹사이트
<http://www.civicedu.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b.9.9). 교육·연수계획.
<http://www.civicedu.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3c.9.9). 교육·연수과정 소개.

- <http://www.civicedu.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프라이부르크시. (2012.9.9). 2012 에코모빌 연례보고서.
<http://www.rp.baden-wuerttemberg.de/servlet/PB/show/1345678/rpf-oekomobil-jahresbericht2012.pdf>(프라이부르크시 에코모빌 신청 홈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http://edu.kdemo.or.kr/>
 성미산학교. <http://www.sungmisan.net/index.php>
 에월고등학교. <http://www.aewol.hs.kr>
 프라이부르크시 녹색도시.
http://www.fwtm.freiburg.de/servlet/PB/menu/1182949_l1/index.html
 프라이부르크시 에코모빌 신청.
<http://www.rp.baden-wuerttemberg.de/servlet/PB/menu/1190439/>
 프라이부르크시 에코스테이션. www.oekostation.de.
- 經濟産業省. (2006). 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と経済社会での人々の活躍についての研究会 報告書.
 水山 光春. (2010). 本における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実践の動向と課題. 京都教育大学教育実践
 研究紀要 第10号.
 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a). 教育実践指導研究会発表要項.
 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4b). 市民.
 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小学校. (2009). 平成20年度(1年次) 研究開発実施報告書: 小学校にお
 ける「公共性」を育む「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の内容・方法の研究開発.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연구개발학교 지정제도)
http://www.mext.go.jp/a_menu/shotou/kenkyu/index.htm,
- Aldridge, S., Halpern, D. & Sarah F. (2002). *Social capital: A discussion paper*. London: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 Amadeo, J., Torney-Purta, J., Lehmann, R., Husfeldt, V. &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n IEA study of upper secondary students in sixteen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 Achievement.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241-258). New York : Greenwood Press.
- Campbell, D. (2006). *What is education's impact on civic and social engagement? Measuring the effects of education on the health and civic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Copenhagen Symposium.
- Carcach, C. & Huntley, C. (2002).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gional crime.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222,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Canberra.
- Cogan, J. J. (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London: Kogan Page.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 The Free Press.
- Fry, S. W. & Bentahar, A. (2013). Student attitudes towards and impressions of Project Citizen.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4(1), 1-23.
-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MA.: Polity Press
- Korbin, J. & Coulton, C. (1997). *Understanding the neighborhood context for children and families : Combining epidemiological and ethnographic approache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Kymlicka, W. & Norman, W. (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North, D. (1990).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5a).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s of the adults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Paris: OECD.
- OECD. (2005b).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Paris: OECD.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D. R., et al. (2000). *Saguaro report: Saguaro seminar on civic engagement in America*. US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 Shuller, T. (2002). *Integration human/knowledge capital and social capital*. OECD/DfES/QCA/ESRC seminar. London: Oxford University.
- Uphoff, 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CCE. (2008). Project citizen: Level 1.
<http://www.scribd.com/doc/48667350/Project-Citizen-Level-1-Textbook>
- CCE. (2010). Project citizen: Level 2.
<http://www.scribd.com/doc/49415417/Project-Citizen-Level-2-Textbook>
- CCE. (2012). 2012 annual report.
<http://new.civiced.org/images/stories/About/AnnualReports/2012annualreport.pdf>
- CCE. (2013a). About Us. <http://new.civiced.org/pc-about-us>.
- CCE. (2013b). Center for civic education brochures: Project Citizen.
<http://new.civiced.org/images/brochure/brochure-projectcitizen.pdf>
- CCE. (2013c). Course study.
<http://new.civiced.org/pc-program/instructional-component/course-study>.
- CLP. (2006).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economic impact study.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economicimpact/CLPCommunityImpactFinalReport.pdf>
- CLP. (2012a). 2012 Annual report.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annualreport/2012/AR_2012.pdf
- CLP. (2012b). The library & you: The next five years.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strategicplan/meetings/FebPublicMeeting.pdf>
- CLP. (2013a). clp LYNCS.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lyncs/?utm_source=homepage&utm_

medium=icon&utm_campaign=lynycs

CLP. (2013b). Life. <http://www.carnegielibrary.org/teens/life/>

CLP. (2013c). Mission & vision.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mission.html>

CLP. (2013d). Affiliated organizations.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affiliated.html>

CLP. (2013e). Board of trustees.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trustees/>

CLP. (2013f). Management team.

<http://www.carnegielibrary.org/about/management.html>

EAC. (2010). Help America Vote Mock Election Program.

http://www.eac.gov/payments_and_grants/help_america_vote_act_mock_election_program.aspx

FWTM. (2013). Freiburg. (프라이부르크 녹색도시).

http://www.fwtm.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Hear Me. (2013a). About. <http://www.hear-me.net/about>

Hear Me. (2013b). Hear Me 101. http://www.hear-me.net/hearme_101

Illinois State Board of Elections. (2012). Mock Election 2012.

<http://www.elections.state.il.us/downloads/VotingInformation/pdf/Mock.pdf>

National Student Mock Election. (2013a). About us. <http://nationalmockelection.org>

National Student Mock Election. (2013b). Elementary school lesson plans: Introduction.

<http://nationalmockelection.org/>

Texas Secretary of State. (2012). 2012 Texas presidential student mock election.

<http://www.sos.state.tx.us/elections/projectvote/pdfs/2012-presidential-mock-election.pdf>



부 록

- 부록 1. 국내외 우수사례 면담지
- 부록 2. 의견조사 설문지

부 록

1. 국내외 학술사례 면담

1) 유비학교 청소년프로그램 면담질문지

본 면담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연구과제인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유비학교에서 실시하는 충효전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면담과정은 녹취될 수 있으며,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상 질문

- (1) 유비학교의 연혁과 그 동안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해주세요.(기관배경)
- (2) 유비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기관프로그램)
- (3)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충효전 관련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시작하신 배경)
- (4) 충효전 관련 생태환경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요?(프로그램 내용)
- (5) 충효전 관련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추진체계)
- (6)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지요?(지역사회 연계)
- (7) 충효전 관련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사업의 성과)

- (8) 아동 및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조언)

2. 의견조사 설문지

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견조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의 구축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교 밖에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신상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조사지는 0월 00일까지 이메일 주소(muhan1@kedi.re.kr)로 보내주시시오.

다시 한 번 조사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홍영란 드림
문의 : 박요한(02-3460-0225 / muhan1@kedi.re.kr)

I.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__① 남 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__① 20대 __② 30대 __③ 40대 __④ 50대 이상
3. 귀하의 근무기관은?
__① 초중등학교 __② 대학 __③ 연구기관 __④ 평생교육기관 __⑤ 기타()

II.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향상을 저해하는 교육 분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III.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IV.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V.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혹은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VI.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bstr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Korea tends to focus on the maturity of phys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quality of life, happiness, and community spirit. In addition, in Korean society, moral life and law abiding spirit such as norm observance and corruption eradication are intensified. With this development direction, the effort to improve the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youth is necessary. However, still now, educational effort to increase the capacity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youth is not systematically made, and sufficient base and systems are not formed. Schools focus on entrance exams and are operated in an undemocratic way so that the opportunity of giv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youth is restricted. In local societies, some educational institutes operate programs to improve their civic competency, but, unfortunately, most youth cannot participate in them. Under the situations, this study as the 3rd-year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to generally analyze and diagnose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ir problems, shown by the 1st- and 2nd-year research results, analyze the status of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of domestic civic competency, the program cases of civic competency home and abroad, and the survey result of opinions of civic competency, and suggest the method of building a support system for education field to strengthen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political problem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analysis, case analysis,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meeting & seminar, and experts conference to achieve its aim. First, it reanalyzed the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1st- and 2nd-year

research projects to aggregate the research result and supplement insufficient analysis, and performed literature analysis to analyze the status and support system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six domestic cases and five foreign ones are selected and analyzed to analyze good cases in relation with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grams and of institutions. This analysis included the one of the interviews with people of the organizations and interview description. Furthermore, opinion survey targeting experts and officials in related fields and its analysis were don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litical direction and project. Academic experts, school teachers, and people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opinion survey.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xperts meeting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ere selected and political opinion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 is drawn.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atus and support system in relation to education for improving the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schools give democratic civic education, but it is operated as a mere formality or restrictively. In addition, in case of organizations other than schools, the education is conducted mainly led by civil groups or public institutions, but it is not systematic and just some youth can join the programs.

Second, according to the re-analysis of the 1st- and 2nd-year reports, Korean youth show relatively high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n social and political rights, right to vote, right and method of political protest, objection against handling public affairs by connections, democracy of government, punishment against illegal or immoral activities of politicians or their families, pursuit of honest, openness, and inquiry. However, as a desirable citizen, they have low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n the necessity of morality and mental maturity,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communication with older aged people.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ood cases home and abroad, various programs are operated with diverse education methods. In particular, education programs in a

type of work study are focused. In addition, legal evidence and promotion system for systematically conduct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across the nation are formed and operated. The link between a local society and schools is stressed so that they can allow youth in the region to improve their civic competency. Finally, the important thing is to give an opportunity for youth to express and think about their civic competency in their life rather than the enhancement of their competency just through lectures or education programs.

Fourth,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opinion survey, similar result to the above description is shown. It is pointed out that the culture and system construction for improving civic competency are needed in school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hat regular school curriculum should strengthen or form a class for democratic citizen, and that people can earn credits through the programs operated by education institutions in a local society to link with a regular school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 the following policies are proposed.

First, in terms of policy and system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of civic competency model, the enactment of laws to improve civic competency, the creation of central organization to promote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the operation of a portal site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re needed.

Second, in terms of school policy and system, the formation of a class for democratic citizen, and the credit transfer system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re needed.

Third, in terms of school program, the application of a teaching method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s a regular class, and the operation of programs of growing crops in a school and sharing them and that of mock election programs, resolution programs against problems of school and local society, and activity programs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e are needed.

Fourth,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system, the certific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stitutions, the credit transfer system, and the support project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between school and local society are needed to improve civic competency in organizations other than schools.

Finally,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e program support project of each civic competency and the increase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are needed.

Key words: Civic Competency,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mation of Class for Democratic Citizen, Credit Transfer System, Portal Site for Democratic Citizen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정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 이종원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I: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I: 2013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I: 교육분야 지원 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운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서정아·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김형주·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이유진·한상철·추승연·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이창호·최금해·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황진구·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황진구·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킹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김지연·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배상률·강영배·김정주·김혁진·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김경준·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오해섭·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현철·김희진·김인아·김재근·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김영지·김희진·송인숙·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김영지·김현철·박정수·박지만·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트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연구보고 13-R15-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41-0 (94330)

978-89-7816-835-9 (세 트)